

2005.11

특 집 2006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

|경제정책해설|

-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
-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지원
- 벤처기업 요건 및 확인제도 개편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도입

|이달의 초점|

우리 證市의 선진시장 도약 가능한가?

|세계경제의 현장|

- OECD의 세계무역 관련 논의동향
- WTO/DDA 비농산물 분야 시장접근 협상 동향 및 전망

|인터뷰|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기업정보|

- 골프장 공사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 표현대리에 의한 연대보증책임 성립 여부

|글로벌 포커스|

- 규제개혁과 경제성장
- OECD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나라경제

2005. 11 통권 제180호



2005년 10월호

| 인터뷰 |

05 변양군 기획예산처장관

| 특집 |

2006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

- 12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주력 / 노형욱
- 16 R&D 투자 확대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 이인우
- 21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 구현 / 고훈수
- 26 산업기술개발 역량 강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 김영환
- 29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 황해석
- 32 선진환경국가 건설 위한 환경투자 확대 / 박희정
- 36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등 국정과제 중점 추진 / 강희업
- 40 동북아 물류중심 구축과 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 / 박인섭
- 44 지방재정력 확충 통해 국가균형발전 적극 지원 / 송언석
- 48 기금운용, R&D 투자 및 고용·서민주거 안정 등에 역점 / 김상규

| 이달의 초점 |

우리 證市의 선진시장 도약 가능한가?

- 54 장기·간접 투자문화 정착시켜야 / 옥치장
- 57 정책일관성 유지로 투자여건 개선을 / 연강훈
- 60 증권 관련 제도개선·규제완화 필요 / 오현석



우리 산야에 피는 꽃 **싰품**

4쪽

| 해외시장 리포트 |

63 폴란드편 : 중동부 유럽의 최대 시장 / 오세광

| 경제정책해설 |

- 68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 / 이동진
- 71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 최대순
- 75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지원 / 최남호
- 79 벤처기업 요건 및 확인제도 개편 / 김성섭
- 83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도입 / 서명교
- 88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 김순중

| 글로벌 포커스-규제개혁 ② |

- 91 규제개혁과 경제성장 - OECD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 안상훈
- 97 OECD 규제개혁 보고서 : 아일랜드 / 구균철

| 기업정보 |

- 101 환경분쟁 조정사례 ⑥ : 골프장 공사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 임성재
- 105 금융분쟁 조정사례 ④ : 표현대리에 의한 연대보증책임 성립 여부 / 정준아

| 정책이 홍보다! ④ |

- 108 무한 소재를 찾아라 / 김덕만

| 세계경제의 현장 |

- 112 OECD의 세계무역 관련 논의동향(上) / 이혜민
- 115 WTO/DDA 비농산물 분야 시장접근 협상 동향 및 전망 / 안창국
- 120 생활경제 주식투자는 OK, 그러나 주가지수가 부담될 때에는... / 한상언
- 122 주요 경제지표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김중수 KDI 원장
편집인 육동한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편집위원

재정경제부 진양현 정책상황팀장
 외교통상부 전비호 통상기획홍보팀장
 과학기술부 강영철 종합기획과장
 농림부 김선영 행정법무담당관
 산업자원부 조성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부 김용수 혁신기획관
 보건복지부 이상영 재정기획관
 환경부 김학주 정책총괄과장
 노동부 박광일 재정기획팀장
 건설교통부 정병윤 기획총괄담당관
 해양수산부 오운열 재정기획팀장
 기획예산처 노형욱 중기재정계획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총괄정책과장
 금융감독위원회 서태중 기획과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진형 총괄조정팀장
 행정자치부 안세경 재정정책팀장
 KDI 경제정보센터 김인철 정책홍보실장
 편집간사 김재신 재정경제부 정책상황팀

편집장 강영목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기자 이재열, 이윤우, 이정미
배포업무 신정자, 안현희

발행일 2005년 11월 1일(매월 1회 발행) 제16권 제11호(통권 제180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라 04859호)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77-8033 11
주소 (130-012)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130-650)서울 청량리우체국 사서함113

전화 02-958-4114

팩스 02-3295-0744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e-mail nara@kdi.re.kr

기사문의 02-958-4652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318

구독료 권당 2,500원, 연간 25,000원

인쇄 고려문화사 2277-1509

『나라경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쓴 풀

[*Swertia japonica*(SCHLT.) MAKINO]



쓴풀은 당약(當藥)이라는 약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옹담과의 한해 혹은 두해살이 약용 풀이다.

우리 땅의 우리 식물로, 중부 이남 지방 산과 들의 길가 풀밭에서 주로 자란다. 높이 15~30cm이고 원줄기는 약간 네모난 모습을 하고 있다. 자줏빛이 돌아 자주쓴풀과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털이 없고 맛맛한 것이 다르다. 강한 쓴맛 때문에 쓴풀이란 이름이 지어졌으며, 뿌리는 건위재·지사제 등의 약으로도 쓰인다.

잎은 마주 달리고 잎자루는 없으며, 선형, 넓은 선형 또는 깨꼴피침상 선형으로 가장자리가 약간 뒤로 말린다. 9~11월에 연한 자주색의 별모양 꽃이 피고, 짙은 맥(脈)이 있으며 밤이면 오프라든다.

늦은 가을 찬서리가 내리는데도 풀밭에서 가녀린 꽃을 피우는 모습이 종족보존을 위해 단 한 그루라도 더 번식하려고 애쓰는 듯하다.

글·사진 / 김태정 한국야생화연구소장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대담 전주성(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시 2005년 10월 17일

장소 기획예산처장관 집무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라는 중요한 두 가지 과제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선진한국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아끼고 효율을 높여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

▲2006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6.5% 정도 증가한 221조원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짰는지 궁금합니다.

- 내년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편성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분야별 공개토론회를 13회 개최하고 국무위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1박 2일간 재원배분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국회 예결위 등에 사전보고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세출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10%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가 221조4천억원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6.5%에 비해, 육아지원은 42.5%, 고용서비스 선진화는 156.0%,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72.0% 증가하는 등 획기적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6.5% 수준 증가하는 것을 두고 최근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팽창예산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지출을 늘려 잡을 수 있겠지요. 문제는 지출의 절대액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기조라 하겠습니다.

최근, 확장기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경기과열을 우려해 다소 긴축기조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떤 기조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 올해 성장률은 3.8%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점차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기회복 흐름에 재정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은 경기 중립적인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총지출 증가율 6.5%는 경상성장률 7.5%보다 낮은 수준으로 팽창예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할 때 지표로 삼는 통합재정수지로 보면, GDP 대비 +0.3% 수준으로 오히려 약간 긴축적인 측면이 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3%로 다소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GDP 대비 ±1% 수준은 균형 수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은 경기 중립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세수부족을 예상하여 9조원 수준의 국채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의 증가속도는 우려할 정도로 빠른 느낌을 줍니다. 또한 복지지출이나 통일비용 등으로 구조적 재정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건전성의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채무 수준은 아직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1997년 이후 외환위기 극복과 최근 환율안정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6년까지 공적자금 손실분 49조원을 국채로 전환하는 계획이 마무리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 말 IMF 기준 26%로 미국 63%, 일본 158%, 영국 44%, OECD 국가평균 76.4%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면 건전한 수준으로 보는 유럽의 기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달러로 자산을 함께 갖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과 같이 세금으로 갚지 않는 금융성 채무가 전체 채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IMF·S&P·무디스 등은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 수준으로, 관리대상수지는 균형 수준인 $\pm 1\%$ 이내에서 운영하는 등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책임한 감세 주장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세정책을 언급하셨는데, 저 역시 적자재정과 국가채무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세금 삭감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러한 세금 삭감이 서민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층을 겨냥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경제주체의 의욕을 고취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감세는 경기효과는 낮으면서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최근 기업의 자금이 풍부하여 세금을 조금 낮춘다고 투자가 확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감세의 혜택을 주로 보는 고소득자의 한계소비성향도 낮아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득세 납세자 비율이 51%에 불과해 국민의 절반은 감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것은 고세율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경제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감세효과는 불투명하면서 대규모 재정적자만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재정정책은 직접적인 소비·투자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국민부담률 수준을 감안할 때 재정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지출을 늘리면 당장의 총수요 증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 역시 민간 경제주체의 소비·투자 유인으로 바로 이어질지는 단정할 수 없겠지요. 세금 삭감 주장이 일반인들에게 먹힐 수 있는 것은 경기회복이 더디지며 정

부가 하는 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탓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내년도 국민부담률의 경우 미국과 일본 수준을 능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국제비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우리의 경제성장 수준을 생각할 때 국민부담률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다섯 번째, 국민부담률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2006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7%입니다. 2003년 기준으로 미국은 18.6%, 프랑스 27.5%, 영국 28.9% 스웨덴 36.1%, 덴마크는 47.3%이고, 2002년 기준으로 일본은 15.9%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세금을 낮춘 대신 국채를 많이 발행하여 재정적자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4년 기준으로 158%에 달하고 있어 미래세대에 많은 부담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소득 1만달러 진입 당시와 비교해도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채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조세부담률이 높고 낮음의 문제보다는 국민세금으로 모인 재원을 무슨 일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규모는 특정 국가의 세입능력과 세출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크지요. 이에 대한 평가도 결국 국민세금을 얼마나 정부가 잘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증원, 각종 위원회 증설 등 정부규모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 올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의 방만한 지출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구조조정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에 이러한 노력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정부도 사업비·인건비·경상경비 등 모든 세출예산 분야에서 최대한 아껴 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재원배분 12대 원칙,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축소함으로써 재량적 지출의 9.3%에 해당되는 4조2천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05년 동결했던 점을 감안하여 2006년에는 처우개선 3%만 최소한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공무원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 올 7월까지 총 2만2,422명을 증원하였으나, 교원·경찰·집배원 등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인력증원이 77%를 차지합니다.

경상경비는 올해 안으로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비목별로 7~10%를 절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업무추진비를 20% 감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렇게 지출을 아끼는 방식만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대비, 양극화 완화,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의 재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우리 경제가 3년째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잠재성장률도 하강 추세에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성장잠재력 확충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보면 SOC, 산업·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 지출 증가율이 복지관련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장보다는 분배 중심의 예산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습니다.

-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고도성장을 견인하였지만,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충분히 성숙되면서 경제운용 방식이 상당 부분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총 지출 대비 경제 분야 지출 비중은 2005년도에 19.7%로 OECD 국가평균 9.5%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경제 분야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초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하여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 분야 예산 증가율이 낮다고 해서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는 성장, 복지 분야는 분배'라는 관념적 이분법보다는 구체적 내용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복지예산에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예컨대, 육아지원은 저출산에 대응함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을 도와 노동공급을 확대합니다. 고용서비스 선진화는 고용안정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고용증대 효과를 함께 가져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6.5%임에 비해 육아지원,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등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획기적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만성적 세수부족, 국채발행 관행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남북협력 등 막대한 재원소요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채무를 함께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수기반 확대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 데 반해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OECD 국가평균 41%에 크게 미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 활용(BTL), 세출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알뜰하게 아끼는' 종전의 방식은 미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은 결국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세입재원인 조세수입이 늘어나야 합니다.

경제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증가만으로 미래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1970~1990년대와 같은 고성장이 불가능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조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어 이제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나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경제활동인구는 2015년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5년 이내에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든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라는 중요한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선진한국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아끼고 효율을 높여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도 선진국 진입을 위해 이에 따르는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 아픈
예방주사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전염병의 70%가 예방됩니다**

콜레라, 감기, 눈병, 식중독 등 전염병의 70%는 손을 통해 전염됩니다.
손만 깨끗이 씻어도 70%의 전염병이 예방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 아픈 예방주사, 손 씻기는 또 하나의 백신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



- 12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주력 / 노형욱
- 16 R&D 투자 확대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 이인우
- 21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 구현 / 고학수
- 26 산업기술개발 역량 강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 김영환
- 29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 황해석
- 32 선진환경국가 건설 위한 환경투자 확대 / 박희정
- 36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등 국정과제 중점 추진 / 강희업
- 40 동북아 물류중심 구축과 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 / 광인섭
- 44 지방재정력 확충 통해 국가 균형발전 적극 지원 / 송언석
- 48 기금운용, R&D 투자 및 고용·서민주거 안정 등에 역점 / 김상규

정부는 지난 9월 27일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내년 나라살림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짜여졌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註>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주력



노형욱 기획예산처 중기재정계획과장
(nohho@mpb.go.kr)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을 망라한 총지출 규모는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이다. 중장기적인 국가비전과 국정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고, 민간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민간이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예산 총액 배분 자율편성(Top-Down),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제도 도입,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 참여정부의 4대 재정개혁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성되어, 이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난해에 처음 수립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해 연동계획인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고, 2006년 예산편성시 지출한도 설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정 우선순

위에 따른 전략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5년 예산편성시부터 헌법기관을 제외한 전 부처로 확대하여 적용하기 시작한 예산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로 인해 그동안 전년 대비 30% 안팎으로 과다하게 예산이 요구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요구 규모가 2005년에 5.5%, 2006년은 7.1% 등 한 자릿수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내년 나라살림 규모, 6.5% 늘어난 221조4천억원

2006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 5% 수준(경상성장률 7.5% 수준)을 전제로 하여 편성되었다. 2006년은 유가 등 대외적인 불확실 요인이 있으나 2005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BTL(민간투자)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등에 힘입어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을 망라한 총수입 규모는

2005년 전망 대비 5.9%가 증가한 235조6천억원 이고, 이 중 예산수입 규모는 159조4천억원으로 2005년 대비 6.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증류주 세율 인상(72→90%)과 LNG 특 소세율 인상(40→60원/kg) 등의 세제 개편을 전 제로 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221 조4천억원이며, 이는 2005년 대비 6.5% 늘어난 수 준이다. 예산은 156조5천억원으로 2005년 예산인 146조6천억원(추경전 기준)보다 6.8% 증가하였 고,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115조5천억원으로 8.3% 가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0.3% 흑자, 사회보장 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1.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7년 이후에 는 -1% 내외의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2006년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9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이다. 최근 국 가채무는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른 공적 자금의 국채전환과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 등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공 적자금 국채전환이 완료되는 2006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R&D에 9조원, 복지 부문에 54조7천억원 지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중장기적 인 국가 비전과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

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고, 민간이 보 다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첫째,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올 해 7조8천억원보다 15.0% 늘어난 9조원 수준으 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것이다. 2,700억원 수준의 과학기술국채 발행을 통하여 차세대 성장동 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 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국민의 복지수요에 맞추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보건 부문에 올 해 49 조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7천억원을 지 원할 것이다. 19만명에 대한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 하고, 사망이나 사고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육아 투자 확대, 불임부부에 대한 치료비용 신규 지원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특히,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각 분야내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할 것이다. 여성근로자 고용촉진(1,580억원), 사회적 일자리 지원(2,909억원),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2,700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에 해당된다.

셋째,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 교육 부문의 예산을 올 해 27조6천억원 보다 5.1% 증가한 29조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2단계 BK21 사업에 착수하는 등 고등교육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우수고 육성 등 교육복지 확충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 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문 예산을 올 해 20조8천억에서 22조9천억원 수준으 로 9.8%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자본(BTL) 투자 확대를 통해 사병내무반 환경을 조기에 개선하고, 사병복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

〈표 1〉 총지출 규모

	(단위: 조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률
- 총 지출 ¹⁾ (사회보장지출 제외시)	207.8 (194.8)	221.4 (206.2)	6.5 (5.8)
• 일반회계 ²⁾ (일반회계 총계)	106.6 (134.4)	115.5 (145.7)	8.3 (8.4)
• 특별회계 및 기금	101.2	105.9	4.7

주: 1)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채무원금상환(보전지출)을 제외
2)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 제외

준으로 현실화하고자 한다.

다섯째,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 대비 8.4% 증가한 5조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올해 말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대폭 증액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보다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

수송·교통 부문의 경우, 공기업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재원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수송교통 등 SOC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천억원이 감소한 17조8천억원으로 조정되지만, 공기업 투자와 함께 BTL 등 민자사업과 각 부처의 건축사업 등을 포함한 공공 부문 건설 총 투자규모는 49조원 수준으로 올해 대비 10% 증가할 전망이다.

농어촌 부문의 경우, 132조원 투·융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된 분야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BTL 투자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



▲ 지난 10월 12일 이해진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는 사업 위주로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총 8조3천억원 수준의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그 밖에 정부는 내년도 나라살림을 편성함에 있어 '재원배분 12대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재원배분 12대 원칙'은 1박 2일간 개최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형성된 재원배분 원칙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시장과의 역할분담(Two Track), 민간자본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원배분 12대 원칙'과 재정사업 자율평가(PART)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2005년 5.6%에서 2006년 9.3%(4조2천억원 규모)로 확

〈표 2〉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교육 분야

		(단위: 억원)
- 사회복지 분야	• 사회적 일자리 지원	: 1,691→2,909(72.0%)
	• 육아 지원	: 7,313→10,418(42.5%)
	• 고용서비스 선진화	: 1,549→3,965(156.0%)
- 산업·중소기업 분야	•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	: 1,447→1,658(14.6%)
	• 중소기업 컨설팅	: 150→186(24.0%)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 300→463(54.2%)
- 교육 분야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 2,400→2,700(12.5%)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100→432(332.0%)
	• 학자금 지원*	: 1,062→1,490(40.3%)

주: * 종전 이차보전에서 정부보정으로 지원방식 전환

대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구조조정 우수부처(8개)에 대해서는 기본사업비 3%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성과 중심의 재원배분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세출구조조정 외에도 예산낭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출구조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재정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으로 제도적 정착 도모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사후 성과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책임성을 제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현행 ‘장-관-항’으로 구성된 투입·통제 위주의 품목별 예산과 함께 이를 ‘분야-부문-프로그램’ 체계로 전환한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을 참고형태로 국회에 시범 제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정부는 ‘분권과 자율’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투명함’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재정개혁 과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부문에 15%가 증가한 9조원을 편성하였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보건 부문에 10.8% 늘어난 54조7천억원을 반영하였다. 교육 부문에 5.1% 증가한 29조1천억원을, 국가 균형발전 부문에 8.4% 늘어난 5조9천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이전 재원도 대폭 증액하였다.

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최근 유가·환율 등 대외 여건변화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양극화 완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남북협력 등 향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세출구조의 혁신적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민간자본을 활용(BTL 등)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거나 국채를 활용하는 등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 2006년 나라살림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조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1. 사회복지·보건	49.3	54.7	5.4(10.8)
2. 교 육	27.6	29.1	1.5(5.1)
3. 수송·교통·수자원	18.3	17.8	-0.5(-2.7)
4. 농림·해양수산 (농어촌 투융자)	14.1 (10.8)	14.4 (11.4)	0.3(2.0) (0.6)(5.6)
5. 산업·중소기업	11.9	12.4	0.5(4.5)
6. 환경 보호	3.6	3.8	0.2(6.4)
7. 문화·관광	2.6	2.9	0.3(9.8)
8. 국방(일반회계)	20.8	22.9	2.1(9.8)
9. 공공질서·안전·통일·외교	11.4	13.0	1.6(13.8)
10. R&D	7.8	9.0	1.2(15.0)
11. 국가 균형발전	5.5	5.9	0.4(8.4)

주: 분야별 재원배분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순계 기준

향후 정부는 한정된 재원이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선진국형 재정지출 구조로 전환해 나가면서 민간의 혁신능력 및 지식창출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06년 나라살림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을 포함하여 국민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R&D 투자 확대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이인우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예산담당관실 서기관
(inwooyi@most.go.kr)

2006년 R&D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올해보다 15.0% 늘어난 8조9,72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국채를 처음으로 발행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함으로써 과학기술투자 확충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지식·정보·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양질의 인적자원이 성장을 견인하는 정보화·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보다 과학기술 및 인적 자원 개발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었다.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계 출범 이후 첫 예산 조정·배분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및 중국 등 경쟁국들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는데, 정부 R&D 투자 규모는 1995년 1조8천억원에서 2005년 7조8천억원으로 10년간 네 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R&D 투자의 GDP 비중 역시 2003년 2.64%로 세계 10위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능력은 크게 신장되어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최근 발표된 2005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은 2004년 19위에서 15위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기술 경쟁력은 2004년 8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또한 황우석 박사의 세계 최초 인간배아 줄기세포 추출 등 세계적 연구성과가 창출되었고 해위논문·특허 등의 과학기술 성과지표도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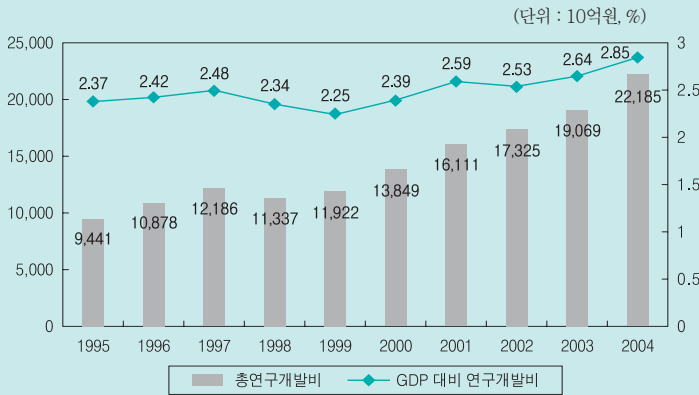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R&D 투자 규모의 양적 확대 및 세계적 연구성과의 창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아직까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미

흡하고 중소기업의 R&D 역량이 취약하며 R&D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하여 투자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효율적 조정 및 배분을 위한 새로운 R&D 예산조정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2004년 10월 정부는 R&D 예산 편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의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 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 R&D 관련 정책 및 예산을 기획·조정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림〉 연도별 연구개발비



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 2004.

〈표 1〉 우리나라 해외논문 발표수 및 미국특허등록 건수

	1999	2000	2001	2002	2003
해외논문 발표수	11,324	12,471	14,889	15,862	18,787
(세계 점유율, %)	(1.21)	(1.39)	(1.61)	(1.71)	(1.85)
(세계순위)	(16)	(16)	(15)	(14)	(14)
미국특허 등록	3,562	3,314	3,538	3,786	3,944
(세계 점유율, %)	(2.32)	(2.10)	(2.13)	(2.26)	(2.33)
(세계순위)	(7)	(8)	(7)	(7)	(5)

자료: 과학기술부, 미국 특허청

이에 따라 2006년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배분하고 기획예산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R&D 투자 증가율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

2006년도 R&D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올해보다 15.0% 늘어난 8조9,72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지난해 10월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 R&D 예산을 조정·배분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국가 R&D 투자 증가율(15.0%)은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6.5%) 및 복지(10.8%)·국방(9.8%) 등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한다. 내년도에는 특히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국채(2,700억원)를 처음으로 발행

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함으로써 과학기술투자 확충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조정·배분한 2006년도 R&D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육성,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 지방 R&D 투자 확대, 기초연구 확대 등 주요 정책과제를 우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둘째, 전문성을 토대로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다수 부처가 분산·중복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성 검토 결과 및 부처 간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고, 유망기술

및 현안과제 해결기술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한편, 대형연구 시설·장비의 과다·중복 투자를 조정하였다.

셋째,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조정에 연계하여 중복·과잉 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실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R&D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우수사업은 증액하고 성과미흡사업은 축소 조정하였으며,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연계사업은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하였다.

넷째, 각 부처의 일반사업비의 R&D 전환을 적극 유도하여 R&D 투자규모를 확대하였으며, 그동안 R&D 투자가 적었던 부처의 R&D 규모를 증액하여 R&D 저변 확대를 꾀하였다.

R&D 예산, 15% 증가된 8조9,729억원

2006년 R&D 예산 편성의 주요 부문·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R&D 분야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 예산	67,368	72,869	5,501(8.2)
• 일반회계	56,612	60,737	4,125(7.3)
• 특별회계	10,756	12,132	1,376(12.8)
- 기금	10,628	16,860	6,232(58.6)
합 계	77,996	89,729	11,733(15.0)

(단위: 억원, %)

〈표 3〉주요 정책과제 예산안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 미래성장동력 확충	5,865	8,038	2,195(37.4)
• 10대 차세대성장동력 사업	3,977	4,978	1,001(25.2)
•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	1,012	1,012(순증)
•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1,888	2,048	160(8.5)
- 중소기업 육성	2,317	2,649	332(14.3)
-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	1,739	4,035	2,296(132.0)
- 지방 R&D(비중, %)*	22,734 (33.7)	26,615 (36.5)	3,881(17.1) (2.8p)(-)
- 기초연구(비중, %)*	14,460 (21.5)	17,252 (23.7)	2,792(19.3) (2.2p)(-)

주: * 국가 R&D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08년까지 시제품 출시가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 총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06년도에는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단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평가결과와 예산 조정을 연계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사업단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련예산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등 평가등급이 우수한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하고 성과 등 사업진도에 따라 제품화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방안을 검토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지원

2006년부터 대형 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완료 단계의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가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한국형 고속철도, 자기부상열차, 해수담수화용 원자로, 대형 위그선, 치매 치료제 등 총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능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2005년 3,500개에서 2006년 5천개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내 '산학협력실'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하여 졸업과 동시에 산업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원천기술형 부품·소재 개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크고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핵심 부품·소재 사업의 투자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특히 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의 개발능력이 취약한 기초·원천 소재 분야 R&D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소 및 대학의 선행연구와 기업의 상용화 개발을 연계하고, 원천기술이 포함된 대형 모듈 단위 차세대 부품의 경우 수요기업과 관련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대규모 사업화 및 설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품·소재 개발과 함께 국산화율이 크게 낮은 제조장비 개발에 대해서도 지원할 것이다.

지방 R&D 투자 확대

동반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조기 구현을 위해 지방 R&D 예산 비중을 2005년 33%에서 2006년 37% 수준으로 확대 투자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기반 구축과 전략산업 육성에 직접적인 투자효과가 있는 지역산업진흥 사업, R&D·혁신 클러스터 구축, 지역산업 공동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중점 지원하며, 지역협력연구센터(RRC)와 지역기술혁신센터(TIC)를 지역혁신센터(RIC)로 통합하는 등 중부·유사 사업을 조정하여 지역 혁신사업 추진의 효율화 또한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창조적 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투자 확충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 과 실천계획을 토대로 인력양성 분야를 대폭

미래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육성, 인재강국 실현, 지방 R&D 투자 확대, 기초연구 확대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우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여 중부·과잉 투자를 조정하였다. 각 부처 일반사업비의 R&D 전환을 유도하여 R&D 규모를 확대하였다.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역량의 잠재력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비중을 2005년 21.5%에서 2006년 24%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미래성장동력 원천기술, 부품·소재 핵심기술, BT(생명공학)·NT(나노공학)의 선도기반기술 확보 등에 집중 투자하고, 특히 BT·NT 분야는 유망기술에 대한 집중투자, 연구단계·부문별 전문화 및 특화 등으로 투자 효율화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 단위의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을 확충할 예정이며, 연구비 분담비율 하향 조정을 통해 기업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우주·에너지·국방·방재 분야 R&D 투자 강화

정부는 또한 2007년 위성 자력발사 등을 위해 우주사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기술과 태양전지·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국방 부문 선진화·과학화를 위해 국방비 내 R&D 비중을 2005년 4.5%에서 2006년 4.8%로 늘리는 등 국방 R&D 투자를 확충하며, 민·군 기술협력 및 국방 R&D 사업의 평가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국방 R&D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재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확충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방지 및 긴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를 위해 선도기초과학연구실 사업을 기초과제 지원사업에 통합하는 등 중복·유사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였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수행한 2006년도 R&D 예산의 조정 및 배분은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계 출범 이후 첫 예산조정으로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벤치마킹하는 등 이를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관련 부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적응 및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2006년도 R&D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있어 부처와의 조율을 통한 새로운 예산조정 체계의 정착에 역점을 두었다. 이제 올해 말부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다 혁신적인 R&D 예산조정 체계의 개선을 모색

투자효율 제고 위해 예산 조정·집행 시스템 개선

정부는 2006년도 R&D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있어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조정에 역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R&D 예산 조정 및 집행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다.


예산 조정·배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8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검토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등의 사업성 사전검증을 강화하였다.

또한 연구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투자효율을 우선적으로 감안하게 하는 법적 장치를 완비하였으며, 연구관리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연구사업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투자효율성 제

할 예정이다.

향후 2007년도 R&D 예산 조정·배분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각 부처의 R&D 계획을 과학기술 기본계획,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국가 혁신체제) 구축전략 등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사업을 실효성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에 도입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일반 R&D 사업에도 확대 실시하여 R&D 사업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정부 R&D 성과의 실수요자인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R&D 투자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 구현



고학수 농림부 재정기획관실 서기관
(kohaksoo@maf.go.kr)

2006년 농림 부문 예산순계 규모는 5.1% 증가한 10조3,386억원이다. 수입농산물의 물량공세에 대응한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공급,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을 통한 체질개선과 농업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화, 농촌 현실에 맞는 소득·복지 안전망 확충,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된다”고 역설하였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현재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쌀 관세화 비준 처리, 도하개발아젠다(DDA) 및 자유무역협정(FTA) 진전 등 농산물시장 개방의 압력이 점점 가중되고 있고, 안으로는 농가소득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동시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함께 사는 도·농 상생기반 마련

정부는 농업 분야에 당면한 대내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향후 10년간 ‘119조 투·유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개방시대에 대비하여 내년도 우리 농정의 방향을 수입농산물의 물량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생산·공급,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을 통한 체질개선과 농업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화, 농촌현실에 맞는 소득·복지 안전망의 확충, 자율적인 농촌지역개발 참여를 통한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 및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제반 시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19조 투·유자계획 중 2006년도 투·유자소요액 10조3,000억원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였다.

내년도 농림 부문 예산순계 규모는 10조3,386억원으로 2005년보다 5.1%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비는 8조3,394억원으로 2005년 대비 3.0% 증가하였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인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이 3조1,566억원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 농림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농업·농촌 대책과 쌀비준 보완대책 소요를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내년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농업·농촌 대책 추진을 위한 투융자 재원을 올해보다 5.0% 증액하여 확보하였고 직불 관련 예산은 1조222억원으로 18.3%, 쌀비준 보완대책 관련예산은 27.1% 증액 반영하였다.

쌀비준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쌀고정직불금의 단가 인상(ha당 60→70만원), 조건불리 지역의 전국 확대,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2ha 미만→5ha 미만 농가),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신규 실시, 선도 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시설 확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농업기반시설 지원 확대 등이다.

둘째, 투·융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개편이다.

보조사업은 사업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되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과 사업의 일몰제를 통해 축소가 필요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보조율의 단계적 감축이 필요한 사업은 감축계획을 사전에 예고하여 투·융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금융회사 자금 활용이 가능한 융자사업은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하였다.

〈표 1〉 농림부문 주요 사업비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단위: 백만원, %)
생산기반 조성	1,507,291	1,446,863	-60,428(-4.0)
생산및 유통개선	499,207	674,334	175,127(35.1)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641,541	729,681	88,140(13.7)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3,027,977	3,156,638	128,661(4.2)
양곡수급 안정	1,441,188	1,254,220	-186,968(-13.0)
산 립	771,244	863,072	91,828(11.9)
채무상환	209,735	214,548	4,813(2.3)
합 계	8,098,183	8,339,356	241,173(3.0)

〈표 2〉 쌀비준대책 관련 2006년 예산안 반영 현황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단위: 억원, %)
쌀고정직불금	5,988	6,986	998(16.7)
변동직불금 출연	724	811	87(12.0)
농신보 출연	4,000	5,780	1,780(44.5)
친환경농업 지원	1,492	2,018	526(35.3)
농지은행 농지매입	-	100	100(순증)
선도후계농업인 추가지원	-	19	19(순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23	532	409(332.5)
영유아양육비 지원	224	234	10(4.5)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93	133	40(43.0)
농업기반시설 지원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4,937	5,726	789(16.0)
합 계	17,581	22,339	4,758(27.1)

농림 부문 예산순계 규모

5.1% 증가한 10조3,386억원

농림 부문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가 소득 안정 및 부담 경감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확보하고 부담경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에 있어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변동직불금은 2004년산보다 쌀값이 5% 하락할 경우를 전제로 87억원을 증액하여 기금을 출연할 것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은 단가를 만원으로 하되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친환경농업 직불은 지원

단가를 차별하여 지원하고, 2004년에 도입한 친환경 경축산직불은 축산업등록농가 900호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경영이양 직불단가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량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량을 축소 조정할 예정이다.

농가의 경영위험 관리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32억원을 증액하여 보험료의 58.4%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 재해공제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였다.

농어민 복지 및 지역개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및 지역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올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영유아자녀(0~5세) 양육비 지원 대상을 2ha 미만에서 5ha 미만 농가까지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도 지원 대상을 1만3,000명에서 1만6,000명으로, 지원단가도 20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렸다.

주 5일제 근무로 늘어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관광으로 흡수하여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47개소→67개소).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개 권역 신규착수 소요비를 지원하고, 농촌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전하여 농촌의 쾌적함(amenity)과 농촌다움(rurality)의 유지를 위해 올해 8월 도입한 경관보전직불제는 2007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친환경농업 육성

소비자에게 '텃밭에서 식탁'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농업·농촌 대책 추진을 위한 투·융자 재원을 5.0% 증액하여 확보하였고 직불 관련 예산은 1조222억으로 편성하였다. 쌀비준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쌀고정직불금단가를 ha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건불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을 육성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 확대를 위해 1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예산을 67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크게 확대하였다.

수계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올해와 내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원액수를 4억원에서 7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화학농약 사용 감축을 위해 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친적해충방제사업에도 12억원에서 38억원으로 지원액을 확대하였다.

농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보증, 안전농산물 생산·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를 본격 시행하고 안전성 조사와 원산지 관리 예산액을 206억원에서 257억원으로 증액하였다.

퇴비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이를 활발히 유통시키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요즘 사회적 근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조류독감 등의 가축질병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가축방역 지원액을 305억원에서 522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인증제 및 사후관리에 2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물류·유통 효율화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과 물류효율화 지원,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 및 소비 촉진, FTA 보완대책의 추진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지유통 거점시설 확충을 위한 산지유통센터를 47개소에서 56개소로 확대하였고(165억원→186억원),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포장 및 하역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67억원→88억원)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파렛트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76억원→88억원)에 대해 지원액을 증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초기 시장개척이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 및 우수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과수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FTA 이행지원기금 출연예산에는 올해보다 32억원이 늘어난 1,632억원이 반영되었다.

지식·기술 농업 확산

경쟁력 있는 선도 농업경영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식·기술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18억원 늘어난 818억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창업농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한편 품목과 분야를 고려한 품목별 전문교육, 지역특성화 교육 등 농업전문인력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36억원에서 12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품목단체 공동 컨설팅제도 도입 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였다.

전통농업에 BT와 IT를 접목한 첨단농업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농림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하였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된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사업에는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20억원이 늘어난 65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지역 핵심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을 연계해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에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곡수급 안정

양곡수급 안정 및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정제도의 개편으로 공공비축재가 도입됨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 예산은 다소 줄었지만 시가매입·시가방출에 필요한 세입·세출 소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수확기 출하물량 흡수와 수입쌀 시판에 대비한 고품질쌀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시설 증설사업 예산은 사업량(50개소→66개소)과 평균지원단가(4억5천만원→5억원)를 확대 반영하고 또한 국고지원기준을 생산자단체 40%, 일반업체 30%, 통합미곡종합처리장 50%로 차별화하였다.

참고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곡수급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119조 투·융자계획에 반영된 수치인 110개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이관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은 올해 수준을 유

지하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운영자금 금리를 0~2% 사이에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생산기반 조성의 효율성 제고

생산기반 조성 및 기계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재해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관련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안전진단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지구는 완공 위주로 지원하며, 저수지 준설사업과 수리시설 안전진단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통합하였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재해위험 방조제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며, 상습침수 농경지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은 준공지구를 확대하고 신규착수는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을 통해 산업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와 더불어 농촌의 사회적 위상도 예전보다 하락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의 장기이식을 위한 무균돼지 복제 성공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농업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이다. 다원적 가치로 대변되는 농업의 사회적·생태적·문화적 의미 외에도 이제는 경제적 의미 역시 재조명될 수 있는 시대가 한 발짝씩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새로운 이익창출의 가능성이 농업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이 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가능성을 위해서 농업인·농촌사회의 부단한 노력 외에도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고 본다. 

산업기술개발 역량 강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김영환 산업자원부 재정기획팀장
(kyh0324@mocie.go.kr)

2006년도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산업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이 두어져 6.3% 증액된 5조2,000억원이 편성되었다.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 금융지원에는 감액 배정되었고, 산업기술 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산업 진흥, 에너지 및 자원 부문에는 증액 편성되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적으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완제품과 부품·소재, 수도권과 지방 등 경제전반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도 지역주의 확산과 무역구조의 편중, 원자재의 수급 불안 및 고유가의 지속 등의 악재가 될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내수 및 설비투자 회복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요인들을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취약부문의 활력을 제고하여 부문간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006년도 산업자원부 예산은, 산업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

고, 성장잠재력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게까지 확산되어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산업기술개발 역량 강화에 중점 두고 5조2,000억원 편성

2006년도 산업자원부 예산안은 2005년 대비 6.3% 증액된 5조2,000억원 수준으로,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 금융지원 부문은 각각 8.6%, 1.2% 감액되었고, 산업기술 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산업진흥, 에너지 및 자원 부문은 각각 7.0%, 1.5%, 7.4%, 11.1% 증액되었다.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부문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예산은 2005년도 대비 8.6% 감액된 3,189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05년과 같은 수준인 18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제수출통제체제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입 기업의 피해예방을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BRICs 등 신흥유망시장의 전략적 개척을 위해 해외 마케팅사업과 세계일류마케팅 지원사업을 증액하였으며, 대한무역투자공사 보조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346억원을 반영하였다. 외국인투자 임대용 부지매입비 소요가 증가한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에는 19.6% 증가한 1,055억원을 반영하였다.

〈표 1〉 산업자원부 부문별 예산안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3,488	3,189	-299(-8.6)
산업기술 개발	12,110	12,955	844(7.0)
산업구조 고도화	1,526	1,549	23(1.5)
중소기업 금융지원	600	593	-7(-1.2)
지역산업 진흥	6,096	6,545	449(7.4)
에너지 및 자원	22,504	24,998	2,494(11.1)

(단위: 억원, %)

〈표 2〉 무역 및 투자유치 예산안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	189	189	0(0)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기반 구축	19	30	12(62.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조	1,343	1,346	3(0.2)
해외마케팅 지원	170	172	2(1.2)
세계일류마케팅 지원	56	59	3(5.4)
외국인투자 유치	882	1,055	173(19.6)
기타 사업	829	337	-492(-59.4)
합 계	3,488	3,189	-299(-8.6)

(단위: 억원, %)

〈표 3〉 산업기술 개발 예산안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성장동력기술 개발	903	1,360	458(50.7)
산업혁신기술 개발	2,314	2,193	-121(-5.2)
부품소재산업 육성	2,310	2,520	210(9.1)
국제공동기술 개발	131	190	59(45.0)
기술이전 사업화	381	405	24(6.3)
기타 사업	6,072	6,287	215(3.5)
합 계	12,110	12,955	844(7.0)

(단위: 억원, %)

산업기술 개발 부문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은 2005년 대비 7.0% 증액된 1조2,955억원을 반영하였다.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동력기술 개발사업은 50.7% 증액된 1,36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한·일 FTA 대응 및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을 위한 부품소재산업 육성 관련 예산은 9.1% 증액한 2,520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확보를 추진하는 국제 공동기술개발사업에 45% 증액된 190억원을,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R&D에 투입된 자원을 경제적인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술이전사업화사업에 6.3% 증액된 405억원을 편성하였다. 한편, 산업혁신 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 이관사업 등 세부사업을 조정하여 반영하였다.

산업구조 고도화 부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2005년 대비 1.5% 증액된 1,549억원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사업성과가 나타난 산업 부문 B2B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중소기업 IT축진사업은 감액한 반면, 지역의 산업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생산기능의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지방대학의 산학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사업은 대폭 증액하여 각각 463억원과 200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등을 위한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사업에 신규로 5억원을 편성하였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부문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은 2005년 대비 1.2% 감액된 593억원을 반영하였다.

수출·해외투자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상 위험(국가부도 등)과 신용위험(수입자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출기업, 해외투자자 및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수출 및 해외투자를 진흥하기 위한 수출보험기금에 올해와 같이 5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농공단지 진흥 예산은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여 감액 반영하였다.

지역산업 진흥 부문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예산은 2005년 대비 7.4% 증액된 6,545억원을 반영하였다.

〈표 4〉산업구조 고도화 예산안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산업부문 B2B네트워크 구축	140	113	-27(-19.3)
중소기업 IT화 지원	140	36	-104(-74.3)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300	463	163(54.2)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	120	200	80(66.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	5	5(순증)
기타 사업	826	732	-94(-11.3)
합 계	1,526	1,549	23(1.5)

우선 1단계에서 구축된 하드웨어를 토대로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4개 시·도 지역산업 진흥 2단계 사업은 2,00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002년부터 시작된 3개 권역(대전·충청권, 전라·제주권, 울산·경북·강원권)별 9개 지역진흥 사업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1,734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과급효과 및 성공 가능성이 큰 지역숙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58.3% 증액된 475억원을,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에는 709억원으로 9% 증액 반영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 부문

에너지 부문 예산은 2005년 대비 11.1% 증액된 2조4,998억원을 반영하였다.

지속되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3.0% 증액된 7,636억원을 반영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 발전,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하여 34.5% 증액된 3,883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예산은 각각 43.0%, 7.2% 증액된 8,781억원, 5,149억원을 반영하였다. **☞**

〈표 5〉에너지 및 자원 예산안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2,887	3,883*	996(34.5)
에너지이용 합리화	7,411	7,636	225(3.0)
석유·가스 안정공급	6,141	8,781	2,640(43.0)
석탄산업 합리화	4,801	5,149	348(7.2)
일반광물자원 개발	1,183	1,517	334(28.3)
기타 사업	81	149	68(84.0)
합 계	22,504	24,998	2,493(11.1)

주: * 新재생에너지사업 중 전력 부문(2006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반영) 2,117억원 포함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황해석 보건복지부 재정기획관실 서기관
(hhs5698@mohw.go.kr)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2005년 대비 12.7% 증가된 10조3,882억원이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고령화 사회 본격 대응, 보건복지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육성 및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장체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200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복지비전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고령화 사회 본격 대응, 보건복지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육성 및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장체계 실현에 중점이 두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일을 통한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출산장려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노인요양 보호를 위한 인프라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의 확충,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강화, BT 중심의 차세대 보건산업 육성,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 및 한의약산업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 예산안, 12.7% 증가된 10조3,882억원

200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12.7% 증가(1조1,739억원)된 10조3,882억원 규모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2%가 증가된 9조7,065억원,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및 재정용자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20.4%가 늘어난 6,817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은 생계·주거·교육 및 의료를 포함하여 8,726억원이 증액된 4조9,77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4.2%, 수급자 소득변화 3%를 각각 반영하였다.

아울러 부양의무자의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구원의 사망·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약 10만 가구)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615억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렵거나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아동(2만6,000명)까지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44억원)할 계획이다.

한편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 지원을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2만→3만명),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에 본격 대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가정 중 둘째아이 이상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사업에 38억원을 지원하여 출산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출산을 희망하는 저소득 가정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 시술 비용을 지원(213억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3만5,000→8만명, 200→520억원), 교육 및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알선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지역에 단기보호 및 주간보호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소규모(20명 내외) 시설 설치에 126억원을 지원하여 종합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대규모 시설의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고령화 정도가 심화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10인 이하) 치매노인 그룹홈을 설치하여(155억원) 치매노인에게 종사자와 공동으로 식사·청소·세탁 등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치매행동을 지연시키고 가족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의 지급범위를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사회복지시설 입소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급단가를 1만원 인상하여 내년부터 월 7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1천여명 정도)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법인과 단체 등에서 기초학습과정 및 검정고시 준비반 등을 운영하여 여성장애인의 자기계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주거공간 내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저소득 재가(在家)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위탁된 아동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16억원)하여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실종아동의 신속한 가정복귀와 아동의 가정보호 지원을 위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 설치·운영에도 8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하교 후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도를 받지

〈표〉 보건복지 부문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일반회계	8,647,963	9,706,508	1,058,545(12.2)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66,567	69,750	3,183(4.8)
재정용자 특별회계	38,000	60,600	22,600(59.5)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167,738	164,488	-3,250(-1.9)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7,898	45,605	17,707(63.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45,797	241,500	-4,297(-1.7)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0,336	99,728	79,392(390.4)
합 계	9,214,299	10,388,179	1,173,880(12.7)

못하는 아동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방과 후 학습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해외입양인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입양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

지역사회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지역암센터 건립 및 지역산업보건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노인전문병원, 권역별 재활병원 및 도시지역 보건지소 건립 등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병 관리사업 확충을 위하여 심·뇌혈관계 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한방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의 한방진료부 설치 및 한약건강정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금연상담전화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BT 중심 차세대 보건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신약·장기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에 필요한 R&D 예산 1,950억원을 확보하였다.

이 중 한국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진단·치료 및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질병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정복 기술의 보건산업으로의 연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에 90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하여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영

정부는 올해 좋지 않은 여건임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흑자상태로 유지하였다. 앞으로 재정수지 균형을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61%에 불과한 전체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70%로 높이는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MRI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지속 추진,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실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었으나, 촘촘하지 못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은(2001년 기준 GDP의 8.7%)은 OECD 복지 선진국의 평균(22.4%)에 비하여 낮다.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저출산·고령화 사회 본격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장체계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발전 수준에 맞는 사회보장 예산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선진환경국가 건설 위한 환경투자 확대



박희정 환경부 재정기획관
(hjpark@me.go.kr)

2006년도 환경예산안은 올해보다 6.7% 증가된 3조45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정부는, Top-Down 제도를 정착시키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적용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부문별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하였다.

그 동안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재정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하·폐수,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중심으로 환경 분야 인프라가 확충되었고, 수계별 오염총량제와 같은 선진 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오염원의 급속한 증가와 다양화로 인해 환경성 질환 등 새로운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투자 방향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전예방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정책 지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 개선, 새롭고 시급한 환경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06년도 환경예산안은 3조459억원으로 2005년보다 6.7%(1,902억원) 증가하였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Top-Down 제도 정착,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적용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부문별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하였다.

환경예산안 3조459억원으로 6.7% 증가

부문별로는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의 본격 추진에 따라 대기 부문 예산(55.4% 증가)을 대폭 확대하였고, 생물자원 보전, 환경성 질환 예방 등 새로운 환경수요가 많은 자연보전 부문, 환경정책 부문의 예산을 각각 29.2%, 9.3% 증액하였다.

그간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진 상수도 및 수질(하·폐수) 부문은 낙후지역 상수도, 상수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인프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의 적정처

리를 위한 실소요를 반영하되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활용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로 광역·중소 도시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높아졌으나, 도서·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급률은 아직도 매우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상수도 보급률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전년 대비 13.0%가 증가한 2,298억원을 상수도 부문에 지원할 계획이다.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도서·농어촌 등 급수취약 지역 지원을 위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544억원)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1,204억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한 반면 지자체의 상수도 부문 부채 증가로 수요가 줄고 있는 지방상수도시설 개발사업(181→168억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213→100억원) 등 융자사업비는 감액하였다.

〈표 1〉 부문별 환경예산안

	(단위: 억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상수도 관리	2,034	2,298	264(13.0)
수질(하·폐수)	16,213	15,916	-297(-1.8)
폐기물 관리	2,769	2,759	-10(-0.4)
대기 보전	2,152	3,345	1,193(55.4)
자연 보전	1,262	1,631	369(29.2)
환경정책 등 기타	4,127	4,510	383(9.3)
합 계	28,557	30,459	1,902(6.7)

〈표 2〉 상수도 예산안

	(단위: 억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균특)	498	544	46(9.2)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균특)	969	1,204	235(24.2)
농어촌 간이상수도 사업	40	70	30(75.6)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재특용자)	181	168	-13(-7.1)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환특용자)	213	100	-113(-53.1)
기 타	133	212	79(59.4)
합 계	2,034	2,298	264(13.0)

〈표 3〉 수질 부문(하·폐수) 예산안

	(단위: 억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하수처리장 설치	6,232	6,216	-16(-0.2)
하수관거 정비	5,357	5,407	50(0.9)
공단폐수처리시설	1,271	1,045	-226(-17.8)
산업폐수 원충저류시설	68	177	109(160.3)
4대강 수질개선대책	81	115	34(42.4)
자연형 하천 정화	518	570	52(10.1)
기 타	2,686	2,386	-300(-11.1)
합 계	16,213	15,916	-297(-1.8)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 중점 지원 수질 부문의 경우, 하·폐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 부실로 인한 하수처리장 효율성 저하,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비점오염원의 관리,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가능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정착 등 아직도 과제가 많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하·폐수) 부문에 1조5,9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2.3%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하·폐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하수관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속 지원해 나가는 한편, 하수관거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예산사업과 별도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 방식을 확대(2005년 1조→2006년 2조3천억원)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댐상류 하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확충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계전체 오염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4대강 수질개선대책' 등에 예산을 증액하고,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제 정착을 위한 예산도 증액하였다.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자연보전·환경정책 부문의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다. 아울러 환경인프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 및 수질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활용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기반 구축

폐기물 부문의 경우, 그동안 소각·매립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폐기물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쓰레기종량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으로 소각과 재활용률이 높아졌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내년에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폐기물 부문에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2,759억원을 반영하였다.

〈표 4〉폐기물 부문 예산안

	2006년 예산안 (단위: 억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 쓰레기처리시설	905	899	-6(-6.6)
• 농촌폐기물 처리	-	130	130(순증)
• 재활용산업 육성 용자	700	700	0(0)
• 재활용시설설치	144	123	-21(-14.5)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170	147	-23(-13.5)
- 기 타	850	760	-90(-10.6)
합 계	2,769	2,759	-10(-0.4)

〈표 5〉대기 부문 예산안

	2006년 예산안 (단위: 억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	1,081	2,129	1,048(97.0)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77	545	-32(-5.5)
수도권 외 대기환경개선대책	-	100	100(순증)
생활소음 종합대책	-	40	40(순증)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	40	40(순증)
기 타	494	491	-3(-0.8)
합 계	2,152	3,345	1,193(55.4)

매립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소각시설, 비위생 매립지 정비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는 필수소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난분해성 합성수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사용지원 시범사업에 17억원, 적체된 농어촌 폐기물(12만2,000t) 처리를 위한 농촌폐비닐처리 사업비 130억원과 재활용업체의 생산비용 절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비 29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대도시 등 대기환경 개선대책 본격 추진

대기 부문의 경우, 그동안 배출규제, 저황연료 사용 등의 정책에 의해 황산화물 등 일부 배출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나 에너지 소비와 자동차 증가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에 의한 대도시 대기오염은 심각한 실정이다.

대기 부문 투자예산은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의 본격 추진 등 소요 증가에 따라 대폭 증액된 3,345억원을 반영하였다.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전기하이브리드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예산을 증액(89→115억원)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저공해 지원예산도 대폭 확대(948→1,862억원)하였다.

또한 5대 광역시, 광양만권 등 대기오염이 심한 수도권외 지역에 대한 대기개선대책에 10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2000년부터 2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천연가스버스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토의정서 발효(2005년 2월)에 따른 국제적인 온실가스저감 압력에 대비하여 기후변화협약대책 사업비 4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은 생활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표시의무

제 시행, 소음측정망 설치 등 생활소음 종합대책 사업비 4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생물자원 및 생태계 보전 지원 확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사회적인 갈등, 여가시간의 확대 등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자연환경 부문에 2005년 예산 대비 29.2%가 증가한 1,631억원을 반영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에 대응하여 국가생물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을 지속 지원하고,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자연친화적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내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연학습·생태관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생태계보전지역·습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 우수

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가고,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야생 동식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동·식물 보호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정책 및 국제협력 강화

정부는 2010년 환경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경쟁력이 있는 환경산업체를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편 환경오염 심화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협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전대책을 강화하고, 독성평가 위주의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노출가능성까지 고려하도록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EU의 제품 환경성 규제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두만강 환경보전사업 등 남·북 환경협력사업, 국제환경협력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표 6〉 자연보전 부문 예산안

	(단위: 억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운영	150	241	91(60.6)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	53	53(순증)
국립공원사업	610	686	76(12.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	142	190	48(33.4)
생태계보호지역 보전	15	41	26(168.6)
기 타	345	420	75(21.7)
합 계	1,262	1,631	369(29.2)

〈표 7〉 환경정책 등 기타 부문 예산안

	(단위: 억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	882	930	48(5.4)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64	64	0(0)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	-	14	14(순증)
환경성 질환 예방구축 등	8	15	7(87.5)
환경개선자금(재특용자)	600	540	60(10.0)
기 타	2,573	2,947	374(14.5)
합 계	4,127	4,510	383(9.3)

이상에서 설명한 예산사업과 별도로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수질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수변구역 토지매입,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총 기금예산도 전년 대비 5.8% 늘어난 6,4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연환경은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므로 이를 보전하는 것은 현재의 쾌적성을 넘어서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등 국정과제 중점 추진



강희업 건설교통부 예산총괄팀 서기관
(heeup@moct.go.kr)

2006년도 건설교통 예산안 규모는 3.5% 감소한 17조4,49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국토 균형발전,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국민임대주택 확충 등 국정과제를 중점 지원하고, 부문 간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민간자본 활용 등 투자자원을 다양화하는 것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21세기
의 국경 없는 무한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토 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가경쟁력
을 제고해야 한다.

경제활동이 세계화되면서 역동적 혁신이 상대적
으로 용이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
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여 누적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
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잠
재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나가
야 할 것이다.

SOC는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

국가경쟁력의 한 축을 이루는 SOC 시설은 과거
1970~1980년대 고도 성장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개될 지식·정보 기반사회에서도 국가경
쟁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도로·철도·
항만 등 산업기반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와 첨단화
된 물류시스템 등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생산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국토 균형발전과 SOC 분야 시설확충을 위해 건
설교통예산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인천공항
1단계, 중앙고속도로 등 주요 시설의 완공 등으로
2003년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도로는 서해안, 대전-진주, 중앙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축의 완공(2001년)과 민간
자본 유치 등의 영향으로 2003년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투자가 소홀했던 철도는 경부고속철

도, 기존선 전철화·복선화 사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항은 인천공항 1단계 사업 완공(2001년)과 지방공항 사업 축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수자원은 치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었으나, 신규댐 등에 대한 투자가 억제되어 규모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투자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건설교통 예산안, 3.5% 감소된 17조4,493억원

2006년도 건설교통 예산안 규모는 17조4,493억원으로 올해 예산 18조899억원에 비해 3.5%가 감소되었다.

부문별로는 도로 7조3,377억원, 철도 4조7,223억원, 공항 3,848억원, 수자원 1조6,118억원, 산업단지 지원 1,489억원, 지역개발 2,173억원, 주택건설 1조1,462억원, 기타 2조2,465억원(광역교통 5,453억원) 등이다.

그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고유가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자주국방·복지·통일 등 타 분야의 재원소요가 증가된 것에 기인한다.

정부는 이와 같이 한정된 재원여건 등을 감안,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국토 균형발전,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국민임대주택 확충 등 국정과제를 중점 지원하고, 부문 간 투자계획을 조정

하여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민간자본 활용 등 투자재원을 다양화하는 것을 건설교통 부문 2006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균형 있고 아름다운 국토공간 조성

내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453억원)하여 수도권은 동북아의 금융 중심,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은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1세기의 세계적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인근지역 관리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20억원)하고, 산업집적 가능성이 있는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도시 개발을 본격 지원(10억원)해 나갈 계획이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인천국제공항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2005년 2,273억원→2006년 3,011억원)할 예정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3,400억원을 지원하되, 호남고속철도는 2006년에 기본설계를 착수하기 위해 설계비 100억원을 반영하였다.

물류시설 확충, 연계수송체계 구축 등으로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2005년 854억원 → 2006년 1,219억원)하였다.

영남권·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진입

〈표〉 건설교통 부문별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	2003년 예산	2004년 예산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률
도 로	81,955(53.8)	80,069(52.5)	90,232(52.3)	80,647(49.4)	76,614(42.4)	73,377(42.1)	-2.2
철 도	28,708(18.8)	32,962(21.6)	35,870(20.8)	31,744(19.4)	50,973(28.2)	47,223(27.1)	10.5
공 항	6,066(4.0)	3,137(2.1)	3,803(2.2)	3,617(2.2)	4,005(2.2)	3,848(2.2)	-8.7
수자원	16,894(11.1)	14,263(9.4)	17,064(9.9)	17,399(10.7)	18,438(10.2)	16,118(9.2)	-0.9
주택건설	5,761(3.8)	8,095(5.3)	9,706(5.6)	10,811(6.6)	11,722(6.5)	11,462(6.6)	14.7
기 타	13,050(8.6)	13,917(9.1)	15,600(9.0)	19,054(11.6)	19,147(10.6)	22,465(12.9)	11.4
합 계	152,434(100)	152,443(100)	172,275(100)	163,274(100)	180,899(100)	174,493(100)	2.7

주: 1) 괄호 안은 비중임.

2) '기타'는 광역교통·물류개선·산업단지·지역개발·인건비·경상경비 등을 말함.

3) '증감률'은 2001~2006년간 연평균 증감률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453억원을 반영하고, 인천국제공항은 2008년 완공 목표로 내년엔 3,011억원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는 3,400억원을 지원할 것이다. 호남고속철도는 기본설계 착수를 위해 설계비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11만호 건설에 8,989억원을 편성하였다.

철도, 유통단지(여주·제천·안동)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며, 불법 주·박차난 해소를 위해 화물공영차고지 건설(14억원)을 지원하며,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물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물류전문대학원 개설 지원(20억원), 물류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원(4억원)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국도대체 우회도로(7,266억원),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300억원) 및 산업단지 진입도로(2,610억원) 등 도시부 교통혼잡 완화와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또한 대도시권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전철망 구축 지원(4,252억원)과 지하철 건설 및 노선 연장(7,092억원)은 물론 '저비용·고효율'의 간선급행버스(BRT)를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도입(17억원)할 예정이다.

삶의 질 향상 및 자연재해 예방

정부는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0년간(2003~2012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 중 2006년도에는 11만호를 건설(8,989억원)할 것이다. 또한 2006년부터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전세임대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관리비·수리비 등을 사업비의 50% 수준에서 지원(88억원)할 예정이다.

당초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하던 노후·불량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올해부터는 상시사업으로 전환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지원(1,196억원)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투자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 댐을 건설(1,656억원)하고, 기존 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1,074억원)을 추진하며, 태풍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치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1조1,599억원)해 나갈 계획이다.

SOC 투자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재원 다변화

2006년 예산안 편성시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적은 부문의 투자를 축소하고, 주요 대형 국책사업, 연구개발(R&D) 부문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전년(6%)을 훨씬 상회하는 13% 규모의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도로는 과거 교통애로 해소 위주의 양적 확충에 주력하였으나, 경제발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환경과 안전, 투자효율성 제고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완공 위주로 투자하되, 기존시설의 용량 증대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2005년 1조3,729억원→2006년 1조6억원), 일반국도(2005년 1조2,327억원→2006년 7,954억원) 등 지역 간 연결 도로사업 예산은 올해에 비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민자유치사업 지원예산 규모를 대폭 증액(2005년 7,087억원→2006년 1조3,503억원)하였으며, 국도시설개량 등 유지보수 사업(7,470억원)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투자방향을 전환하였다.

그간 상대적으로 투자가 소홀했던 철도는 장거리·대용량 수송기능을 제고하는 등 철도교통의 편

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장을 2009년까지 3,700 km로 증대(2004년 3,136km)하고, 복선화율을 51.4%(2004년 34.4%)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6년에 경전선 복선전철 사업(1,419억원) 등 27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광양항 인입철도(설계비 10억원)와 온양온천-신창 간 복선전철 사업(설계비 3억원)을 신규로 추진할 것이다.

지방공항은 고속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축소된 항공수요를 감안, 투자계획을 조정(2005년 1,547억원→2006년 777억원)하였다.

한편 SOC 투자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투자재원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민자유치 지원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시행 중인 고속도로사업에 연·기금을 투입하며, 총 10개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200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속도로 운영권을 담보로 6년간(2005~2010년) 5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인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전라선·경전선 복선전철 사업 및 원주-강릉 철도 건설에 신규로 도입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교통 부문의 '高비용·低효율' 구조를 해소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2005년 1,519억원→2006년 2,960억원)할 계획이다.

건설교통 재정운용 혁신 추진

건설교통 예산은 막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이월·불용과 교통수요 과다 추정, 총사업비 증가 등 예산절감 의식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건설교통 재정운용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올 10월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재정집행 상시점검 체제를 구축하여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후년도 예산편성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다.

둘째, 총사업비 관리를 예산당국의 심의에 의존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 총사업비 사전심사·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사업비 증가를 억제할 것이다.

셋째, 시설투자·증장기계획 수립 등 주요 용역에 대하여는 민간 참여 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선정, 중간점검,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며 용역 발주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용역관리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다.

넷째, 전년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위주로 세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함으로써 성과 위주의 재정운용 풍토를 정착시킬 것이다.


다섯째, '예산낭비대응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낭비사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는 관서 운영비 등 기본사업비 편성에 불이익을 가할 것이다.

여섯째, 사업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수요 추정의 적정성을 사전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이다.

SOC 사업은 전국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망 구축을 통해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주요 SOC 스톡(Stock)이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2002년 기준으로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22조1천억원, 국가물류비가 연간 87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SOC 투자 축소는 국가경쟁력 저하는 물론,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압박, 부분 시공 후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운용 혁신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SOC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동북아 물류중심 구축과 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



곽인섭 해양수산부 재정기획관
(ikwak@momaf.go.kr)

내년도 해양수산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증액된 3조1,733억원이다.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구축, 세계 일류의 해운물류산업 육성,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회복, 살기 좋은 어촌 실현,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新해양산업 창출 등 6대 정책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내년도 해양수산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①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구축 ②세계 일류의 해운물류산업 육성 ③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회복 ④잘사는 수산업인, 살기 좋은 어촌 실현 ⑤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⑥新해양산업 창출 및 해양문화 창달 등 6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구조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였다.

이는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 및 재원배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만6천명의 해양수산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항만·수산·해양 등 분야별·부문별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야 할 사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편성된 것이다.

내년도 해양수산 예산안은 3조1,733억원으로서, 올해 3조751억원보다 3.2%(982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동북아의 명실상부한 물류중심항만 구축을 위해 항만인프라의 적기 개발과 신속하고 편리한 물류환경 조성에 주요 사업비 2조9,042억원의 61.3%인 1조7,793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수산자원의 감소와 해외어장의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산 분야에 8,363억원(28.8%)을 편성하였다.

또한 해양자원의 개발과 산업화를 통해 해양산업을 우리 경제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2,886억원(9.9%)을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산발전기금 6,10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비축 및 출하조절사업 등 경성사업의 투자는 내

실화하는 한편, 수산물 수매 및 우수 수산물 지원 등 융자사업은 확대하였다.

해양수산예산안, 3.2% 증가한 3조1,733억원

내년도 해양수산 주요 사업비의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항만 건설 투자확대 및 권역별 거점항만 육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선점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항만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항만 운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항만 분야에 올해

보다 1.1%(194억원) 증가한 1조7,793억원을 편성하였다.

신항만, 권역별 거점항만, 기타 일반항 등으로 투자비를 배분하여 항만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항만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신항만 건설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전체 항만건설예산의 58.2%인 1조352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이 중에서 그동안 투자가 미진했던 울산신항(21.6% 증가) 및 인천북항(18.3% 증가) 등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부산신항 및 광양항 등 기타 신항만은 계획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부두시설은 물론 배후수송시설에 적정 연차소요를 반영하였다.

권역별 거점항만과 일반항은 지역특성에 맞게 완공 및 효율성 위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공사 진척도, 잔여 사업기간, 사업추진 실태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항만은 2,338억원, 일반항은 1,615억원을 반영하였다. 이 밖에 항만시설 유지·보수 등에 3,488억원을 편성하였다.

〈표 1〉 2006년도 해양수산 예산안

		(단위: 억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	주요 사업비	28,271	29,042	771(2.7)
·	항만 분야	17,599	17,793	194(1.1)
·	수산 분야	8,228	8,363	135(1.6)
·	해양개발·환경 등	2,444	2,886	442(18.1)
-	행정경비	2,480	2,691	211(8.5)
합 계		30,751	31,733	982(3.2)
(R & D)		<1,406>	<1,720>	<314(22.3)>

〈표 2〉 2006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안

		(단위: 억원, %)		
		2005년 계획	2006년 계획안	증감(증감률)
수입	· 자채수입	4,602	4,889	287(6.2)
	· 정부내부수입	400	300	-100(-25.0)
	· 여유자금 회수	1,108	920	-188(-17.0)
	합 계	6,110	6,109	-1(-0.02)
지출	· 사업비	5,507	5,665	158(2.9)
	· 기금운영비	10	13	3(30.0)
	· 여유자금 운용	593	431	-162(-27.3)

〈표 3〉 2006년도 항만 분야 예산안

		(단위: 억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신항만 건설	9,838	10,352	514(5.2)
	권역별 항만 건설	2,634	2,338	-296(-11.2)
	일반항 건설	1,377	1,615	-62(-3.7)
	항만시설 유지·보수 등	3,450	3,488	38(1.1)
합 계		17,599	17,793	194(1.1)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과

수산물 안전관리에 역점 투자

수산자원의 감소와 WTO/DDA, FTA 협상 진전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산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6%(135억원) 증가한 8,363억원을, 수산발전기금은 올해와 거의 같은 6,109억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올해에 이어 불법어업인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며, WTO/DDA,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어촌·어항을 레저·휴양·관광 중심지로 조성하는 등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부문에 3,083억원을 반영하였다.

수산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는 어항건설과 바다목장화 및 인공어초·종묘방류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4,426억원을 반영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분산투자로 여러 경로에서 지적받아 온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건설을 완공과 시설보강이 시급한 어항 위주로 지원하는 등 투

자를 내실화하고, 자원회복의 거점 마련을 위한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투자를 확대하며, 지역특성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수산물 유통개선 부문에는 449억원을 반영하여 수산물도매시장 및 산지가공시설 등 유통시설 지원과 더불어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위생관리 사항을 기록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수산물 생산이력제’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자원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부문에도 405억원을 반영하였다.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이 요구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 분야에 1,617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국가성장동력인 해양과학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R&D 사업에 올해보다 22.3%(314억원) 증가한 1,720억원을 편성하였다.

선진국 대비 40%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수준을 2011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해양조사능력 등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양광물 등의 자원개발 및 실용화·산업화를 위한 해양개발 부문에 980억원을 반영하였다.

이 중에서도 쇄빙능력을 갖춘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착공소요와 제2 남극기지 건설을 위한 조사비 및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업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첨단 해양 바이오 기술 개발을 위한 '마린바이오 21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선점 경쟁에서 우리 항만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항만 운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신항만, 권역별 거점항만, 일반항 등으로 투자비를 배분하여 각 항만의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해양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연안 정비, 해양폐기물 정화, 오염해역 준설 등 해양환경 개선 분야에 637억원을 반영하였다.

해운·안전 분야에 1,269억원을 반영하여 유가 급등에 따른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확대, 선원 양성 및 복지, 낙도 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서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이도현상 완화 등을 위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의 운임을 일정수준 국고보조해 주는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표 4〉 2006년도 수산 분야 예산안


	[단위: 억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부담경감·소득보전	2,711	3,083	372(13.7)
생산기반 조성	4,800	4,426	-374(-7.8)
유통 개선	362	449	87(24.0)
기술개발·인력양성	355	405	50(14.1)
〈수산발전기금〉	〈6,110〉	〈6,109〉	〈-1(-0.02)〉
〈수산발전기금 포함시〉	8,228	8,363	135(1.6)
합 계	〈14,338〉	〈14,472〉	〈134(0.9)〉

〈표 5〉 2006년도 해양 및 해운·안전 분야 예산안

	[단위: 억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 해양	1,349	1,617	268(19.9)
• 해양개발	695	980	285(41.0)
• 해양환경	654	637	-17(-2.6)
- 해운·안전	1,095	1,269	174(15.9)
〈R&D(별도 통계)〉	〈1,406〉	〈1,720〉	〈314(22.3)〉
합 계	2,444	2,886	442(18.1)

주: R&D에는 항만 분야, 수산 분야, 해양 및 해운·안전 분야 모두 포함된 수치임.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의 과제가 놓여 있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와 거대공룡인 중국의 위협,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자원의 고갈과 시장개방, 해양 분야에서는 선진국의 과학기술 보호주의 강화와 지구환경 변화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위협요인이 성장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21세기 선진 해양한국'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방재정력 확충 통해 국가 균형발전 적극 지원



송언석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정책팀장
(esong@mpb.go.kr)

내년도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8.4% 늘어난 65조5천억원으로, 이는 국가 총지출 증가율 6.1%보다 2.3% 높은 수준이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46조 2천억원을, 특정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13조3천억원을, 균특회계로 5조9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이라는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수립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민간산업 부문의 기초가 부족한 지방이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산업을 개발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지방재정력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재정력 확충방향은 ①지방재정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②지자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며 ③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부여를 위해 성과평가 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 예산, 8.4% 증가한 65조5천억원

내년도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 8.4% 늘어난 65조5천억원으로, 이는 국가 총지출 증가율 6.1%보다 2.3% 높은 수준이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지자체의 자율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46조2천억원을, 특정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13조3천억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로 5조9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교부금의 전년도 증가율이 5.4%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2005년도 세수가 감소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편성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지방교부금을 줄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서, 2005년도 지방교부금을 예상 세수대로 감액할 경우 2006년의 증가율은

8.1%에 달하게 된다.

참고로 지방교부금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해 내국세의 일정비율(지방교부세는 19.13% 교육재정교부금은 19.4%와 교육세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조금의 전년도 증가율이 20.3%로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조, 노인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균특회계는 전년 대비 8.4%로 총지출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으로는 5년간 360조8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9.0%에 이른다. 이 또한 같은 기간 동안의 총지출 증가율 6.3%보다 2.7%p, 비율로는 약 42.9% 높은 수준이다.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자율·책임도 강화

지방재정 지원규모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지방이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우선 균특회계의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을 대상으로 정부는 시·도별 예산신청 한도만 제시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지·도서 종합개발 등 낙후지역 사업예산을 해당 시·군별로 직접 배분하여 시·군 주도로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였다.

‘新활력지역 사업’은 각 시·군이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시·군별로 3년간 60~90억원씩 지원한다.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도로, 상·하수도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먹거리 산업 개발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지원하여 낙후 지역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무조건적·시혜적인 지원에서도 벗어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강화하여 성공사례 조기 창출에도 힘을 계획이다.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에 발맞추어 책임성도 강화할 것이다.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도입하여 올 연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균특회계에 대해서도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여 올해 처음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총 11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이를 200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국가 균형발전 사업의 체계적·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신설·운영되고 있는 균특회계는 편성 2차년 도를 맞아 설립 취지를 더욱

〈표 1〉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 균형발전 예산

	(단위: 억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 지방재정 지원	604,251	654,934	50,683(8.4)
• 지방교부금	438,725	462,323	23,598(5.4)
• 보조금	110,782	133,254	22,472(20.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4,744	59,357	4,613(8.4)

〈표 2〉 2005~2009년간 지방재정 지원 및 국가 균형발전 투자계획

	(단위: 억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 지방재정 지원 및 국가 균형발전	604,251	654,934 (8.4)	715,424 (9.2)	781,364 (9.2)	852,005 (9.1)	9.0
• 지방교부금	438,725	462,323 (5.4)	502,165 (8.6)	547,826 (9.1)	594,537 (8.5)	7.9
• 보조금	110,782	133,254 (20.3)	146,713 (10.1)	162,118 (10.5)	179,789 (10.9)	12.9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54,744	59,357 (8.4)	66,546 (12.1)	71,420 (7.3)	77,679 (8.0)	9.1

주: 괄호 안은 증가율임.

균특회계 편성 및 운영의 기본방향을 '자율·균형·경쟁'으로 세우고, 회계 전체를 이 세 부문으로 특성화하여 발전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계정을 크게 자율편성 사업과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혁신계정은 경쟁을 통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사업으로 특성화하여 발전시킬 계획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균특회계 편성 및 운영의 기본방향을 '자율·균형·경쟁'으로 세우고, 회계 전체를 이 세 부문으로 특성화하여 발전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계정을 크게 자율편성 사업과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혁신계정은 경쟁을 통한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특성화하여 발전시킬 계획이다.

개발계정은 편성 1차년도에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재해예방 사업을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의 투자규모가 위축되었던 점과 지자체 자율편성 재원을 시·도에 배분함에 따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불만이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2006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지자체 자율편성 대상사업 중 일부(7천억원)를 국가직접사업(재해예방사업 4천억원)과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농산어

촌 개발사업 등 3천억원)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 사업이 적정규모 이상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율편성 사업에서 전환된 사업 외에 여타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였다.

또한 2005년도 예산 편성시 지자체 자율편성 재원을 과거 실적에만 기초하여 시·도에 배분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기본요소(인구·면적) 및 낙후도 요소(재정력지수, 노인인구비율, 주민세소득세할)를 종합 고려한 배분모델을 개발하여 지자체 자율편성 재원을 배분하였다.

특히 재원배분 모델 개발시 16개 시·도 예산담당관, 지방재정전문가 및 균형발전위원회가 참여하는 재원배분협의회를 운영하여 각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

균특회계의 투자방향은 '자율·균형·경쟁'

혁신계정은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지자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사업단 결정시 지역 간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우수 사업단에 대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사업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사업단은 적극 지원하고 부진한 사업단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2006년도 균특회계의 투자규모는 5조9천억원으로 이를 계정별로 보면 개발계정은 4조5천억원이고, 혁신계정은 1조4천억원이다.

개발계정의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은 지자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자율편성 대상사업(2조7,826억원)의

〈표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증감률)
- 지역개발사업 계정	41,978	45,360	3,382(8.1)
• 자율편성 대상사업	26,131	28,424	2,293(8.8)
•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	9,682	10,463	781(8.1)
• 재해예방사업	4,445	5,100	655(14.7)
• 그린벨트·토지관리 등	1,720	1,373	-347(-20.2)
- 지역혁신사업 계정	12,766	13,997	1,231(9.6)
합 계	54,744	59,357	4,613(8.4)

94.6%는 당초 지자체의 신청안을 유지하고 5.4% (1,513억원)만 재정지원 원칙·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율편성 사업 기준으로 13.0% (3,38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달성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핵심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였다.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은 소도읍 육성(617억원), 어촌·산촌 종합개발(309억원) 등 낙후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낙후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新활력지역 사업에도 당초 투자계획에 따라 2천억원을 반영하였다.

2006년도 균특회계 투자규모는 5조9천억원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2005년의 투자규모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된 점을 감안하여 2006년에는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혁신계정은 1조2,766억원에서 1조3,997억원으로 9.6% 증액 편성하여 지역산업 진흥 및 특성화 발전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산·대구·광주 광역시, 경상남도 등 4개 지역 산업진흥사업 2단계와 대전·울산 광역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9개 지역 산업진흥사업을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하고 각 지역의 신규 전략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예산을 2005년 300억원에서 2006년 475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이끌어 나갈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현재 창원, 울산, 구미, 광주, 원주, 반월·시화,

군산 등 7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 중) 예산을 2005년 300억원에서 2006년 463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역농업 클러스터와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예산도 증액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인적자원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덕R&D 특구를 우리나라를 대표할 R&D 및 산업화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2005년 100억원에서 2006년 25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상당수 사업이 아직 시작 단계이므로 본격적인 출발에는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분명 지방은 변하고 있고 작지만 소중한 성공사례도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국가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하에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

기금운용, R&D 투자 및 고용·서민주거 안정 등에 역점



김상규 기획예산처 기금운용계획과장
(skkim@mpb.go.kr)

정부는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61개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12.2% 가량 늘어난 358조6천억원으로, 기금운용의 혁신, 경기 여건에 따른 기금의 적극적 활용, 사업구조 효율화 및 예산과의 역할분담 확립,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통해 국방, 치안, SOC 투자, 사회복지 지출 등 다양한 재정사업을 한다. 예산은 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국방·SOC·교육 등 일반적인 재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된다.

사회보험료·부담금·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지원하거나 공적자금 상환 등 장기채무 관리와 주택자금·중소기업·정보화 등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1년까지 기금은 국회심의 없이 행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지난 2002년부터 국회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 점에서 는 예산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 확정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형태로

다시 국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나,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 범위 내에서는 행정부가 국회심의 없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예산보다 신속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같이 운용되고 있는 61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재정혁신·효율성·제도개선 등에 중점

정부는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금운용의 혁신, 경기 여건에 따른 기금의 적극적 활용, 기금사업구조의 효율화 및 예산과의 역할분담 확립, 기타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재정혁신 실현에 역점을 두었다.

기금과 예산을 포함한 5개년간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중장기적 시각에

서 내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난해부터 도입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더욱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둘째, 예산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기금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다.

셋째, 올해 신설된 지역신문발전기금·농작물재해보험기금·학자금신용보증기금과 내년에 신설되는 신문발전기금의 운용체계를 확립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넷째, 세입둔화로 인한 예산사정을 고려해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사업을 이관받아 지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3개 기금에서 8,994억원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기금운용과 관련한 제도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준수익률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기금평가 결과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성과에 따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기금으로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6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등으로 관리·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2007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국회심의를 받는 61개 기금의 내년도 총 운용규모는 358조6천억원으로, 2005년의 319조7천억원보다 12.2%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외형상으로는 기금운용 규모가 예산규모(156조5천억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기금운용 규모는 정부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하는 사업비 외에도 타 기금 및 특별회계와의 내부거래, 여유자금 운용, 차입금 상환 등 실제 재정활동과 무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운용 규모는 당해연도 기금의 전체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실제 정부 재정활동을 적절하게 나타내주는 지표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보전거래를 제외한 사업비 규모(2006년 72조9천억원)가 기금을 통한 실제 재정활동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IMF의 통합재정기준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출규모를 집계하고 있다. 통합재정기준으로 집계한 기금의 지출규모는 전체 재정지출 규모의 약 30% 수준이다.

〈표 1〉 2006년도 기금운용 규모안

	2006년 계획안		
	2005년 계획	2006년 계획안	증감(증감률)
전 체(61개)	319.7	358.6	38.8(12.2)

(단위: 조원, %)

〈표 2〉 2006년도 기금 수입계획안

	2006년 계획안		
	2005년 계획	2006년 계획안	증감(증감률)
- 자체수입	827,912	871,290	43,378(5.2)
- 정부내부수입	855,287	969,441	114,154(13.3)
• 예산출연	65,227	89,243	24,016(36.8)
• 예산용자	1,590	1,140	-450(-28.3)
• 공자기금 회수 등	788,470	879,058	90,588(11.5)
- 차입금	810,314	850,051	39,737(4.9)
- 여유자금 회수	703,529	894,736	191,207(27.2)
합 계	3,197,042	3,585,518	388,476(12.2)

(단위: 억원, %)

기금운용 규모, 12.2% 늘어난 358조6천억원

수입계획을 보면, 사회보험료·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이자수입 증가 등에 따라 올해보다 4조3천억원 늘어난 87조1천억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출연금 수입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보다 2조4천억원이 증가하였다.

차입 규모는 만기국채 도래 증가 등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였고,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금 신설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였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사업화 펀드에 1천억원,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1,700억원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및 전세자금 금리인하 등 서민주거 안정에 주력하였다.

으로 올해보다 4조원 수준 증가하였고, 여유자금 회수 규모도 국민연금의 투자회수 확대 등에 기인하여 올해보다 19조1천억원 늘어났다.

지출계획안을 보면, 61개 기금의 전체 사업비는 올해보다 3.7% 정도 증가한 72조9천억원 수준이다. 사회보험적 성격의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이 11.0% 증가하였고, 금융성·계정성 기금은 2.9% 감소하였다.

인건비·경비 등 기금운영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표 3〉 2006년도 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

	2005년 계획	2006년 계획안	증감(증감률)
- 사업비	702,655	728,989	26,335(3.7)
• 사회보험(6개)	203,602	225,902	22,300(11.0)
• 금융성·계정성(15개)	242,151	235,151	-7,001(-2.9)
• 사업성(40개)	256,901	267,936	11,035(4.3)
- 기금운영비	22,821	23,317	495(2.2)
- 차입이자 상환	176,561	168,505	-8,056(-4.6)
- 차입원금 상환	498,841	689,570	190,729(38.2)
- 정부 내부지출	671,496	792,513	121,016(18.0)
- 여유자금 운용	1,124,668	1,182,625	57,958(5.2)
합 계	3,197,042	3,585,518	388,476(12.2)

〈표 4〉 2006년도 기금 수지안

(단위: 조원)

	2005년 계획	2006년 계획안	증 감
사회보험(6개)	23.7	24.3	0.6
계정성(4개)	-18.8	-17.3	1.4
사업성(40개)	-6.7	-7.6	-0.9
합 계(50개)	-1.8	-0.6	1.1

주: 외국환평형기금 및 9개 금융성 기금은 기금 수지에서 제외

올해 대비 2.2% 증가한 수준이며,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국민연금의 여유자금 확대 등에 기인하여 5.2% 증가한 118조3천억원이다.

전체 기금의 수지는 국민연금의 수지흑자 확대 등에 따라 올해보다 1조1천억원 개선되었다. 다만 40개 사업성금의 경우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수지적자가 올해보다 9천억원 늘어났다.

한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예산출연 확대 등으로 계정성 기금은 수지적자가 1조4천억원 축소되었다.

R&D 투자 및 고용·서민주거안정 등을 집중 지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 등을 확대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 고용 및 서민주거안정 등에 역점을 두었다.

우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의 경우 수급인원 증가를 감안하여 적정소요를 반영하였으며, 산재급여의 경우 현장요양점검 강화를 통한 불필요한 급여지출 감소효과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다.

사회보험급여 대상인원은 올해 292만명에서 내년에는 338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수급인원 증가에 따라 급여지급액도 올해 14조2천억원에서 15조7천억원으로 증액 반영하였다.

한편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107억원)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을 적극 반영하였다.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의 보증공급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0조원 내외이며,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어가

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가에 대한 신용보증 대위 변제를 6천억에서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복권기금은 가용재원의 63%인 4,900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 집중 투입하고, 중풍치매노인 방문도우미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소외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국채 2,700억원을 신규 발행하여 R&D 사업화 펀드에 1천억원,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1,700억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新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등의 사업에 2,117억원(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반영하였다.

미래유망 IT신기술 개발지원의 경우도 올해 4,227억원에서 5,046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은 일반 시중금융기관이 기피하는 창업, 기술개발 및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등에 집중하였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을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0.5~1.0%p 하향 조정하여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유형별 특성화 교육 지원 및 장애인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올해 22억원에서 내년에는 82억원으로 지원금액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시장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비해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을 확대 반영하는 등 119조원 계획에 따른 농업인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반영하였다.

주40시간 근무제도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에 대비하여 체육 및 문화활동 지원 부문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축구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게임·애니메이션 등 문화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태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담뱃값이 500

원 인상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약 6,500억원 수준)으로 지역암센터 3개소, 노인전문병원 2개소 등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중점 지원하고, 생명노화연구 등 보건의료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대외교류협력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6자회담 타결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공동영농단지 등 新동력 경험사업에 4,900억원을 지원하고, 비료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확대하였다. 아울러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게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개도국 차관지원에도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신속적인 사업운영, 분리운영에 따른 책임성 제고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정보화 산업의 발전이나 주택보급률의 확대 등에 기금이 크게 기여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기금이 지나치게 많이 설치됨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원사용에 있어 ‘칸막이’ 현상으로 전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복잡한 재정구조와 회계·기금 상호 간의 자금거래로 인해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자체 재원도 없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의 신속성이 없는 기금은 점차 정비하는 것이 선진국형 재정운영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민간전문가에 기금준치평가 수행을 의뢰, 올해 최종 정비방안이 확정되어 응급의료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반영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효율적이며 국민의 정책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관련자료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고영선 외 2인, 2004, 한국개발연구원
성과관리의 의미/성과감독/사업평가/해외 사례/성과관리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보건의료부와 교육부문의 성과관리

중기재정 관리체계의 도입과 정착

고영선 외 2인, 2004,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 예산편성 방식의 현황/중기재정관리체계의 도입/중기재정관리체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조건

2003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지방재정의 현안과제와 대응방안

문형표 외 5인, 2003, 한국개발연구원
지방분권화의 추진과제/지역 간 형평성과 재정분권화/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출사무 조정방향/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재배분/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지방채 발행제도의 효율화 방안/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방안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연구

-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박형수 외 2인, 2004, 한국조세연구원
선진국의 중기재정 운용사례와 시사점/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완충·조정재원의 필요성과 규모 시산

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

김상현 외 4인, 2003, 한국조세연구원
과학기술 분야/교육 분야/환경 분야/농업 분야

기금제도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전택승, 2003, 한국조세연구원
기금제도의 현황 및 연구 배경/기금의 관리 : 통제와 자율의 대립/계약이론을 통한 기금제도 이론모형/미국의 기금제도/우리나라와 미국 기금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전택승, 2003,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우리나라 환경예산의 발전방안 연구

- 예산편성 및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강만옥 외 2인, 20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예산의 편성·운용 현황 및 문제점/환경분야 재정투자 성과평가/환경예산규모의 적정성 평가/주요 제도 개선 과제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장기복 외 3인, 200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운용방향/환경정보화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환경관련 연구개발 예산정책의 효율화 방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예산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PBS 제도를 중심으로

이민형, 200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시스템의 변화/선진국들의 정부연구기관 예산지원정책/정부출연(연) 출연예산흐름 구조 및 배분 현황/PBS 중심의 출연예산관리시스템 현황과 과제/출연예산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



우리 證市의 선진시장 도약 가능한가?

주가가 11년 만에 1000선을 돌파한 이후 지난 9월 22일
사상 처음으로 1200을 넘었다. 이러한 추세를 주식시장 규모의
확대와 시장의 체질 개선을 통한 선진시장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註>

장기·간접 투자문화 정착시켜야

국 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1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증시 상승세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체제에 편입되면서 기업 체질이 크게 개선된 점, 장기투자문화가 확산된 점이 원동력이 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불경기하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었고 이러한 부분이 국내 증시가 재평가를 받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적립식 펀드로 대변되는 간접투자문화의 확산으로 투자패턴이 단기투자에서 장기적 관점의 가치투자자로 변모하여 선진국형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점도 최고치 경신의 배경이라고 본다.

기업체질 개선과 간접투자 활성화가 상승 배경

최근 주가상승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내경기가 그동안의 위축에서 벗어나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



옥치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cjoak@krx.co.kr)

영되고 있다.

수출이 꾸준히 두 자릿수 증가를 유지하고 있고, 민간소비도 10분기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경기회복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둘째, 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국내증시에 대한 재평가(re-rating)가 진행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수익성도 세계 기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셋째, 증권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은 주가상승의 일등 공신이다.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실제로 상당 규모의 시중자금이 간접투자시장을 통하여 증시에 유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인 적립식펀드 잔액이 9조원을 상회하고 있고, 향후에도 고령화 추세와 기업퇴직연금제 시행 등으로 간접투자시장의 외연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제 주식투자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간접투자로 옮겨가고 있다.

넷째, 가계의 자산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고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투자패턴도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단기투자에서 장기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자산 운용 대상도 실물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전환되는 투자패러다임 변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은행예금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기 회복과 함께 추가 상승 가능성 높아

최근의 증시상승은 과거 경기의 일시적 호황기에서 나타났던 단기적 상승이라기보다는 우리 증시의 구조적 변화와 대내외 투자여건의 개선이라는 큰 흐름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흐름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우선, 현재 국내경기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세를 구가하는 괴리(de-

coupling)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고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펀더멘탈 측면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면 추가 상승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최근 국내 연구소들이,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 성장률(3.0%)을 크게 상회하는 4%대 후반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이러한 기대를 더욱 밝게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가수준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 추가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최근의 추가상승과 더불어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기업의 수익성에 비해 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가수익비율(RER)이 신흥시장 평균인 11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경제규모 대비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자본화율(시가총액/GDP)이 75%에 불과하다

는 사실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우리 증시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국내외 증시전문가들의 전망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증시를 전망한다는 외국계 증권사들도 우리 증시의 구조적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기관투자가 저변 확대로 증시 구조 안정을

현재의 상황은 우리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증시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지만,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질적인 성숙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기업·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주식의 공급주체인 기업은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를 증시하는 경영풍토를 다져 나가야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과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 국제적 경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여 기업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자는 증권시장이 투기의 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건전한 투자의 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합리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과거 주식 일변도의 투자에서 상장지수펀드(편집자註: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 주식워런트(편집자註: 특정 주식에 대해 사전에 정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 등

새로운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고객 자산의 관리를 하는 기관투자자는 고객 자산가치의 극대화는 물론 증시의 안전판(last resort)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막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매매행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저변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 1980년대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일본증시가 안정적인 주식 소유구조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여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15년'을 경험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현재의 호기를 살려 시장규모의 확대와 시장의 체질 개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어렵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간접투자문화의 정착을 위해 장기투자에 대해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우량주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 우량 공기업과 생보사, 외국주의 상장도 서둘러야 한다.

클린턴 前 미국대통령이 뉴욕의 증권시장을 미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자랑하였듯이 우리 증권시장도 우리 모두가 소중히 가꾸어야 할 국가적 자산이다. 증권시장이 새로운 도약을 하고, 이로 인한 혜택이 시장참가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참가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

기업체는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를 증시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주식워런트 등의 새로운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대기업 계열사, 우량 공기업 등의 상장을 서둘러야 한다.

정책일관성 유지로 투자 여건 개선을

연젠가는 올 것이라던 그 날이 왔다. 주가지수가 증시 사상 네 번째로 1000선을 돌파하고 지난 9월 하순에는 1200선마저 훌쩍 넘어서 증시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긴 것이다.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올해 들어서만 30~50% 정도 상승함으로써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했던 박스권(box 圈)을 벗어났다. 증시의 활력이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을 불어넣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꾸준한 자금 유입과 기업체질 개선이 주동인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과감한 구조조정과 선진제도의 도입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가지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주가상승률은 GDP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고 GDP 대비 시가총액으로 표시되는 자본화율이나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로 표시되는 주가수익비율(PER)도 선진국은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이제야 겨우 경제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khyon@yonsei.ac.kr)

받게 된 것이다.

주가의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 주가가 한 단계 도약한 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이던 복핵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한몫했다. 그러나 주가급등의 주동인은 수급면에서는 꾸준한 증시에의 자금 유입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체질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당한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 증시에 흘러들어 왔다.

안타깝게도 국내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을 팔고 증시를 떠나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말까지 3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21조3,531억원의 주식을 순매수해 지분율이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인 40%를 넘어서게 되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자 개인들은 뒤늦게나마 지난해부터 간접투자의 형태로 증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최근 다량의 외국인 매도를 소화해 내면서 증시를 견인한 것도 주식펀드의 힘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인기를 끌기 시작한 적립식 펀드와 변액보험의 우량주식에 대한 수요는 괄목할 만하다. 펀드계좌는 지난 7월 말 약 800만 개로 이미 직접투자계좌 수를 넘어섰으며 지수가 1200선을 넘어서면서부터는 하루 평균 2천억원의 자금이 주식형 펀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서, KDI의 공식 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드에 유입되어 지난해 말 8조5천억원이던 주식형 펀드의 잔액이 15조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구조조정이 결실을 보아 기업의 재무구조와 실적이 모두 개선되었다. IMF 외환위기 직후 평균 200%를 넘던 상장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2003년 이후에는 100% 이하로 낮아져 부도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2001년 이후 4년간 98.9%나 증가했으며, 지난 1990년대 중반에 비하면 열 배 가량 상승했다. 이러한 체질개선과 이익증가가 주가상승을 뒷받침한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들은 적극적인 기업설명회(IR)와 함께 배당지급 및 연간 10조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가 가치를 늘려 주가 상승에 일차적으로 공헌했다. 대기업들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 과거처럼 주가 상승기에 과도한 증자로 증시에 몰랑부담을 주는 일도 없다.

한국기업 재평가는 진행 중

우리 기업에 대한 재평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저평가 여부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주가수익비율은 올해 초 KOSPI 200 기준으로 7배 수준에서 최근 9.5배 정도로 높아졌다.

그러나 2000년과 2002년의 주식시장 고점에서의 주가수익비율 수준이 10.7배와 10.6배였고,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15배 전후였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선진국 증시 평균(17배)은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홍콩 15.2배, 대만 13.2배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 밖에 중국이나 태국 등 신흥시장 평균(12배)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주가의 상승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다 인도나 일본으로의 자금이동 가능성도 있어 외국인이 주식을 일부 처분할 수도 있다. 고유가와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여건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미국 등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금융환경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내년쯤 미국금리가 안정되고 우리나라의 경기회복 기대치가 높아지면 일부 조정 과정은 거치겠지만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

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대체 투자안이 별로 없는 데다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아시아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어 투자매력이 큰 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증시를 이끄는 외국인투자자와 펀드자금이 장기투자 성격을 갖고 있어 주가 안정 등 증시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국내 콜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기관의 단기 유동성 저하도 우려되지만 예전과 같은 고금리 수준에 이르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 내수경기가 회복되고 설비투자도 증가하면서 국내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저평가 해소와 증시 주변의 풍부한 자금 등에 힘입어 장기적인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주식투자비중 확대 예상돼

개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주식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재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달하는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이처럼 낮

기업은 경쟁력 확보, 지배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배당 등을 통해 주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보다 확실한 환경 속에서 장기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정책을 확보해야 한다.

은 수준의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7.9%밖에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식이 개인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조금 넘는 셈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식에 냉담하다 보니 우리나라 주식의 4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는 상황까지 초래된 것이다.

개인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부동산거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 제반 거래비용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와 보유세를 포함하면 투자수익률이 크게 낮아지게 될 것이다. 최근 주가 상승,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환율 변동, 금리 상승 등의 금융환경 변동으로 주택보유 욕구가 줄어들고 임대주택이나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구입이 보편화되면 개인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한편 저금리와 고령화로 개인과 연·기금이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면 주식의 공급·유통 물량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 주가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 기업들은 이익 증가와 신규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해 유보이익이 충분한 데다 은행권을 통한 간접금융을 선호해 증자를 꺼리고 있다. 상장폐지기준 강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감자와 이익소각에 따라 오히려 주식 수가 감소했다. 여기에 장기보유 성향을 가진 상장법인이 경영권 보호와 주가관리 차원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늘리고 외국인 및 기관의 보유물량이 증가하면서 유통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정책일관성 유지 노력 필요


주가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선진경제 실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기업과 증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각 경제주체들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이익의 증가에 힘

쓸 뿐만 아니라 꾸준히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배당 등을 통해 주주들이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으로 국가 리스크 다음으로 정책일관성 부족이 꼽히고 있는 만큼 기업이 보다 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장기 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경제정책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한편, 주식투자 특히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도록 세제상의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

증권사는 건전한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산운용사는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거래소는 주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우량 공기업과 대기업 등에 대한 상장유치에 주력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상장은 증권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여줄 것이다. 한편 시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작전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개인도 과거처럼 미확인 정보나 테마를 추종하거나 작전세력에 의해 부화뇌동하지 말고 투자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식가치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성숙한 투자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 교육이 학교·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증권 관련 제도개선·규제완화 필요

주 식시장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강세흐름을 유지하는 이유는 경기의 순환적 등락과는 별개로 시장 자체의 구조적 진전 및 체질 개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현석
삼성증권 연구위원
(hs007oh@naver.com)

최고치 경신은 구조적 진전의 산물

우선 ‘기업이익의 질 (earnings quality)’이 꾸준히 향상됐다.

2002년 이후 상장기업의 이익률은 추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는 역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중국의 수입수요 증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겠지만, 한편으로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개선 및 자기자본수익률(ROE)의 증가가 이를 방증한다.

여기에 추가해 부채비율의 축소와 구조적인 저금리도 이익 개선에 기여했다. 바로 이 점이 과거와 달리 경기의 진폭 대비 기업이익의 변동폭이 축소된 이유이다. 시장(市場)은 이를 수년간 검증하면서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단기 모멘텀 투자에서 중장기 가치 투자로 패

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사실 단기 모멘텀 투자는 수급의 교란 요인이다. ‘Buy Korea’라는 용어가 폄하했던 지난 1999년에서 2000년의 주가 흐름은 이를 대변해 준다. 당시 ‘스팟 펀드(spot fund)’가 펀드문화의 주류를 형성했는데, 이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곧바로 청산되기 때문에 주식의 보유기간이 상당히 짧았고 주가의 변동성을

높이는 이유로 작용했다.

반면 2004년 이후 주식형 펀드에 들어오는 자금은 저축을 대체하는 투자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단기 등락보다는 중장기 전망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 수급의 든든한 원군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은 비관련 사업다각화를 최소화하고 있고, 이는 低투자로 표출되고 있다. 물론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설비투자 위축은 고용 불안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사내에 현금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 말 기준 상장제조업체의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보유액이 5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여타 투자기회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현금보유액의 일부를 주주가치 증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의 활성화, 배당지급액의 드라마틱한 증가가 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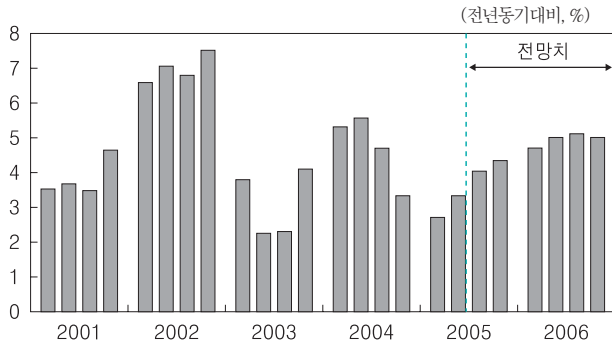
지금까지 언급한 기업이익의 질 개선,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 주주친화적인 정책이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의 주요한 배경이다. 결국 현 주가 상승은 경기의 순환적 회복에 의존한 것이 아닌 구조적 진전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경기과 실적의 주기를 좌우할 전망

궁금한 점은 앞으로의 주가 향방인데, 구조적 진전에 따른 주가 반영이 상당폭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경기과 기업실적이 주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향후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같은 관점에서 올해와 내년의 GDP 성장률을 각각 3.6%와 4.9%로 전망한다. 사실 2000년 이후 두 번의 소순환 사이클은 내수와 수출이 교대로 견인했던 각개전투식 반쪽 회복이었다. 이처럼 한 쪽은 살고 한 쪽은 죽는 불균형 성장이 나타나면서 2000년 이후 경기회복은 단명에 그쳤는데, 우리의 예상처럼 앞으로 균형성장이 진행된다면 시장은 또 한번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證市가 아직 저평가받고 있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증권 관련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도덕적 해이 차단, 다양한 주식관련 신상품 도입 등이 시급하다.

한편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겨냥한 초기 금리인상의 경우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이 본격

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리고 물가상승 압력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해짐으로써 과거와 달리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이후 콜금리 인상은 세 차례 있었는데, 금리인상 이후 3개월간 종합주가지수(KOSPI)는 평균 126p 하락하였다. 이는 당시의 콜금리 인상이 경기 후행적 선택이었던바, 금리인상 자체의

악재보다는 경기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이 주가 하락의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따라서 선제적 대응으로 간주되는 이번 콜금리 인상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또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회복 속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는 여전히 경기 확장·중립적이고, 금리인상 속도도 매우 완만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소비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 같다.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감당할 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금융회사의 소비자신용공급 확대 경쟁이 시작되어 대출금리 인상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보험 등 '경기민감 가치주'가 주목받을 듯

금리상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향후 상정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금리와 주가의 동반 상승이다. 이를 주식시장의 사계

(四季)로 표현한다면, 유동성 장세에서 진일보한 실적 장세라 할 만하다. 여기서 관심이 가는 것은 실적 장세가 가져올 시장 내 투자환경 변화 및 업종별 투자 전략이다. 결론부터 언급하면,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살아나는 환경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은 '경기민감 가치주'이다.

먼저 가치주는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 성장주 대비 우위를 점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성장주는 미래 급증하는 현금흐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금리상승이 할인율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는 일정 수준 감소할 것이다.

반면 가치주의 경우 가까운 시일에 현금흐름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즉, 가치주는 현재가치로 할인한 '이익전망의 시계(earnings visibility)'가 상대적으로 투명하다는 강점이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이다.

경기민감주를 매수해야 할 이유는 경기가 살아나는 국면에서 매출 및 영업 민감도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불황 국면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가 고스란히 이익으로 계상될 것이다.

결국 경기민감 가치주가 현 환경에서 최적의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동

차·금융 업종의 주가 강세는 일차적으로 개별업종의 호재를 반영했지만, 그 이면은 이와 같은 일련의 환경 변화를 인식한 결과이다.

차선택은 '경기민감 성장주'이다. 경기회복 및 이익 성장의 긍정적 영향이 금리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장세 성격을 풍부한 유동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실적에 근거한 주가 재편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에 근거할 경우 경기민감 성장주는 경기방어 가치주 대비 유리한 투자 대안이다. IT·인터넷·경기소비재가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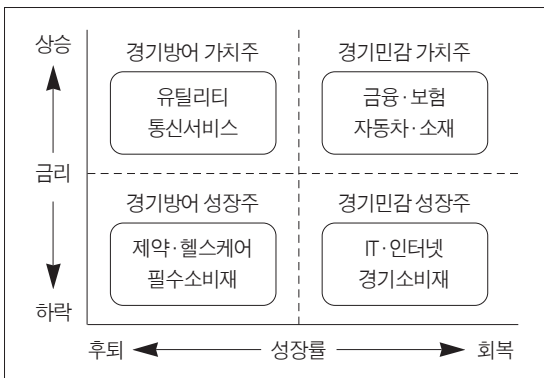
증권 관련 제도개선·규제완화가 과제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승 추세가 전개되고 있지만,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과제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예상이익을 기준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을 추정해 보면, 종합주가지수 1200p에서 9.1배 수준이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대만시장은 12.4배로 우리 시장 대비 36% 정도의 프리미엄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미 선진시장으로 분류된 홍콩과 싱가포르 시장의 주가수익비율은 각각 15.3배와 14.0배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시장이 가치평가 기준으로 할인 거래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전과 비교하면 상당폭 개선됐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이이익의 변동성이 크게 축소된 점, '묻지마 투자'로 표현되는 투기적 거래비중이 격감한 점, 국가신용등급 상향 및 대외신인도가 제고된 점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 관련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차단, 다양한 주식관련 신상품 도입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그림 2〉 금리와 성장률, 국면별 주도주



중동부 유럽의 최대 시장



오세광

KOTRA 부산사무역관장
(saekwang@kotra.or.kr)

지난 9월 25일 실시된 폴란드 총선에서 우파 야당이 좌파연합 여당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5월 폴란드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경제적 도약을 노리고 있는 시기에 치러져 그 결과가 많은 관심을 모았다.

총선에서 1, 2위를 차지한 'PiS(법과 정의당)'와 'PO(시민연단)'는 조만간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좌파 정권의 부정부패에 식상한 국민들의 깨끗한 정치에 대한 염원을 등에 업고 집권에 성공한 중도우파 정권이 앞으로 폴란드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신규 EU 회원국으로 한 차원 높은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폴란드로서는 새 정부가 최적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EU 가입 이후 경기 고공행진 중

2004년 5월 1일 폴란드가 헝가리·체코 등 9개 국과 함께 EU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이 경과했다. 폴란드 정부와 국민은 EU 가입이 폴란드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상승이 두드러지는데, 2004년 성장률은 5.3%로 지난 199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5년 성장률은 3.5% 정도로 조정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나, 2006년에는 4% 이상으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수출은 서유럽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37.7%, 올해 상반기 27.7%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서유럽에의 진입장벽이 철폐된 식품류,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한 자동차·전자·가구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EU 가입을 틈탄 서구 기업의 동진(東進)도 가속화되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어나고 있는데, 2004년 직접투자 유입은 78억달러를 상회하여 2000년 이후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피치·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폴란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반영하여 올 3월 폴란드에 대한 신용도를 '안정(stable)'에서 '긍정(positive)'으로 높였다.

EU 가입과 관련하여 폴란드는 물가 급등, 서유럽 제품의 시장 잠식, 많은 폴란드 업체의 몰락 등을 크게 우려하였으나, 실제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거나 현실화되지 않았다. EU 가입을 전후하여 수개월간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잠시 비

관론이 힘을 얻기도 했지만, 2004년 후반부터 물가는 진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경기호조를 한 겹 벗겨보면, 폴란드 경제의 기저에는 여전히 많은 후진적인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EU 25개 국 중 실업률이 가장 높으며, 도로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다. 관료주의와 복잡한 조세체계, 형식주의(red tape) 등이 외국 자본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임 정부는 재정개혁을 야심차게 추진하려다 실패의 쓴맛을 보았다. 또한 잇따른 부정부패 사건은 이번 에 정권 교체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

親기업 정권 출범은 우리 기업에게 긍정적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PiS나 2위를 차지해 연립정부에 참여할 PO는 모두 기업활동에 친화적이나, 정책

기조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PiS가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 사회안전망 등의 유지)'를 중시하는 데 비해 PO는 '자유주의적(liberal)' 경제관을 펴고 있다. 두 정당의 분야별 주요 정책은 <표 2>와 같다.

한편, PiS가 총리 후보로 지명한 카치미에르즈 마르친키에비츠(Kazimierz Marcinkiewicz)는 총선 직후 경제정책의 5대 방향을 제시했는데 ①고용을 통한 성장(일자리 창출기업에 법인세·사회보장세 감면 등) ②기업친화적 법규(인·허가 축소, 기업설립기간 단축, 준조세 철폐 등) ③강력한 투자(투자기관 설립, EU 기금 흡수, 대규모 주택 건설 등) ④성장을 위한 재정 금융정책(이자율 인하, 재정적자 300억PLN 이하로 유지 등. 'PLN'은 폴란드 화폐단위로, 미화 1달러는 약 3.3PLN) ⑤공공재정의 투명성 등이 그것이다.

마르친키에비츠 총리 후보는 PiS가 지명했지만, 자유주의적 성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하튼 폴란드는 앞으로 연립정부 구성과 세부 경제정책 입안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험난한 여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PiS-PO의 정책기조와 세부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연정 수립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합의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경우 단기적인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두 정당 간 정책 조정과 연정 구성에 대해 현지에서는 대체로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이보다는 올바른 경제정책이 수립되더라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폴란드에서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두 정당의 공약 중 핵심사항의 하나인 조세체계 개선은 빨라야 2007년이나 가능

<표 1> 폴란드의 주요 경제지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GDP(억달러)	1,830	1,886	2,069	2,418
실질경제성장률(%)	1.0	1.4	3.7	5.3
1인당 GDP(달러)	4,561	4,882	5,418	6,335
물가상승률(%)	5.5	1.9	0.8	3.5
실업률(%)	18.5	19.7	19.3	18.0
수출(억달러)	360.9	410.1	535.7	737.9
수입(억달러)	502.7	551.1	680.0	879.1
무역수지(억달러)	-141.8	-141.0	-144.3	-141.2
경상수지(억달러)	-53.7	-50.0	-46.0	-35.9

<표 2> 연립정부 참여(예정) 정당의 경제정책 내용

	PiS(법과 정의당)	PO(시민연단)
정책 기조	사회적 연대에 기반	자유주의에 기반
조세체계	단순화 및 감면	단순화 및 감면
세율	개인소득세 2단계: 18%, 32% 법인세, 부가세: 18%	15% 단일세율(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세)
유로존 가입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 후 가입	최대한 빨리 가입
관료주의	타파	타파
민영화	핵심 부문의 경우 정부가 지분 보유 은행권 외국자본 장악 반대	민영화 가속화
사회보장	사회보장세 축소	사회보장세 축소
기타	기본적 사회안전망 유지 강력한 반부패 정책	과감한 규제 철폐

할 것으로 보인다. 마르친키에비츠 총리 후보는 조세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6년 중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총리 후보의 5대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사안 간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벌써 나오고 있다. 예컨대, 재정적자를 300억PLN 이하로 유지하는 동시에 주택 건설 등에 140억PLN을 추가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재정적자를 26억PLN 감축하여 300억PLN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행정부 내의 절감을 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U의 지원기금을 사용하는 인프라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수행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다. EU 기금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25~50%의 자금은 폴란드 국가예산에서 나와야 하는데, 차기정부가 이러한 자금을 문제없이 조달할 수 있는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서유럽 진출 교두보로서의 리點 살려야

우리나라는 1989년 11월 폴란드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는 한때 '대우사태' 등으로 주춤하기도 했으나,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폴란드의 EU 가입 후 양국 교류는 가속화되고 있다.

EU 가입 이후 1년간(2004년 5월~2005년 4월)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수출은 무려 100.2%가 늘어나 폴란드는 EU 新가입 10개 국 중 슬로바키아(188%)와 함께 우리의 수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측 통계로 보면, 올 상반기 폴란드의 對한국 수입은 62.9%가 늘어나 한국에 대한 수입 신장률이 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 중 가장 높았다.

또한 폴란드는 2004~2006년 128억유로의 EU 기금을 지원받아 교통·수송 인프라, 환경시설 개선 프로젝트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되는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진출 여지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폴란드 투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의 최대시장이며 서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의욕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 폴란드에 親기업 정권이 출범한다는 점은 우리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청에 의하면, 2004년 말까지 우리나라는 11억7천만달러를 투자하여 아시아 국가 중 최대 투자국의 자리를 지켰으며, 전체로는 13위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LG전자(2010년까지 1억1천만 달러, 디지털TV 생산), LG필립스LCD(2011년까지 4억3천만유로, LCD모듈 생산) 등의 초대형 투자프로젝트가 연달아 발표되었다.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의 최대시장이며 서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의욕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 폴란드에 親기업 정권이 출범한다는 점은 우리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폴란드는 EU 가입을 계기로 경제발전을 위한 호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선진경제로 도약할 것인지 혹은 그냥 유럽의 주변국으로 주저앉을 것인지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서있는 것이다. 마침 기업활동을 적극 지지하는 정권이 출범하게 되어 도약을 위한 여건은 좋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폴란드의 새 정부가 갖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고, 여기에 발맞춰 우리 기업의 진출도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

경기조절정책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경기순환의 파동을 인식하여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불안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통화신용정책' 혹은 '통화금융정책'이라고도 한다.

통화정책의 체계는 통화정책수단(instrument), 통화정책의 운용목표(operating targets), 통화정책의 최종목표(goals)로 구성된다.

통화정책 수단이란 통화정책의 운용목표인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통제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정책도구를 말한다.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재할인율정책(rediscount rate policy)·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 policy)이 있다. 선별적 정책수단으로는 대출한도제·이자율규제정책·여신관리제도 등이 있다.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는 통화정책의 최종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운용목표로는 가격지표로서 이자율과 환율, 수량지표로서 통화량이 있다. 예컨대,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로 설정하였을 경우 통화정책당국은 직접 물가를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꾀하는데 이 통화량이 통화정책의 운용목표가 되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는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물가안정·완전고용·국제수지균형·경제성장·공정분배 등이다.

한편,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이나 정부수입을 변화시켜 경기조절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즉, 불경기에는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경감, 재정지출 확대 등의 방법으로 총수요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고 호경기에는 경기과열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감축하여 총수요를 억제한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경기상황의 파악, 예산안 작성, 국회의 동의,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의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지출을 늘려 사업을 벌일 경우 국민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기조절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에 직면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자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재정적자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진국들은 재정정책의 기초를 설정할 때 단기적인 경기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제고와 국민세금의 효과적 활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경기조절은 상당 부분 통화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정책해설

68 >>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 / 이동진

71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 최대순

75 >>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지원 / 최남호

79 >> 벤처기업 요건 및 확인제도 개편 / 김성섭

83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도입 / 서명교

88 >>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 김순중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



이동진

과학기술부 인력기획조정과장
(dongjin@most.go.kr)

우 리나라의 대학생 수는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1970년 17만9,877명에서 2004년 273만 4,238명으로 약 15배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학과 대학생들의 질적 경쟁력은 세계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기반 취약

인구 천명당 이공계 졸업생 수는 2001년에 OECD 평균이 1.56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85명으로 이공계 분야 과학기술 인적자원 배출 규모가 선진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The Times*지가 2004년에 발표한 세계 대학 평가결과에 따르면, 일본·중국·싱가포르·홍콩·인도 등 아시아 5개 국의 우수 대학들이 상위 50위 이내에 포진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서울대 118위, KAIST 160위, 포항공대 163위로 3개 대학만이 세계 200위 이내에 들어 있다.

창조적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기반도 취약하다. 교수 1인당 학생수가 우

리나라는 2004년에 39명이나, 일본과 미국은 2002년 기준으로 각 11명, 14명이며, 총 연구비 중 대학에서 사용하는 비중도 10.1%(2003년)로 주요국에 비해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5년도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산업인력 및 기술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부족으로 산업현장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60개국 중 4위로 최상위 수준이나,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요구 부합도는 52위로 대학들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육·연구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산·학 협력이 아직 미흡하고 기업이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을 활용하는 비중이 낮아 산·학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전체 연구개발비 중 대학사용 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기초연구의 상당부분이 대학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천·기반 기술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01년 미국 특허청 등록특허의 평균 인용도가, KAIST가 2.4%, 포항공대가 2.7%에 그쳐 미국 전체의 3.7%에 못 미치는 등 대학 보유 특허의 질적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 부문 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비율도 2004년 말을 기준으로 대학이 8.2%,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

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교육·평가제도개혁을 위해 대학의 운영을 혁신하고, 핵심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며, 수요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해 산·학연계를 촉진하고자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관 등 공공연구소가 25.0%로 대학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지원실적이 미흡한 편이다.

이울러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를 전후하여 ‘Academic Capitalism’ 단계로 진입하여 산·학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후반에 이 개념이 도입되어 2003년에 들어서부터 대학별 산·학 협력단이 설립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는데, 교수업적 평가가 교육·연구 위주로 되어 있어 산·학 협력 성과의 반영비중이 낮은 편이다.

대학운영 혁신, 연구역량 제고, 산학연계 등에 중점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가발전을 견인할 과학기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8월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3대 부문, 10개 중점과제, 28개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1부문은 이공계 대학의 교육·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대학 운영의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이공계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대학의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의 다양화·객관화를 추진하고, 교수의 특성에 따른 교수평가제도 도입을 유도하며, 대학 정보의 체계적 축적과 공개를 통해 자율적인 혁신을 하고자 한다.

둘째, 대학 간 및 대학 내 경쟁 촉진과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다. 연구비 중 간접경비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비관리 인증제를 도입하며, 이공계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이공계 인력의 질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학부과정의 커리큘럼을 다양화·모듈화하여 진로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공학교육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정착과 확산에 주력할 것이다.

제2부문은 핵심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할 것이다. 연구중심 대학의 육성과 특성화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며, 차세대 융합 신기술, 학제 간 프로그램 설치·운영을 통한 핵심 연구인력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

둘째, 이공계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며, 해외 현장 인턴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대학원생의

〈표〉 교육경영 세부항목별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IMD 조사)

세 부 항 목	순 위	
	2004년	2005년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수학)율	5위	4위
교육체계가 경쟁사회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정도	52위	43위
대학교육이 경제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59위	52위
문맹률(15세 이상 성인 문맹률)	34위	33위
국민들의 경제적 교양수준	24위	18위
금융 교육이 국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정도	51위	46위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를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정도	52위	45위
회사와 대학들 사이에 지식이전이 충분한 정도	42위	21위

주: 자료대상 - 60개국

자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2004 / IMD 2005.

안정적 연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학자금 융자 확대 및 'Fellowship'을 도입할 계획이다.

제3부문은 수요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 연계 촉진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산·학 연계에 의한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것이다. 산·학 협력 특별세액 공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주문형 맞춤교육을 활성화하며, 이공계 교수 임용시 산업체 근무 경력을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수 연구년제의 운용을 개선하여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 이공계 학생을 산업체 R&D로 유인하며, 지역 산업특성을 고려한 범부처적 '산·학·연 협력 연구실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산·학 협력 유형별 인력양성 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글로벌 혁신기업에는 차세대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산·학 기술인력을 양성하며, 일반 중소기업에는 현장 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 이공계 인력의 재교육·계속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지역의 일반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 지역 산업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 중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일반대학의 산업체 인력에 대한 계속교육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산학연계에 의한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것이다. 대학별 '산·학 협력기술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하고, '기술 사업화 거점 형성(Innovation Hot Spot)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며, '연구개발 전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의 실천계획 내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6조4,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가칭)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령을 제정하고 「학술진흥법」 등 13개의 법령을 개정할 것이다.

이공계 대학의 위상 및 경쟁력 제고 기대돼

정부는 앞으로 창조적 인재육성 실천계획의 과제들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

별법」에 근거한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2006~2010년)'에 포함하여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첫째, 대학별로 특성화를 도모하고 경쟁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하여, 2010년까지 세계 200 위권 내에 10개의 대학이 진입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세계적 연구경쟁력을 갖춘 신진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인건비 지원혜택이 평균 25~30% 상승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산·학·연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대학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여, 이공계 인력의 수도권·대전 집중도가 2003년 기준 67.3%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넷째, 기능인력과 기술인력 등 유형별 인력양성 시책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지향형 인재 공급역량을 확충하여, IMD가 평가하는 대학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가 2004년의 59위에서 2010년에는 20위권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이공계 인력의 재교육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의 비중이 2002년 16.2%에서 2010년에는 25%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다.

여섯째, 성장동력 분야 참여기업의 기술 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혁신 주도형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 대학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 비율이 2003년의 4.7%에서 2009년에는 10%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관련 자료 ▶

- 과학기술부 인력기획조정과,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06~'10) 2006년도 시행계획 수립 착수, 2005. 9. 24(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참조)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최대순
산림청 백두대간보전과장
(choi5012@foa.go.kr)

백두대간은 백두산이 우리나라 산의 뿌리로 성립되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보는 전통 산줄기의 개념이다.

19세기 초 「산경표」(편집자註 : 조선 영조 때 신경준이 우리나라의 산줄기에 대한 체계를 도표로 정리한 책)를 통하여 체계화된 우리나라 산줄기는 1대간(大幹) 1정간(正幹) 13정맥(正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속리산·덕유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줄기로 총 길이가 1,400km에 이른다.

남한의 백두대간은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684km로 6개 도(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32개 시·군에 걸쳐 있다.

백두대간의 가치 보존 위해 법률 제정

백두대간은 지형·기후·토양·수문 등 자연환경과 온갖 동·식물이 어우러진 생태계 속에 사람이 함께 살

아가는 복합적인 3차원의 공간으로 그 가치가 매우 다양하다. 백두대간·정간·정맥은 모두 산계(山系)의 연속으로 파악되어 우리 국토에 대해 지리적으로 일체감을 갖게 하며, 하천유역을 가르는 분수계(分水界, 한강·금강·낙동강·섬진강·영산강 등 5대 강의 발원지)로서 국토 공간구조의 골격이자 생활영역과 문화양식의 기반이 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인문지리적 바탕이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소나무·참나무류가 자라는 산림자원의 비축기로서 천연림이 분포하는 산림 구성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입지와 자원의 특성에 기인한 농림업, 광업 및 관광업 등의 산업적 자원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민족정기의 상징이며, 중요한 유·무형의 문화재 및 사면니증적 민간신앙 등이 남아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터전이면서 국립·도립 공원 등이 입지하여 국민 여가와 휴양·생태관광 및 교육장소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백두대간의 개념과 실체를 알리고 보전하기 위해 백두대간 관련 문헌집을 정책자료로 발간하는 한편, 백두대간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2002년)’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백두대간의 개념을 정립(2003년)하였으며,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의 개발행위 억제,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확대, 벌채 제한, 훼손지 복원·복구 등

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호지역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향후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백두대간의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용·공공용 사업시에도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공법의 시행을 의무화할 것이다.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백두대간 보호·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각종 개발로부터 백두대간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법률 제정을 추진, 2003년 12월 31일자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법률 제7038호)하였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4·5조),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제6조),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7조),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제8조),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의 토지 매수(제10조), 백두대간 보호위원회 설치·운영(제11조)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종 개발행위의 제한이다.

석회석 광산의 경우 도별 감량총량제를 도입하여 훼손지를 점차 줄여 가고, 국민생활과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공용·공공용 사업 이외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면적

(단위: ha, %)

	핵심구역(비율)	완충구역(비율)	합 계
강원	94,143(70)	39,765(30)	133,908
충북	12,001(34)	23,615(66)	35,616
전북	14,329(80)	3,558(20)	17,887
전남	3,420(65)	1,803(35)	5,223
경북	31,961(67)	15,880(33)	47,841
경남	14,096(61)	8,856(39)	22,952
합계	169,950(65)	93,477(35)	263,427

주: 괄호 안은 비율임.

핵심구역·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정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핵심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으로 하였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한반도 백두대간 중 남한지역(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부터 시작하여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산계(山系)의 연속성을 가진 백두대간 마루금 및 주변지역으로서 6개 도, 32 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걸쳐 총 면적 26만3,427ha(핵심구역 16만9,950ha, 완충구역 9만3,477ha)가 지정되었다.

지역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을 위하여 3회에 걸친 공청회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난해 5월 12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작업을 통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준비를 위한 기초도면을 작성하였고, 2004년 6월 25일 해당 지자체 및 지방산림관리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보호지역 기초도면을 배부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기초도면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초적인 성격의 도면임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은



마치 기초도면의 전 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과 지역 개발기회의 박탈, 지가 하락 등을 우려하여 지역별로 산발적인 반발을 보였다.

이러한 반발 기류는 지방언론의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맞물려 급속히 확산되었다. 더욱이 2003년 법 제정 당시 우호적이었던 언론에서는 보호지역 지정이 현실로 다가오자 지역개발과 주민 경제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역기능을 부각시켜 ‘제2의 그린벨트’ 등으로 혹평하였고 이는 지역주민의 반발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초기의 산발적인 반발은 지역별 반대투쟁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집단화·규모화되기 시작하였고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단순한 보호지역 지정 반대가 아닌 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지속적인 연대투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4년 9월 강원도·전라북도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회로 반발의 수위가 절정에 올랐다.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은 기초도면상의 보호지역 지정 면적 과다, 백두대간 보호 정책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 및 이로 인한 이해당사자의 지지와 동의 획득 실패,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 미흡,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와 불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지자체·NGO·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설명회·간담회, 산림청 장관과의 대화, 쟁점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현지토론회 등 다양한 지역 의견 수렴(242회)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백두대간 지역의 어려운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 및 지역개발 위축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보호지역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보호지역 지정 준비와 더불어 백두대간 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72억원 지원)하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리 인식체계를 정립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향후 민족의 미래유산으로 존속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여 이해집단별 갈등을 극복한 수범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 2005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 법률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주민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주민생활과 관련된 규제 완화, 토지매수 청구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제도적·법적 보완 노력을 적기에 수행함으로써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안’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6월 15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6개 도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14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7월 19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어 8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회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9월 9일 지정·고시되었다.

개발보다 보전에 무게 두고 관리

향후 백두대간 지역의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백두대간의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용·공공용 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며 개발시 친환경적 공법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백두대간 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고 있는 도로 등 교통시설은 백두대간 마루금을 관통하는 경우 터널화를 원칙으로 하고 마루금 부근의 시설물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개발보다는 보전에 무게를 두어 관리할 것이다.

이미 상당부분 단절되고 훼손된 백두대간 지역을 일시에 복원·복구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기술적


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복원공사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훼손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복원·복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훼손지 유형별로 복원·복구 모델을 개발하여 기존의 복원사업과는 차별화되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백두대간의 개념이 형성된 지 1000년, 길이 이어져 오던 그 이름을 일제에 의하여 잃어버린 지 꼭 100년 만에 백두대간이 법적 지위를 얻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전통 산줄기에 대한 체계를 정립한 것이다. 수계(水系)와 산계(山系)로 이루어진 우리 민족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어 전통 지리 인식체계를 되살려 놓은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으로 체계적으로 백두대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족의 미래유산으로 존속시킬 수 있는 기틀을 쌓은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호지역 지정과정에서 지역주민·지자체·중앙정부·NGO 등과의 이해집단별 충돌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을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여 슬기롭게 극복한 수범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지원



최남호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서기관
(chn01@mocie.go.kr)

1990년대 말부터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아마도 ‘지속 가능한 성장정책(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최초로 이러한 개념이 처음 나올 당시에는 주로 환경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 이 개념의 영역은 특정 정부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을 둘러싼 모든 제약요인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확대되어 왔다. 예를 들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정책이 소득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산업지원 정책, 중소기업-대기업의 상생협력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파급되고 있다.

최근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유가 문제이다. 배럴당 30달러 수준에서 이제는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유가가 급등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추

진에 있어서도 고유가가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고유가라는 새로운 제약요인이 특정 산업 분야인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미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념은 고유가 문제보다 환경보전에 초점을 두고 등장하였으나 최근 고유가 문제가 심화되면서 환경보다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뀐 실정이다.

미래형자동차 개발이 한국 자동차성패 좌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본다.

첫째, 전 세계적인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금 자동차산업은 대변혁기에 돌입하고 있다. 과거 100년간 가솔린·디젤 엔진이 주도하던 자동차시장이 이제 환경·에너지·IT가 융합된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시장점유율 0%에 불과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200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현재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기술로서 우리도 선진국과 동등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술경쟁에서 낙오될 경우 우리 자동차산업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가솔린·디젤 엔진이 주도하던 자동차 시장이 환경·에너지·IT가 융합된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과도기적 기술단계에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 이래 올해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포하고 있어 그 기술개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을 따라잡는 데는 40여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현재 주요 선진국과 동등한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셋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그 어떤 분야보다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민·관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시장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사업은 위험성(risk)이 큰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위험·불확실성에 비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규모는 어떤 사업보다 큰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 노력 없이 업계의 원활한 R&D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진 각국,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 기술개발 추진

미국·일본·독일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도 연료전지차를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발이 다소 늦었던 독일을 위시한 EU 국가들도 뒤늦게나마 적극적인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정부 주도하에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1997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EU 각국의 정부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국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에 규정된 기본적 개념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로서, 에너지 소비효율이 일정기준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표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북미지역 시장점유율 예측

	(단위: %)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환경친화적 자동차	0	3	15	34	43	56	60
기타(가솔린·디젤 등)	100	97	85	66	57	44	40

자료: Office of Transportation Technologies, U.S. Department of Energy (March 2002)

〈표 2〉 각국 정부의 주요 지원 현황

	기간	사업명	정부예산
미국	2003~2015	Freedom CAR and Fuel, Clean Fuel Bus, 실증사업	27억1천만달러
일본	1997~2004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Japan Hydrogen & Fuel Cell	1,225억엔
EU	2003~2006	제6차 Frame Work Project	21억유로
중국	2001~2005	863 Project 및 수소기술 R&D	1,620억위안
한국	2004~2008	차세대 성장동력 미래형 자동차 개발 - 2차전지 사업단, 연료전지 사업단 연계 포함	1,026억원

주: * 한국은 미국의 3.8%, 일본의 8.4%, 유럽의 4%, 중국의 63% 수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사업 신설시 중국보다는 많고, 일본의 38% 수준



▲ 지난해 10월 공개된 국내 첫 도로주행용 하이브리드 차량 '클릭 하이브리드'

법적 개념에 의한 여러 종류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에서 현재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연료전지 자동차'이다.

우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모터와 내연기관 등 두 가지 이상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감안할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솔린 및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액화석유가스 등 다양한 종류의 동력원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가스의 양도 크게 저감할 수 있으며 에너지효율도 매우 높아 고유가 시대에 적합하고 상대적으로 개발도 용이한 자동차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클릭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가 동력원인데, 업체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이미 1997년에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Prius'를 양산하여 현재까지 약 30만대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전기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시키는 무공해 자동차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환경친화적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가장 완벽한 자동차가 될 것이다.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고유가 시대에 가장 적합한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자동차 배출가스도 전혀 없어 환경보전 차원에서 가장 완벽한 자동차로 볼 수 있다.

2010년대에 세계 4위의 자동차 강국 진입 목표

정부는 지난 200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올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계획의 기본목표는 환경 및 연비(에너지) 그리고 안전문제를 해결한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의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2010년대에는 세계 4위의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처음 3년(2006~2008)간은 기초기술 개발을 집중지원하고, 2단계(2009~2010)에서는 내구기술·신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지원 계획의 기본목표는, 환경·연비·안전 문제를 해결한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의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2010년대에는 세계 4위의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2006~2008) 기간은 기초기술 개발에, 2단계(2009~2010)에서는 상용화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퇴성 확보를 통한 상용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천기술을 포함한 주요 기술개발은 정부의 주도하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기술개발이 시급한 78개 과제를 선정하여 향후 2010년까지 정부예산 4,600억원 가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 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과 달리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차량기술과 대체에너지기술이 연계된 복합기술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예산의 성격을 감안하여 일반회계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의 차량 기술개발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하이브리드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서는 승용·상용차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구체적인 개발방식에 있어 산·학·연 공동은 물론 국제 공동기술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다.

현재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로 '미래형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관련된 네 개 과제가 선정되어 각 과제별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다. 각 사업단별로 미래형 자동차 사업단은 차량시스템 및 핵심 부품 개발을, 차세대 2차전지 사업단은 2차전지 개발(과제 중 자동차용 포함)을 수행하며, 연료전지 사업단은 발전기(스택) 개발(과제 중 자동차용 포함), 수소에너지 사업단은 수소용기 개발(과제 중 자동차용 포함)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 대형 국책사업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의 전문성과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 사업단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셋째,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환경부·건설교통부 등이 상호 협력하는 범부처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개발은 단순히 차량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기반으로 각종 평가기준 및 환경기준이 필요하므로 범부처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넷째, 기술개발 지원 외에 조기상용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 양산시점과 경쟁국 동향을 감안하여 일반 소비자의 구입에 따른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지원도 검토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기상용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이다. 현재 계획대로 기술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07년 전후 양산을 시작하여 2010년에는 총 20만대 생산에 10만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2010년에 100만대 생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한 세계시장의 일정 비율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연료전지 자동차는 양산보다는 기초 원천기술의 확보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기초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기술을 확보하여 시범운행하는 단계까지 추진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10년대에 우리 자동차산업이 세계 4강까지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산·학·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벤처기업 요건 및 확인제도 개편



김성섭

중소기업청 혁신형기업육성팀장
(kissly@smba.go.kr)

1997년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8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벤처캐피탈·KOSDAQ 등 이른바 ‘벤처생태계’는 급속한 변화과정을 거쳤다.

한편으로는 벤처기업 추가급등 및 붕괴를 경험하였으며, 일부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산업 성장 등에 힘입어 벤처산업은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였고 외환위기 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 생태계’ 변화의 촉매 역할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책자원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벤처생태계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신기술 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신생기업을 의미하며, 미국의 경우 대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

업을 벤처기업으로 부르고 있다.

벤처기업은 주로 첨단산업 분야에 분포됨에 따라 투자의 위험성이 높고, 정보의 비대칭성 및 높은 무형자산 비중 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영역이다. 이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도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비용 경제구조 및 대기업 위주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벤처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였다. 특히 벤처기업의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정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자금·인력·창업·세계·입지 등 각종 지원시책을 집중한 결과, 단기간 내 벤처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현행 벤처기업 요건은 <표 1>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평가 및 확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

첫째, 현행 벤처평가기관(16개)에 의한 기술평가 과정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벤처평가기관을 통해 사전에 기술 및 경영 혁신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벤처기업의 대부분(80%)인 ‘신기술 평가 우수기업’이 벤처평가기관에 의해 선별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기관별로 평가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재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평가에 자의성이 존

1997년부터 시행된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단기간 내 벤처산업을 성장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여러 문제점도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벤처기업 요건 및 확인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장을 통해 선별·검증된 진정한 '혁신기업'에 제한된 자원과 정책역량이 집중되도록 할 것이다.

재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벤처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는 진정한 '혁신기업'을 선별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조사(2005년 6월)에 의하면 현행 벤처기업이 혁신 중소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중에서도 사실상 非혁신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벤처평가기관에 의해 선별된 신기술 평가 우수기업이 향후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벤처투자기업·연구개발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었다.

둘째, 최근 금융기법이 다양화되면서 벤처캐피탈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기관들도 중소기업에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벤처법상 일반 금융기관이 투자한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조건으로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반면, 이들은 벤처기업에서 배제되어 특별법에 의한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정부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은 사실상 '정부의 벤처인증'이라는 오해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벤처기업은 그 자체로서 투자리스크가 크고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업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한 벤처확인서 발급이 갖는 신뢰증대 효과(certification effect)가 지나쳐 '벤처기업 = 정부 보증기업'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민간에 의한 소위 '묻지마 투자'를 야기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부에 의한 단순 사실 확인 자체도 경우에는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일깨워 준 것이다.

이에 OECD에서도 지난 2003년 정부의 벤처확인서 발급을 종료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정부 주도 육성 → 시장 중심의 성장지원'으로

선별과정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에 지원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일본 등 선진국가에서도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벤처기업군과 유사한 기업군을 골라 중점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3년부터 혁신계획(The Plan for Innovation)을 수립하여 R&D 투자비용이 15% 이상인 초기기업(업력 7년 이하, Young innovative company)에 대해서는 3년간 세금 전액면제, 사회부담금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과 유사한

〈표 1〉 현행 벤처기업 요건

유형	공통요건	유형별 요건
벤처투자기업	혁신능력 평가 (60점 이상)	• 벤처캐피탈이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 투자기간이 6개월 이상
연구개발 벤처기업		• 매출액 대비 R&D 비율 5~10% • 기업부설연구소 + R&D 투자비용 5천만원 이상
신기술 평가 우수기업		• 벤처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 우수기업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에 따라 특정 중소기업자(시험연구비 3% 이상 중 지방자치단체 인증기업)를 선정하여 지원하여 왔으며, 올해 4월에는 임시조치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선별되도록 제도를 구성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올해 벤처기업 실태조사(5~6월), 벤처확인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KDI, 6월), 벤처업계 및 벤처캐피탈 간담회(3~7월)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동 개편방안을 토대로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벤처기업 개념을 ‘벤처캐피탈 등 벤처금융기관이 평가하여 자기위험부담으로 투자하거나 보증·융자한 기술 우수기업’으로 재정의하여 관련 요건을 개편하고, 다음과 같이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다(〈표 2〉 참조).

첫째, 벤처평가기관(16개)에 의해 이루어지던 벤처기업 평가 및 확인방식(현행 신기술 평가 우수기업)을 폐지하고, 대신 기술실험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기술평가 후 융자(보증)한 기업을 벤처기업에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는 기존의 벤처평가기관의 평가가 투·융자(보증) 등과 연계되지 않아 평가에 책임성이 없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며, 원래 벤처기업의 범주에 보증(융자) 기업을 추가한 것은 국내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신기술평가기업(2005년 6월 현재 약 7,100여개)이 일시에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 요건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은 기존 유효기간(최장 2년)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으로 그대로 인정받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둘째, 벤처캐피탈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시장을 통해 벤처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벤처캐피탈 외에 일반 금융기관 등도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투자기법도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기위험 책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이 벤처투자기관에 새롭게 포함되도록 하였다.

셋째, 현행 연구개발기업은 그대로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되, 총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 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는 요건 외에도 반드시 기술실험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였다.

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혁신형 기업의 선별지표로 R&D 비율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연구개발형 기업들 중에서 우수한 혁신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들을 지속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구개발 기업의 경우에도 금융시장의 투자과정과 유사한 절차(벤처금융기관에 의한 사업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벤처확인 신뢰성을

〈표 2〉 벤처기업 요건 개편 내용

벤처유형	현행	개편
1단계	혁신능력평가	폐지
2단계	① 벤처투자기업 주식투자 10%	확대 • 벤처투자기관 범위 확대 (산업은행·기업은행 추가) • 기술평가보증·융자기업 신설
	② 연구개발기업 R&D 비율 5% 이상	개선 (사업성 평가 의무화)
	③ 신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평가 우수	폐지

벤처기업 요건 및 확인제도 개편안은, 벤처기업의 개념을 '벤처캐피탈 등 벤처금융기관이 평가하여 자기위험 부담으로 투자하거나 보증·융자한 기술 우수기업'으로 재정의하였고, 혁신능력 평가제도 폐지, 벤처투자기관 범위 확대, 연구개발 기업의 사업성 평가 의무화,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업무의 민간 이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고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R&D 투자비용에 대한 분식회계를 통해 손쉽게 벤처기업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넷째, 현행 벤처 확인 과정에서 실시 중인 1단계 혁신능력평가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금융기관의 투·융자(보증) 등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기술성 및 혁신능력 등이 충분히 평가되기 때문에 별도의 벤처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제도를 폐지하여 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벤처캐피탈협회 등 민간 벤처금융기관으로 이양하였다.

이는 최근 민간기관의 평가 및 선별 역량이 확대되고 있고, 정부의 벤처확인에 따른 과잉신뢰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이 직접 벤처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민간기관이 벤처확인서를 직접 발급함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벤처확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된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를 직접 공개하도록 하고, 벤처확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벤처기업 요건 및 확인제도 개편안은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한 정기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육

성'에서 '시장 중심의 벤처기업 성장지원'으로 정책이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벤처금융시장을 통해 벤처기업이 발굴되도록 하고 시장을 통해 선별·검증된 진정한 '혁신기업'에 제한된 자원과 정책역량이 집중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보다 성숙되어 가고 있는 벤처시장과 생태계 속에서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발굴되어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벤처기업 육성을 완전하게 시장에만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높은 투자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벤처생태계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공적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어 여전히 시장실패의 영역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벤처시장이 완전히 성숙될 때까지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도 제한적으로나마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과 아울러 시장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하지 않을 것이다. ■

◀ 관련 자료 ▶

- 중소기업청 혁신형기업육성팀, 「벤처확인제도,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개편」, 2005. 9. 3(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참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도입



서명교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장
(smk2000@moct.go.kr)

주택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산물이다. 주택의 기능·품질·미관·입지환경 및 부대시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주택 소비자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일반인이 주택의 성능이나 품질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주택을 분양받을 때나 구입할 때 이를 미리 알고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주택의 품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마감재·조경 등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구성·실내 공기질·소음·가변성·화재성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중요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부분 입주 후 생활하는 과정에나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주택성능의 정도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은 지난해에 '주택의 품질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성능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주택성능표시는 의무화가 아니고 자율화되어 있다.

소비자에게 주택 성능·품질 정보 제공 필요

최근 우리나라도 주택법령에 일정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었다. 아직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확정되지 않았으며 성능항목별로 구체적인 등급이나 평가방법 및 성능인정기관 등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택법령에 도입된 주택성능등급의 내용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도입은 제250회 정기국회에서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2004년 10월 22일)하면서 추진되었다.

당시 다른 의원들로부터 「주택법」의 여타 규정을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같이 발의되어 상기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1개의 법안으로 통합되어 건설교통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되었으며, 지난 1월 법률 제7334호로 「주택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의 시행시기는 하위법령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었다.

개정된 「주택법」은,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을 공급할 때에 소음, 구조, 외부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성능 등에 대한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주택법」은, 일정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택분양시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소음, 구조, 외부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성능 등에 대한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 시행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주택소비자가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통해 우수한 자재를 자발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신기술 개발 및 양질의 주택 생산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 대상 주택호수, 성능등급인정기관 및 주택성능등급의 심사·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호수를 1천세대 이상으로 하되, 2006년부터 2년간은 2천세대 이상으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성능등급은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1 내지 5등급으로 평가하며, 성능등급 심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내년 1월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시행

정부는 앞으로 주택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선정, 인정절차, 방법, 항목별 세부적인 평가요소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방안을 마

련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과 최종 작업 중에 있는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각 분야 및 항목별 성능평가와 지표 등은 다음과 같다.

주택성능 등급의 평가지표 기준

주택성능등급 평가지표의 기준을 살펴보면, 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법규를 최하위 등급으로 설정하고 법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준을 최하위 등급으로 설정한다. 상위 등급의 설정은 등급별 상황에 따르고 등급단계 설정에 대한 객관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성능 규정형태를 숫자로 표시하며, 성능등급은 평가분야별, 항목별로 1 내지 5단계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성능등급을 나열방식으로 표시한다.

성능표시 설정은 ①평가를 위한 기술이 확립되어 널리 이용될 것 ②설계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한 것 ③외견상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을 우선 ④거주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설비기기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⑤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항은 제외 ⑥국내 실정을 고려한 수준의 설정 ⑦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요소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요소별 성능항목은 법률에서 규정한 소음 등급, 구조 등급, 환경 등급, 생활환경 등급, 화재·소방 등급 등 5개 분야로 하며, 세부적인 항목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표〉 주택표시등급 분류

소음 등급	구조 등급	외부환경 등급	생활환경 등급	기 타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 배관소음 세대경계소음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	조경 조망권 일조시간 외부소음 실내공기질 등	사회복지시설 놀이터 휴게시설 등	화재·소방성능 등

소음 관련 등급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평가는, 공동주택의 거주자로부터 불만이 가장 높은 바닥충격음 문제를 줄임으로써 입주자들이 쾌적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항목이다. 즉,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층 세대로 전달되는 아이들의 뛰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의 충격소음의 차단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성능등급의 경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89호’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바닥구조 이외의 구조는 성능인정서를 이용하여 성능등급별 기준 중 어떤 등급에 해당되는지를 평가하고, 표준바닥구조의 경우에는 상기 고시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평가하되, 인정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되는 등급을 표기한다.

세대 간 경계벽 소음 평가는, 쾌적한 거주공간의 창출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세대 간 경계벽의 소음 차단능력에 대한 것이다.

평가는 경계벽의 구성재료가 콘크리트 옹벽인 경우는 벽체의 두께로 평가하고, 경계벽의 구성재료가 콘크리트 이외인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93호(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벽체로서, 인정용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KS F 2862(건물 및 건물부채의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단일수치 평가량+스펙트럼 조정항’의 값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성능등급 표시는 3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화장실소음 평가는, 화장실 급·배수 소음,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 간의 공기전달소음에 대해 관련 저감공법 채택을 유도하여 실내공간의 정온성(靜穩性)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의 성능을 매우 쉽게 상호 비교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될 것이다. 주택건설업체는 스스로 목표로 하는 성능을 가진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국가기준 확립에 따라 객관적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 하자·분쟁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

절수형 변기 사용 여부, 배관 지지부와 벽·바닥 등 관통부위에 완충재 설치 여부, 저소음형 배수관 사용 여부,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 간 소음 전달 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게 된다. 평가등급 표시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4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도로교통소음 등 외부소음에 영향을 받아 거주공간의 쾌적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공간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외부소음에 대한 차음대책 수립 정도를 평가한다.

도로나 철도 등 소음원에 면한 건물의 외벽면 위치에서의 외부소음도 측정 결과, 'KS F 2808' 또는 'KS F 2235'에 의한 동일 창(curtain wall 포함)의 차음성능 측정 결과, 실내흡음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최하층·중간층·최상층 각각의 중간세대 및 양측세대 거실에서의 실내소음등급 예측 결과로 평가한다.

성능평가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실내소음등급의 예측을 통하여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구조 관련 등급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용공간에 대한 평가는,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공동구와 배관·배선의 내구성, 유지보수 및 갱신성이 우수한 설비계획이 수립 되도록 함으로써 수명이 긴 공동주택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는 공용공간과 전용공간을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우선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공동구 및 수직 공용배관·배선의 개·보수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와 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용공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전용공간의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수명이 긴 주택을 구현하기 위해 전용배관의 설계 및 세대 수평 및 수직통합·계획을 평가한다.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용공간에 대한 평가는, 배관·배선·정보화 설비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용이성을 위한 설계 및 계획을 파악하여 3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환경 관련 등급

환경등급의 경우에는 생태면적률을 평가한다. '생태면적률'은 계획 대상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로 정의할 수 있다.

생태면적률은 자연의 순환기능 관점에서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그 공간유형별 면적에 해당 가치(가중치)를 곱해 구한 자연순환기능 환산면적을 전체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또한 생태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서 자연지반 녹지율에 대한 지표가 사용된다. 이는 토양생태계 및 도시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지하수 함양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대상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는 제외)'의 비율로 표시하며, 자연지반 녹지율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한다.

빛환경에 대한 평가는, 채광을 목적으로 한 창문의 면적 및 방위를 계산하고 그것을 통하여 외부 자연채광의 도입 가능성을 평가하여 건물의 채광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택성능은 방위별 가중치를 적용한 바닥면적에 대

한 채광창의 비율을 산정하여 4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평가방법은 설계 도서 및 시방서 검토를 통하여 채광창 면적 비율 및 인동거리에 따른 방위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최종 등급을 산출한다.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평가는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여부와 단위 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에 대한 것이다. 포름알데히드·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거주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방출량에 따른 건축 내장마감자재의 성능지표를 마련하여 평가한다.

단위 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에 대한 평가는,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환기량 및 일정 수준 이상의 환기성능 확보에 필요한 적정 환기설비의 설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성능등급은 채택한 공법의 점수를 합산하여 4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생활환경 등급

생활환경등급에 대한 평가로서, 단지 내 고령자·장애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신체상기능 저하를 고려한 배려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평가는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전용 부분은 출입구·계단·욕실·침실 및 유니버설 디자인 부품의 사용 정도가 설계요소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 3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공용 부분도 공용공간에서 이동의 용이성 및 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용 부분과 같이 출입구·계단·복도·승강기 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성능을 평가하여 등급을 표시한다.

화재안전성능 등급

화재안전성능등급 평가는 공동주택의 화재시 감지, 경보, 수신, 피난 및 탈출 등의 안전성과 용이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화재감지·경보설비·수신설비·배연설비·피난설비·내화성능 등으로 분류하며, 각 분류항목별로 등급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평면도, 소방설비 시방 및 관련 도서, 단면도의 도서검토와 소방·피난설비 'Check List'에 의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및 시험에 의해 평가한다.

앞으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주택구입자)들이 매우 쉽게 주택의 성능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안심하고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주택건설업체는 스스로가 목표로 하는 성능을 가진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국가의 성능기준 확립에 따라 객관적인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 하자과 분쟁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다양한 필요 성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확산과 더불어 공동주택 건설업체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품질이 높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의 주택품질 향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산적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양질의 재고(stock)를 확립하여 건전한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예정인 주택성능평가 표시제도는, 지금은 설계 단계이지만 앞으로는 일본과 같이 건설 단계의 성능평가와 준공 이후의 성능평가제도로 발전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주택성능보증제' 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 관련 자료 ▶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공동주택 복지 및 품질 기준이 강화된다」, 2005. 10. 4(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참조)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김순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기획과장
(sjkim@ftc.go.kr)

정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부당지원행위 관련 사항과 심사지침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난 8월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부당지원행위’라 함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주로 대주주나 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이나 다른 회사에 상품·용역·자금·자산·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지원행위, 자원배분 및 소비자후생에 악영향

부당지원행위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있어서 고질적인 관행이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대체로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과점 이윤을 획득하여 이를 계열사 확장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계열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부당지원행위를 통하여 계열사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할 내부건제시스템이나 회계 또는 경영 실적을 감시할 객관적인 감시기구가 부족하고, 이사회를 통한 내부감시 시스템도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대규모기업집단 총수는 영향력 극대화를 위해 계열기업을 늘리거나 외부 경쟁사의 진입 차단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지원회사의 경우 경쟁력이 저하되고 지원객체 회사의 경우 한계기업의 퇴출이 방지되는 등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어 소비자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에 대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지 않음을 들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하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지원회사의 핵심역량 유출, 소액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침해 문제, 지원객체 회사인 한계회사의 존속 문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당사자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지원객체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이나 대규모기업집단의 연쇄도산 문제 또한 국가개입의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이 직권으로 제기한 부당지원행위 관련 위헌제정신청의 판결에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필요성으

정부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사항과 심사지침을 명확·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난 8월 부당지원 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를 규제대상에 포함하였고,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경쟁 저해 및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함을 명시하였다.

로 ①한계기업의 존속으로 인한 경쟁의 저해나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 저해로 인한 시장기능의 저해 ②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들의 독점적 강화로 인한 경제력 집중 폐해 ③우량기업의 부실화로 인한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 ④소액주주 또는 채권자 등의 이익침해를 들어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대법원도 2004년 삼성SDS의 부당지원행위의 판결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에서 부당지원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서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당지원행위 관련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구체적 심사기준으로서 부당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1997년에 제정하여 2002년까지 세 차례 개정·운영하여 왔다.

부당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크게 목적, 용어의 정리, 자금·자산·인력별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지원주체인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인 지원객체와 자금·자산·인력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지원객체와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가격인 정상가격보다 낮게 거래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성의 판단기준으로는 지원객체가 속하는 시장구조·지원시기·지원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996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1997년 시행령을 개정, 총 16회에 걸쳐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하여 3,6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한 총 109건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2005년 3월 현재 65건으로 제기비율은 59.16%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체사건의 소송제기 비율 6.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종결된 사건 18건(대법 4건, 고법 14건)은 전부승소 13건(소취하 6건 포함), 일부승소 4, 전부패소 1건으로, 일부승소를 제외하더라도 승소율은 72.2%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승소율 69.4%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그간 법원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당지원행위의 요건과 관련된 쟁점사항은 ①상품·용역 거래의 지원행위 인정 여부 ②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공정한 거래의 저해로 이어지는지의 여부 ③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현저성의 기준 ④우회지원행위의 판단기준 및 지원금액의 상정 등에 대한 기준 ⑤법 시행 이전 또는 법 적용시기 이전의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여부 등이었다. 이러한 판례 이외에도 부당지원행위 심사기준의 투명성과 명확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의 투명성 제고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도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그동안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이나 부당고가 매입으로

의 경쟁사업자 배제로 규제함이 타당하고 부당지원행위로는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일부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도 요건만 충족되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됨을 판시한 바 있다(2004. 10. 14 대법판결).

둘째,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함을 명시하였다.

경쟁 저해성과 경제력 집중만으로 부당지원행위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부당지원행위가 되는 것이다.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지원 등으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한 경우만으로는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고, 자금지원을 받은 특수관계인이 이를 계열사에 투자하는 등으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부당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부당성 판단의 최종기준은 경쟁 저해 또는 경제력 집중을 통한 공정한 거래의 저해 가능성이 되는 것이다.

셋째, 법 시행 이전 또는 법 적용시기 이전의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여부를 명확히 하였다.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시행시점(1997. 4. 1) 또는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처분가능시점(행위종료일로부터 5년) 이전에 있었던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 각각 해당시점 이후에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기(辨濟期)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변경하는 것 등과 같이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부당지원행위의 조사시점으로부터 5년전의 부당자금지원이 조사시점까지 계속된다 하더라도 금리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 한 부당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넷째,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지원행위의 경우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비주주인 지원주체가 고가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기존주주인 지원주체가 고가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분율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법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실권주를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는 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 명시하였다.

다섯째, 지원객체는 지원주체의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지원주체가 아닌 다른 모든 회사에 해당됨을 명시하였다.

지원주체의 계열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섯째, 우회지원행위의 판단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다.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거래 없더라도 제3자를 매개한 거래를 통해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원행위에 해당됨을 명시하였다. 우회지원행위의 지원금액은 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킬 수 있는 경제상 외 이익만을 고려하여 산정함을 명시하였다. 제3의 중개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토록 한 것이다.

이번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가 보다 명확하게 되고 투명하게 되었다. 기업들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때에 심사지침은 좋은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부당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기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속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기업의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소송에서의 판례 등도 심사지침 개정에 반영될 주요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

◀ 관련 자료 ▶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기획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2005. 8. 24(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참조)

규제개혁과 경제성장

- OECD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 규제개혁 현황 및 과제를 개괄한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의 '글로벌 포커스'란에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규제개혁이 갖는 의의에 대한 OECD의 최근 논의를 정리하고, 아일랜드에 대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이 선진국 정책당국자들 사이에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이유와 배경을 밝히고,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아울러 우리의 규제개혁 진행과정에서 당면한 어려움과 주요 과제들을 짚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성장을 위한 구조정책으로서의 규제개혁

경제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기본적인 목표들을 교과서적으로 요약하면, 그것은 미시적 차원에서 각 개별시장의 자원배분과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 국민경제 전반의 안정과 성장이다.

단기적인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위협이나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ahn@kdi.re.kr)

일시적 경기후퇴에 따른 실업의 고통을 가급적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통화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을 통한 경기안정화 정책의 과제라고 한다면, 한 나라의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도록 경제의 구조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보다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의 OECD의 출판물과 내부 보고서들을 보면, 경제정책의 주된

관심이 경기안정화를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을 넘어서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인 구조정책으로 확대·이전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 과정 속에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 시작한 것도 역시 같은 시기의 일이다.

먼저 이 시기에 성장을 위한 구조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된 배경을 살펴보자.

OECD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2차대전 종전 이후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과 높은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는 경향을 보여 新고전과 성장이론에서 예측하는 수렴현상이 선진국 그룹 내부에서도 전반적으로 관찰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미국의 성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OECD는, 노동·자본 시장과 같은 '생산요소시장'의 원활한 작동, '생산물시장'의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의 촉진, 교육·혁신 정책의 강화와 개선 등에 성장을 위한 구조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 특히 우선순위 분야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규제정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장률이 회복되면서 성장패턴은 과거의 추세와 반대로 바뀌어 오히려 국가 간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과 미국이 모두 경기 후퇴기에 들어간 2000년대에도 그 격차는 계속 벌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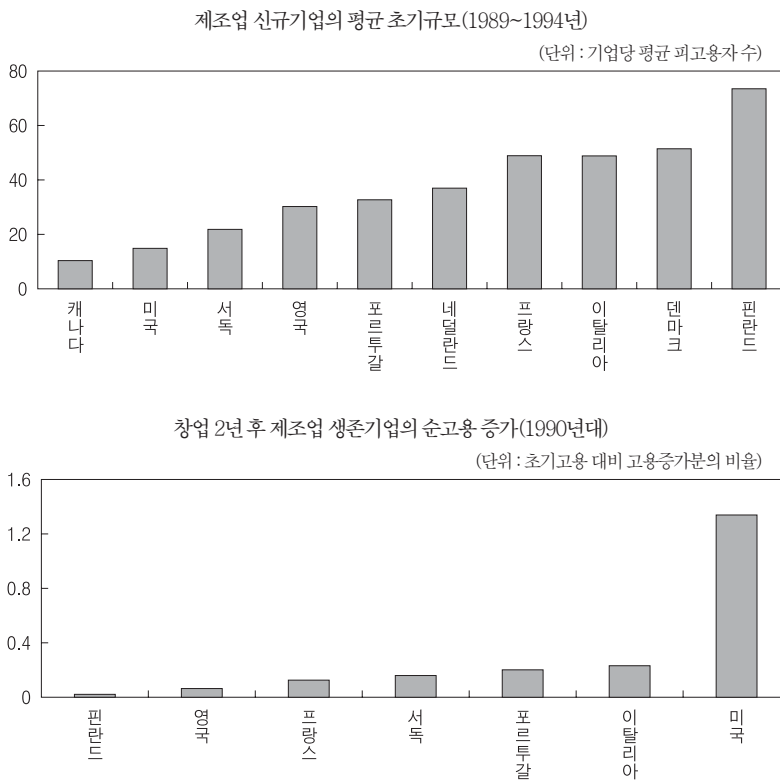
이 같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성장의 원천은 무엇인가, 경제성장의 성과가 나라마다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들은 과연 무엇이며, 성장 잠재력의 제고를 위해 어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가

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대되었다.

OECD에서는 생산성 증대와 경제성장률의 제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서 제도적 환경과 각종 구조정책의 역할에 주목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경제성장의 요인분석과 관련된 OECD의 일련의 실증연구 결과들은, 노동 활용도와 생산성의 차이가 미국과 여타 OECD 국가들 간의 성장 격차의 주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유럽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비율이 낮고 실업률은 높으며, 법정 노동시간이 짧아 미국에 비해 노동활용도가 낮다는 점이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규제가 만연한 기업 환경으로 인해 혁신기업에 의한 '창조적 파괴'가 특히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 분야에서 미국에 비해 상당히 뒤졌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특히 미국의 신규기업은 평균적으로 유럽의 신규기업보다 규모가 작지만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매우 빨리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그림 1〉 참조), 이 역시 규제정책 및 기업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림 1〉 신규기업의 초기규모와 생존기업의 성장률



출처: OECD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OECD는, ① 노동시장 및 자본시장과 같은 생산요소시장 (Production Factor Market)의 원활한 작동 ② 생산물시장(Product Market)의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의 촉진 ③ 교육 및 혁신 정책의 강화와 개선 등에 성장을 위한 구조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

특히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 분야들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규제정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경쟁정책·무역정책·산업정책·소비자정책·환경정책 등 여타 정책들과의 연관 속에서 중장기적 구조개혁정책으로서의 규제정책을 여러 선진국들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OECD의 규제개혁 논의동향

선진국들의 규제정책은 일시적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의 타계를 위한 한시적·부분적 ‘규제완화(deregulation)’의 차원을 넘어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상시적·제도적인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의 차원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떤 규제조항들을 철폐·수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규제정책의 입안·집행 과정이 경제 전반의 동태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절차적·제도적·시스템적 문제 제기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규제정책 및 규제제도에 대한 사후적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OECD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는 규제의 정도를 지수화하여 측정하고 그 개선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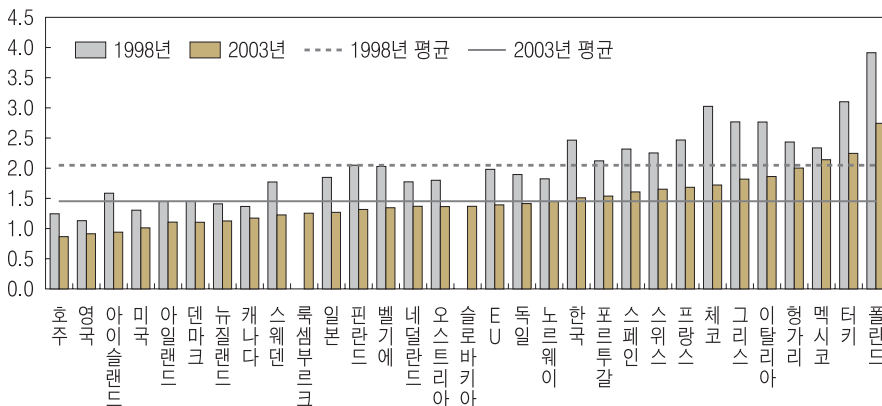
현재 OECD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로는 ‘경제총국(Economics Department)’과 ‘정부혁신·지역개발국(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을 들 수 있다. 본란에서 지난 호부터 시작하여 네 차례에 걸쳐 소개되는 일본·아일랜드·독일·프랑스의 OECD 규제개혁 국가보고서의 발간 작업은 현재 정부혁신·지역개발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총국의 ‘국가연구 부문(Country Studies Branch)’에서는 그 주요업무에 해당하는 국가별 경제보고서 작성작업의 일부로서 생산물 ‘시장의 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 PMR)’에 대한 국가별 리뷰를 진행하고 있고, 경제총국의 ‘정책연구

부문(Policy Studies Branch)’에서는 각종 규제의 지수화와 계량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경제총국의 국가연구 부문과 정책연구 부문의 공동작업을 통해 각종 구조정책지표와 성과지표의 정량적 분석에

〈그림 2〉 1998년과 2003년의 생산물시장 규제지수



출처: OECD

선진국의 규제정책은 한시적·부분적 '규제완화' 차원을 넘어서 '규제개혁'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상시적·제도적 '규제관리'의 차원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또한 사후적 규제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규제의 정도를 지수화하여 측정·비교하는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근거하여 각 나라에 대한 구조개혁의 우선순위 과제들을 선정하고 그 진척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제정책개혁 성과분석(stocktaking)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생산물시장 규제지수(PMR Indicators)'는 동일한 작성방법하에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1998년 시점과 2003년 시점을 기준으로 두 차례 작성되어 생산물 시장 규제의 정도에 대한 국가 간 비교뿐만 아니라 이 두 시점 사이에 이루어진 규제완화 정도의 수량적 비교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PMR 지수에는 국가의 통제, 기업활동에 대한 장벽, 국제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등 세 가지 하위 부문에 대한 지수와 이를 종합한 총지수가 포함되며, 규제의 정도를 최소 '0'에서 최대 '6'으로 지수화하고 있다. PMR 지수의 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규제 정도는 1998년의 2.5에서 2003년의 1.5로 낮아져 이 기간 중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하지만, 2003년 시점에서 OECD 국가들 중 중위권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참조).

규제개혁과 생산성 증대

규제개혁은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규제정책 및 규제개혁은 어떤 산업에서 어떤 양상으로 경쟁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경쟁의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OECD 경제총국 내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질문에 답하는 두 편의 연구보고서가 지난 10월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mmittee : EPC)의 구조개혁작업반(Working Party 1 : WP1) 회의를 위해 작성되었다.

필자는 우리나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여 이 보고서들을 보게 되었다. 이 두 편의 연구보고서는 내년 봄의 차기 회의에서 토의될 예정인데, 이하에서는 이 두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OECD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산물 시장의 규제가 약한 나라일수록 1995년 이후의 생산성 증가가 빨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OECD 국가들 사이에 규제완화의 정도는 어느 정도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생산성 증가의 속도에 있어서는 나라들 사이의 격차가 오히려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현상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규제의 정도에 있어서 나라 간 차이는 줄고 있었지만 경쟁적 규제개혁의 생산성 제고 효과가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확산과 맞물리면서 보다 확대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산물 시장의 규제가 혁신의 유인을 감소시킨다면 이로 인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기술의 채용도 지체될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기술 변화의 시기일수록 경쟁촉진적인 규제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한층 증폭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과 부합하는 실증 분석의 결과로서, 경쟁적 규제가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ICT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경로로

서 신기술의 채택,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 다국적 기업들의 입지선정 등이 각각 규제개혁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ICT를 비롯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의 증대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높인 주요 요인들 중의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OECD의 연구에 따르면, 나라마다 편차는 있지만 생산성 증가분 중 20%에서 40% 정도는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끝으로,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들과 자국내 기업들을 비교하면, 대체로 외국기업들은 자본집약도와 숙련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더 높으며 성장 속도가 더 빨라 자국내 기업들보다 생산성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한다.

그런데 OECD 회원국들의 산업별 데이터에 근거한

실증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생산물 시장에서의 경쟁적 규제가 적은 부문일수록 ICT 투자의 비중이 높고, 신기업의 진입 비율이 높으며, 외국기업들의 자국내 진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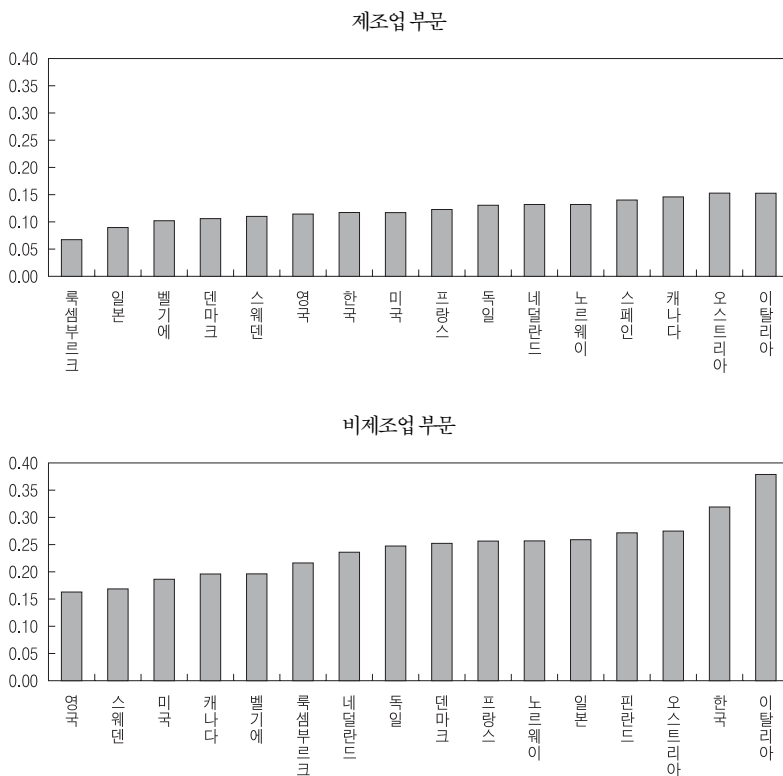
경쟁의 국제화와 서비스 부문의 규제

일반적으로 규제는 경쟁을 제약하고 그 결과 생산성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 압력에 대한 척도로 흔히 ‘가격-비용 마진(price-cost margin)’ 또는 ‘비용 대비 가격 비율(mark-up)’이 이용된다. 완전경쟁에 가까울수록 이 마진(혹은 마크업)이 ‘0’에 가까워질 것이고, 반대로 공급자의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더 높은 마진을 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OECD 국가들의 산업별 마크업의 크기를 추정해 보면 (<그림 3> 참조), 서비스업 부문의 마크업 비율이 제조업 부문의 마크업 비율보다 현저하게 높다. 또한 이 마크업 비율의 국가 간 분산 또한 제조업의 경우보다 서비스업의 경우에 현저하게 높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 국제무역에 의한 경쟁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많은 경우에 국제간 교역이 어렵고 다양한 형태의 규제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부문의 마크업 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 촉진과 생산성 제고의

<그림 3> 제조업과 비제조업 부문에서의 마크업



출처: OECD

여지가 서비스 부문에 더욱 크게 존재함을 시사한다.

유통·통신·전력 등 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관련된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의 유입이 내수 지향적인 서비스산업 부문에서의 경쟁 촉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경우 서비스 부문이 부가가치 생산의 70% 내외를 점하고 있고, 제조업 활동에 들어가는 중간투입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서비스산업(예를 들면, 사업자 서비스, 교통, 통신, 전력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도소매업·전문가 서비스업(professional services) 등의 전형적인 서비스산업과 통신·전력·교통 등의 네트워크 산업에서 경쟁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부문별 규제개혁과 관련된 OECD의 논의에서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OECD 경제개발심의회(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 EDRC)의 국가

별 경제보고서 작성과정에서도 규제개혁과 관련된 권고사항들이 여러 차례 제시되어 왔다.

대규모 할인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입지규제들을 재검토할 것, 각종 전문가협회들에 의한 인위적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전문가 서비스 부문의 경쟁을 촉진시킬 것, 네트워크 산업에서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경영권이나 소유권의 분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되 전력 부문(캘리포니아·캐나다)이나 철도 부문(영국)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자인이 잘못된 규제개혁이 드러난 문제점들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위한 올바른 유인체제의 확립에 특히 주의할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 같은 권고사항들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비스 부문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그에 수반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

용 어 해 설

카멜 (CAMEL)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연방은행감독기관이 197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은행검사시스템으로서, 은행건전성 감독기준으로 자본충실도(capital adequacy)·자산건전성(asset quality)·경영체계(management)·수익성(earning)·유동성(liquidity) 등의 여러 경영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실태 평가방식이다.

BIS비율이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하는

계량지표인 데 비해, CAMEL은 경영관리 능력 등 비계량 지표와 전반적인 경영효율성을 함께 분석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예컨대, 자본충실도를 평가할 때는 BIS비율 같은 계량지표 외에 경영진의 위험감시 및 통제 능력,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이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과 같은 비계량 항목도 같이 따진다. 또 전반적인 재무상태와 영업능력, 지배구조개선 추진상황, 법규 준수 등이 경영관리 능력에 포함된다.

OECD 규제개혁 보고서 :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로서, 생산성과 국민소득에서 주요 선진국 수준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이 전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작성한 '2005년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기업경영환경이 종합 11위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합리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아일랜드 경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저개발 상태에 있었고, 개혁은 지체되었으며, 실업률은 17%에 달했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아일랜드의 사례는 얼마 전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기에 지난 일본편에 이어 아일랜드의 OECD 규제개혁 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일랜드의 거시경제 변화와 규제개혁

아일랜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개혁과정이 매우 역동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규제개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전까지 아일랜드에서 규제개혁은 시작되기 쉽지 않았으며 지속되기도 어려웠다.

20세기 후반까지 아일랜드 경제의 주력산업은 저임금 농업과 기초 제조업이었으며, 막대한 노동력을 이민의 형태로 국외에 수출하고 있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가격규제가 만연했으며, 1990년대 이전에는 경쟁정책의 중심역할이 완전히 인식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이 광범위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개혁은 지체되었고 일관적이지도 못했으나, 현재에는 규제개혁이 아일랜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아일랜드의 규제개혁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늦은 1980년대에 시작되어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1997년부터는 진입장벽과 시장개방 그리고 노동시장 면에서 OECD 국가들 중 규제가 적은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의 규제개혁의 초점은 국영기업이나 독과점 혹은 명백한 진입장벽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문제들의 해결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공공 부문의 개혁과 경쟁정책의 확립 그리고 親시장적 규제제도의 완성에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아일랜드는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경제성장에 기여한 주된 요인으로는, 기업에 호의적인 세금제도와 사회적 합의 형성 그리고 유럽연합(EU)이라는 단일시장과 유로통화권으로의 통합을 들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노동시장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행해진 한편, 시장개방과 투자유인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입된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아일랜드

의 생산능력을 확충시켰으며 非EU지역과의 교역을 증대시켰다. 그 결과 성장률은 증가했고 실업률은 감소했으며 정부재정의 만성적자는 재정흑자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거시경제적 상황에서 아일랜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고도성장의 부정적 영향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고실업과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규제개혁을 추진한 데 반해, 아일랜드는 보다 높은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는 중요 기반시설의 부족과 정책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장원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보다 경쟁력 있고 유연한 경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규제품질과 정부역량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아일랜드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특히 민영화와 자유화 조치를 비롯한 개혁 정책을 통해 공공서비스와 규제환경을 상당히 개선하였다. 아일랜드의 공공 부문에 대한 개혁은 실용주의와 점진적 개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공공 부문의 현대화를 위한 접근은 매우 실용적이었다.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점차 소비자 이익과 시장경쟁이 핵심 가치로 부각되었다. 전통적인 사회협약을 통한 합의도출 메커니즘과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었다. 사회구성원 간 광범위한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이 아일랜드의 경제적·사회적 성공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된 규제영향분석(RIA)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으며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평가는 규제의 효율성이나 성과보다는 법적 타당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99년 11월 각 부처가 관계법을 만들 때 준수해야 할 절차를 담고 있는 '내각편람(Cabinet Handbook)'이 개정되어, 모든 부처는 반드시 표준화된 '규제품질 검토목록(Quality Regulation Checklist)'에 따라 규제의 영향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되었다.

규제품질 검토목록은 규제의 효율성·필요성과 같은 규제품질을 평가할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나 법률이 시장진입과 경쟁제한 그리고 행정 부담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명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보다 엄밀한 규제영향분석의 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정책과 규제개혁

엄격한 경쟁정책의 집행은 규제개혁이 구조적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개혁성과의 악용을 막아주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경쟁원칙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해온 아일랜드에는 개방경제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인 경쟁정책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 경쟁정책을 국내경제에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한 정책과 담당기구가 발전해 왔고, 경쟁원칙이 일반적인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통합되면서 현재는 정부 개혁프로그램의 최고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개혁의 최고 목표가 현실화되기까지 보완해야 할 제도적 취약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일랜드의 경쟁법은 1991년의 EU 경쟁법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의 표준에 상응하지

만, 아일랜드의 헌법상 경쟁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형사적 제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기술적인 문제점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경쟁당국은 주된 경쟁법 적용대상인 수평적 담합에 대해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은밀한 담합행위를 증명하려면 직접적인 당사자의 자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당국에게는 이를 유도할 '자수자에 대한 제재경감제도'를 실행할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가 경쟁법의 집행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형사처벌도 최근에는 미로소 집행되었다는 점을 볼 때, 경쟁법의 집행역량은 여전히 시험 중에 있다고 하겠다. 때로는 개인들의 법적 소송이 유일한 제재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높은 비용과 불확실성이 잠재적인 원고들의 소송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합병 과정에 있어 이중적 신고제도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은 불확실성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규모 합병의 경우 '합병 및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합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경쟁당국이 아니라 기업무역고용부(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당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는 합병계획은 비록 '합병 및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락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경쟁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을 근거로 경쟁당국도 합병을 조사하는 한편 허가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무역과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줄임으로써 정태적 이익과 혁신에서 오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시장개방은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돌아오는 규제개혁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전통적 진입장벽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자국내 규제

가 무역 및 투자 상대자들의 관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규제품질의 문제는 더 이상 순수한 의미에서 자국내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아일랜드는 무역자유화를 통해서 상당한 혜택을 보았다. 1990년대 아일랜드의 성공적인 경제실적은 바로 EU와 세계 시장으로의 통합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무역이 아일랜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져서 1999년에 무역총액이 GDP의 125.1%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비슷한 규모의 OECD 국가들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아일랜드는 해외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다. 해외기업이 제조업 총고용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입 물량의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외자유치 성공요인으로는 EU시장과의 통합, 비교적 저렴한 고급 인력, 세제혜택, 전자와 의약품 산업으로의 집중 그리고 영어능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아일랜드는 노동시장 개방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노동력 부족은 아일랜드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임금과 입지비용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아일랜드의 장점들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필요한 노동자들의 이민을 장려하는 노동시장의 개방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노동력의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금인상 압력과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아일랜드의 비용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국내 규제제도의 품질이 점차 무역과 투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즉, 비효율성, 불확실성, 경직성, 불필요한 업무비용 등이 전반적인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점차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아일랜드로서는 규모가 큰 국가들보다 외부충격에 취약하므로 경제적 유

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일랜드가 시장중심적 규제제도의 확립으로 자국내 시장체질을 강화한다면 외부충격과 불리한 세계경제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아일랜드는 EU의 '단일 행정서류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 SAD)'를 세관 신고형식으로 채택하고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리하여 1991년 6~8시간이 걸리던 통관을 지금은 몇 초에 마칠 수 있게 되었다.

규제개혁의 예상효과

시장원칙에 기초한 추가적인 규제개혁은 아일랜드의 장기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며 그 잠재적 혜택은 매우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의 하락은 소비자 소득과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

현재 아일랜드는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쳐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는 개혁에 따른 실업의 비용을 최소로 줄일 수 있게 할 것이다.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물적 인프라의 부족과 노동공급의 차질 그리고 행정 및 규제 구조의 문제로 인해 성장의 추진력을 잃을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규제제도와 경쟁정책 그리고 시장개방이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OECD의 주요 권고사항

1. 지난 10년간의 고도성장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동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육아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여 노동할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규제정책과 규제도구 그리고 규제기구를 보

다 잘 조합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 정부가 OECD 규제기준에 따른 규제시스템을 확립할 목적으로 펴낸 규제백서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3. 운송·전력·소매유통·통신과 같은 이른바 네트워크 산업에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진입장벽과 가격통제를 없애야 한다. 또한 전문서비스 시장을 외국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

4. 경쟁정책을 확고히 집행할 수 있도록 경쟁당국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특히 벌금과 같은 제재를 독립적으로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심도 깊은 규제개혁은 성장을 지속시키고 앞으로 있을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현 상황은 개혁을 통하여 OECD 중심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규제개혁의 시기로서 경기상승기를 놓쳐 버려 결국 변화에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이 극에 달한 때에야 비로소 구조개혁을 추진한 일부 OECD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일랜드는 최소한의 거래비용으로 규제개혁을 신속하고 심도 깊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하겠다. ■

〈요약정리 : 구균철 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 연구원〉

골프장 공사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임성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yim2020@me.go.kr)

이번 호에는 골프장 조성공사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이 건은 전라남도 ○○군에서 타조를 사육하는 고○○이 “골프장 조성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타조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발생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으로서, 골프장 조성공사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자 및 시공사에게 2,741만 6,262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사건개요 및 배상결정의 의의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은 가축인 타조의 피해에 대한 것이다.

문제가 된 지역은 골프장 공사현장으로부터 가까운 홀(hole)은 약 410m, 멀리는 1,800m 정도 떨어져 있는 타조농장으로, 주변이 낮은 야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며, 타조농장 앞에는 골프장 진입도로가 위치하고 있다.

관계전문가는, 당해지역이 조용하고 평온하여 사육환경이 좋은 곳이나 골프장 공사시 발파소음이 심하였고 타조농장 앞을 지나는

공사차량의 소음으로 인하여 타조가 스트레스로 인해 폐사, 산란을 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을 발생시킨 골프장 시행자 및 시공사에게 피해자의 분쟁조정 신청금액 2억5,810만원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의 의의는, 공사장에 인접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발파공사를 하거나 공사차량의 작업도로가 지나는 곳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피해영향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과, 피해자역시 피해발생시 곧바로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확보해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내용

신청인 주장

당해장소에서 2001년 9월부터 타조농장을

운영하던 중 2002년 하반기부터 벌목작업, 발파공사, 중장비 소음, 공사차량 이동 등의 골프장 공사로 인해 타조가 성장률·산란율·부화율 등이 떨어지고 폐사까지 하고 있어 더 이상 종타(종자용 타조)로서 사육할 수 없기에 그동안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주장

인근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공사시 신청인으로부터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으나 신청내용처럼 피해내용을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 및 보상금액은 과대하게 포장된 것으로, 농장 운영을 방치하여 현 상황을 유도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우려되는 도저히 납득하기 곤란한 것이다.

배경상황

문제가 된 지역은 전남 ○○군 ○○골프장 진입도로변에 위치한 타조농장으로서 주변이 낮은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농장 축사로부터 약 15m 떨어져 2차선 도로가 있으며, 타조농장은 도로면보다 약 3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도로 건너편은 밭 등 농경지가 있으며, 타조농장과 골프장 간의 최단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410m이다.

이 지역은 농장 앞 도로를 통과하는 골프장 출입차량의 소음 이외에는 소음원이 없는 조용하고 평온한 곳이다.

골프장은 ○○군 ○○리 일대 약 29만평의 부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시설로서, 시행자는 당초 (주)○○로서 1996년 6월 공사에 착

공했으나 부도로 중단하였고, (주)○○가 인수하여 2002년 11월부터 시공사인 ○○건설(주)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2004년 3월에 사업시행자가 (주)○○로 다시 변경되었으며 2004년 12월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되었다.

골프장 공사를 위해 벌목·절성토·발파작업을 실시했고, 공사차량은 신청인의 타조농장 앞 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공사차량은 덤프·스카니아·레미콘 차량 등이 공사자재 등을 운반하기 위해 하루 평균 19회 정도 타조농장 앞 도로를 통과하였다.

벌목작업은 공사 초기에 하였으며, 하루 평균 4명의 작업인부가 배기량 400cc의 전기톱으로 소나무·은사시 등 직경 약 15cm 정도의 나무를 하루 약 600주씩 벌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성토 작업은 골프장 코스·조정 공사 등을 위해 백호우·불도저·덤프차량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발파작업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하루 평균 약 4회 정도 이루어졌으며, 발파시의 1회 화약 사용량은 2 내지 1,800kg이었다. 발파 후 파쇄암 운반을 위하여 굴삭기·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였다.

신청인의 타조농장은 ○○군 ○○리 산 72-13번지에 위치해 있고, 축사면적은 반개방형 2개 동으로 구성된 총 7,115㎡이며, 축사 옆에 위치한 관리사 내에는 부화실이 있다. 타조농장은 반타원형 형태로서 도로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농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야산쪽으로 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신청인은 타조농장에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은 ○○군 ○○리 왕복4차선 도로가

위치한 곳에서 타조농장을 운영하다가 2001년 9월부터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여 농장을 운영하여 왔다.

타조사육 마리 수는 ○○군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2월에는 암컷 24마리, 수컷 35마리 등 59마리였고, 피해주장 시점인 2002년 12월에는 70마리, 2003년 12월에는 165마리, 2004년 5월에는 암컷 120마리, 수컷 30마리 등 150마리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5년 6월 전문가 조사시에는 144마리 가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타조피해가 있던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년 이하의 어린 타조 137마리, 2년 이상의 성숙 타조 56마리가 폐사하여 폐기처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타조농장 내에 방치된 부패상태의 7마리 이외에 수의사의 폐사진단서나 피해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그 밖의 폐사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골프장 조성공사시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 작업일지, 발파일지 및 떨어진 거리, 사용 장비, 지형여건, 축사건물 형태 등을 토대로 공사종류별로 추정되는 최고 소음도는 벌목 공사시 50~56dB(A), 절성토 공사시 51~58dB(A), 발파공사시 53~76dB(A), 공사차량이 타조농장 앞 진입도로 이동시 63~69dB(A)로 나타났다.

골프장 발파작업시 제출된 발파작업 자료를 토대로 사용된 1회 발파당 화약 사용량은 최대 65kg이고 가장 잦은 1회 발파당 화약사용량은 8~30kg 사이로서, 골프장의 발파작업시 제출된 현장의 시험발파를 통한 발파진동 추정식에 따라 떨어진 거리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신청인 축사에서 추정되는 최고 진동도는 67~75dB(V)로 나타났다.

전문가의견

신청인 농장의 타조 사육 시설 및 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사육·산란·폐사·질병 등 기록관리체계가 없으며 신청인이 농장에 거주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관계로 전반적으로 사육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체별 번식, 폐사 및 진료 등에 관한 수의사 진단서 등 판단근거 자료가 없고, 관할 군청의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서와 신청인의 제출자료만으로는 검토에 한계가 있으나 공사기간 중 소음에 의하여 일부 산란을 저하,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타조 피해는 폐사, 성장 지연, 산란을 저하에 한하여 피해를 10%를 적용하되, 폐사 두수는 연도별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성숙 타조 40%, 자녀 타조 60%를 적용하고, 사육 두수는 피해기간 중 평균 사육마리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정상산란율은 18개월 이상 암컷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평균 60개 산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난가격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격을 인정한다. 다만 신청인의 사육관리 부실에 기인하는 과실은 20%로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사건의 인과관계 검토

신청인의 타조농장이 위치한 지역은 야산으로 둘러싸여 골프장 통과차량 이외에는 다른 소음원이 없는 조용하고 평온한 지역이고, 지질이 암반층으로 연결되어 있어 발파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받기 쉬운 지역으로 판단된다.

발파작업시 사용한 화약량 등을 토대로 소음도와 진동도를 추정할 때, 신청인 타조농장

에서의 최고 소음도는 53~76dB(A), 최고 진동도는 67~75dB(V)로 나타났다.

2001년 12월에 발표된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타조의 경우 증가소음도 60~70dB(A) 정도의 소음 수준에서 성장 지연, 산란율 저하 등의 피해가 10~20% 정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고 소음도 70~80dB(A) 정도에서 폐사와 부상 등의 피해가 10~20% 정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을 조사한 전문가 의견에서도 신청인의 타조농장 환경 여건과 발파 작업시에 추정된 소음·진동도 등으로 보아 골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폐사, 성장 지연, 산란율 저하 등 타조 피해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진동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증가소음도 70dB(A), 충격진동도 86dB(V)를 초과하지 않아 소음·진동으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배상액 산정

피해액 산정식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01년에 발간한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의 가축피해금액 산정식에 따랐다.

- 타조 폐사에 따른 피해액(1,410만원)
 - 타조 폐사 피해액=폐사 두수×타조 가격
 - ※ 폐사는 피해기간 중 00군청의 가축사육 확인서상의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연도별 10% 폐사를 적용하였고, 폐사 구성은 성숙 타조 40%, 자녀 타조 60%를 적용하였다. 타조 가격은 2004년 6월 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성장지연에 따른 피해액(958만4,640원)
 - 성장지연 피해액=사육 두수×성장지연율×타조 가격×(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사육 두수는 피해기간 중 00군청의 가축사육확인서상의 평균 사육두수를 적용하였고, 성장지연율은 10%를 적용하였다.
- 산란저하에 따른 피해액(1,048만3,200원)
 - 산란저하 피해액=정상산란 수×산란저하율×난 가격×(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정상 산란수는 생후 18개월 이상의 암컷 한 마리당 연간 60개의 산란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산란저하율은 10%를 적용하였고, 난 가격은 신청인이 주장한 가격으로 산정하였다.
- 타조 피해총액에서 신청인의 타조사육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20%를 감액하였다.
 -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관련자료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741만6,262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표현대리에 의한 연대보증책임 성립 여부

정 준 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선임검사역(변호사)
(jja@fss.or.kr)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와 동일한 변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일반보증인과 달리 최고(催告)·검색(檢索)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이행 청구에 대해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입증하여도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러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없다.

연대보증은 친구나 가족 등 인적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보증인이 된 자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연쇄 파산이나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간에 직접 보증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서류만을 소지한 주채무자나 제3자 등을 통하여 대리형식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종 당사자 간에 계약성립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는 제3자에 의하여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표현대리에 의한 계약성립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내용

사실관계

피신청인(A캐피탈社)은 지난 4월 19일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 자동차할부금융 2,500만 원을 취급하면서, 신청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할부금융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경위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D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부터 요구하였다. 또한 신청인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신청인의 배우자(조사 결과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제3자로 확인)라 사칭한 사람과 통화하여 신청인이 보증을 설 뜻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할부금융의 주채무자인 B도 자신의 인

감증명서 등이 도용되어 대출이 취급되었다며 대출채무를 부인하는 내용의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상기 관련 서류를 사채업자인 C(현재 신청인의 고소로 수배 중)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사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타인에게 준 사실이 있으나 본건 대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본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청인의 연대보증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본건 대출을 취급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신청인은, 본건 대출은 피신청인과 D자동차판매(주) 간에 체결된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D자동차판매(주)가 신청인의 대리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것이고, 대출 취급 당시 전화를 통해 신청인의 배우자로부터 보증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출서류에 신청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연대보증계약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청인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직접 연대보증 행위를 하거나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출 관련 서류에 신청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이상 신청인이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타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판례(대판 1989. 4. 11. 88다카13219)에 따르면 제3자가 본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제3자가 본인을 위하여 연대보증 등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건에 있어 인감증명서상 사용용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신청인의 연대보증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보증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제3자의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이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유효한 보증의사 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조사결과 실제 배우자가 아닌 제3자임이 확인되는 등 신청인의 연대보증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설

본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직접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었으나, 관련 서류가 교부되었으며 보증의사를 확인한 이상 제3자를 통한 연대보증계약도 유효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었다.

민법은 표현대리제도를 통하여 대리권이 없는 제3자에 의해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때에도 거래상대방이 그 제3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 대리권의 존재를 믿는 데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판시하면서도, 상대방이 전문가인 금융회사일 경우에는 정당사유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판례와 동일한 입장에서 연대보증계약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와의 대출계약까지 관련 서류가 도용되어 제3자에 의해 위법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정당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관련 서류나 인감취득이 용이하여 남용사례가 자주 발생된다는 점에서, 배우자를 통한 보증의사 확인은 적절한 본인의사 확인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최근 신용사회 구축과 보증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대출 관련 연대보증제도는 보증건별 1인당 연대보증금액을 제한하거나 보증총액한도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되어 왔으나, 연체채무에 대한 대환대출 등의 경우 금융회사가 무분별하게 연대보증을 요청하는 관행은 여전하며, 서류만을 구비한 주채무자를 통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빈번한 실정이다.

연대보증인이 제3자를 통하여 체결된 본인 명의의 보증계약을 부정하는 경우, 상대방인 금융회사는 제3자가 연대보증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성립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결정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래의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연대보증인이 작성한 위임장이 첨부되고, 보증


인의 보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나 대리발급시 위임장의 사용용도와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 및 인감이 일치하는 경우 등)와 인감이 제출되었으며, 기존에 정당한 대리권에 의거한 계약 사실이 존재하여 상대방이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회사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금융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立保)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기도 하였다. 다만 보증의사의 확인이나 자필서명이 없어도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것은 보증의사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연대보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여신업무가 선진국과 같이 개인에 대한 철저한 신용평가를 전제로 한 신용대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금융거래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계약 체결시 금융회사에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연대보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보증의사의 명확한 확인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금융회사에게 이러한 주의의무를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무한 소재를 찾아라



김덕만

국가청렴위원회 공보관
언론학 박사, 前 헤럴드경제 기자
(bodo24@naver.com)

‘보도자료’란 무엇인가.

보통상적으로 정부·공공기관·단체·기업 등 조직의 공보(홍보) 부서 또는 관련 부서가 호의적으로 보도되기를 원하는 내용을 담아 언론에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하게 되는 자료들이다.

다시 말해 보도자료는 보도가 될 만한 소재를 기사 요건에 적합하게 정리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홍보주체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보도자료의 소재는, 조직의 인사 단행에서부터 정책 도입·시행, 신제품 개발, 연구 결과물, 공적 수상, 인물 동정 등 매우 다양하다.

보도자료 소재는 곧 언론홍보 소재다. 기자가 말하는 ‘기사거리’란 말도 언론홍보 소재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영어로는 보통 보도자료를 ‘Press Release’로 부른다. 언론학자 L. M. 윌터스와 T. N. 윌터스는 “보도자료는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이며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홍보도구”라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는 정부·기업·단체 등에서 기자들에게 보내는 모든 언론 보도용 자료들을 보도자료로 통칭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뉴스성이 높은 홍보 소재를 비롯하여 기자들이 즐겨 찾는 기사거리, 정책 부처별 보도소재 등 무궁무진한 보도자료 소재들을 찾아본다.

뉴스성이 높은 보도소재 10 요소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이 ‘뉴스성 높은 열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을 때 보도가치가 높아진다.

① 시의성 : 기사로 채택되려면 뉴스성이 있어야 한다. 삼일절·단오·광복절·제헌절·설날·추석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기념일에 관련된 기사거리를 만든다면 뉴스가치가 있을 것이다. 광복절이나 삼일절에 독도와 관련된 공익 캠페인을 후원하거나 주관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면 뉴스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다.

② 진기성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특이한 사건과 행사여야 기사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집 떠난 진돗개가 전국을 돌아왔다든지, 소변이 성인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지 하는 것이다.

③ 갈등성 : 평범한 조화로움보다는 갈등지향적인 요소가 담기면 기사화될 확률이 높다. 김치 납성분 검출 논란, 방폐장 설치 및 유치 마찰, 고속도로 경유노선 분쟁, 삼성전자와 인피니온 간 반도체가격 분쟁, 걸프전, 중동 인종분쟁, 라면업체 간 쇠고기 분말 첨가 시비 등은 갈등지향적 뉴스가치의 좋은 사례다.

④ 유명성 : 기사는 지명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있다. 보아·이효리·김정은·박신양 등 인기 연예인 이야기, 황우석 교수의 식생활 습관, 김우중 前 대우 회장 이야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생활, 이견

희 삼성그룹 회장의 건강비법 등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냈다면 많은 언론이 보도할 것이다.

⑤ 공익 가치 : 언론은 사회제도 축진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에 대해 기사 비중을 많이 둔다. ‘아름다운 가게’ 운영, 불우이웃 돕기, 장학재단 설립, 교통질서 캠페인, 사회복지사업 후원 등을 들 수 있다.

⑥ 흥미성 : 기사는 흥미가 있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흥미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개발하면 기사화될 가능성이 높다. 코끼리가 우리를 탈출해 도심을 활보한 이야기, 물에 빠진 사람을 개가 구출한 일 등은 매우 흥미 있는 얘기가 된 바 있다.

⑦ 섹스 : 유사 이래 성생활은 인간의 본능이다. 미디어에서 다루는 성에 관한 기사는 항상 열독률이 높게 나타난다. 과학적으로 성기능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약품·식품·물리기구 등이 개발됐다면 보도자료로 배포될 만하다.

⑧ 탁월성 : 산업자원부의 괄목할 만한 수출통계, 스포츠 메달경쟁, 기술 국산화 등을 들 수 있다. 장애를 딛고 우승한 운동선수의 승리, 초등학생이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이야기는 좋은 기사거리이다.

⑨ 의미 있는 전망 : 의미 있는 전망보도 소재로는 국내외 경제기구의 경제전망 및 산업전망, 통계, 여론조사, 학술논문, 연구 발표 등을 들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국제경영개발원(IMD)·국제투명성기구(TI) 등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항상 지구촌 신문 지면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⑩ 자본 :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이해 관계에 얽힌 얘기에 관심을 갖는다. 퀴즈대회 우승, 직장인 복권 당첨, 산삼 횡재, 재테크, 부동산 급등 등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기업이 있다면 이를 정리해 볼 만하다. 2005년 10월 구인구직 포털업체인 잡코리아가 미국의 기업에 수백억원에 매각된 사실, 어느 경찰관의 수백억원대 로또복권 당첨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자가 찾는 기사거리를 파악하라

정당 및 정부기관, 기업체 정책홍보 담당자들은 매일 보도자료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게다가 홍보 초심자에게는 보도자료 발굴이라는 업무가 더욱 어렵게만 느껴질 것이다.

역으로 말해 기자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다. 기관마다 조직의 업무가 방대한 데다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기사 발굴이 쉽지 않다. 더욱이 기자 입장에선 상당 업무를 숙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입부처 담당자들의 협조 한계로 취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정책진단 신문’을 표방하고 있는 『서울신문』이 펴낸 「기자 매뉴얼·교열편람」의 ‘공공기관 취재활동 10계명’이 관심을 끈다. 기자들의 취재 요령이지만, 홍보인도 이를 참고로 보도자료를 개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일부 내용을 재구성해 보았다.

‘공공기관 취재활동 10계명’

1. 취재원이 주는 자료나 정보를 그대로 받아써서는 안 된다.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본 뒤 독자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고 궁금한 것들을 확인하여 기사에 반영한다. 그래픽이나 도표, 사진도 마찬가지다. 그래픽이나 도표의 단위표시 역시 우리 표기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다른 신문에 나온 보기 좋은 그래픽을 스크랩하자.

2. 기사거리가 아무 것도 없다는 식의 취재보고는 곤란하다. 오전에 개략적으로 취재 제안한 내용은 오후 편집회의 전까지 반드시 구체적으로 보고하자.

3.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자. 특히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게시판을 보면 민심도 읽을 수 있고 의외의 기사를 발굴할 수 있다.

4. 하찮은 정보라도 공유하고 보태면 특종기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자기에게 별 의미 없는 정보라도 다른 기자에게 알려주면 큰 기사를 발굴하는 경우가 많다. 출입처 주변에 떠도는 소문을 그냥 넘기지 말고 수

시로 내부 정보망에 정보 보고를 띄우자. 엠바고 사항은 보고하고 부서장 회의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5. 신문을 열심히 읽는다. 어느 것이 이미 보도된 내용인지, 어느 것이 새로운 내용인지 판단하려면 틈나는 대로 경쟁지까지 읽어야 한다. 경쟁지를 열심히 읽으면 기사가치 판단에도 도움이 된다.

6.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보자. 일찍 출입처의 기관장실에 들러보고 주간·월간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자.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도 떠오른다.

7. 기획력은 기자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지표다. 자기 출입처 일이 아니더라도 주요 정책의 흐름이나 시민단체·기업의 동향 등 일관된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8. 주제를 확실히 잡아서 발제하자. 그러려면 발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나 출입처 취재원에게 물어보는 일을 주저하지 말자.

9. 발제 내용이 바뀌면 수시로 전화하거나 추가 발제를 통해 알린다. 발제 때와는 달리 별 내용이 없으면 데스크와 상의하여 발제를 취소한다.

10.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 기사를 전송했을 때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 전화를 한다.

넘쳐나는 보도자료 집결지, 경제부처

언론사 취재보도 부서 중에서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보도자료가 가장 많은 곳이 경제부다. 경제기자들의 출입처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금융감독기관 등이다. 언론사는 신문 및 방송 공히 경제부를 두고 있으며 별도로 세분화시켜 금융부·증권부·산업부 등의 부서를 두는 언론사도 있다.

언론학자 서병호·김춘식에 따르면, 199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재정경제부가 배포한 411건의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지의

경우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기사가 1면에 게재된 비율이 40.4%에 달했다.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매우 중요한 취재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부처의 홍보소재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부처 홍보소재 : 국가경제정책, 산업자원정책, 환율, 원자재 시황 및 분석, 증권시황, 자금동향, 경제연구원들의 연구발표, 금융업계의 경영, 주가지수 변동, 주기(일간·주간·월간·계간·반기·연간)별 산업실적 동향, 조직개편, 고용동향, 노사문제 및 노동환경, 무역분쟁, 리콜시비, 동종 금융상품 간 가격경쟁, 기업 간 인수 및 합병, 합작 및 제휴동향, 해외 진출, 외국기술 도입, 경제연구원들의 경제흐름 분석 및 전망기사 등

주택정책도 주요한 기사거리이다. 우리나라는 3천만이 모두 부동산 전문가 같다. ‘집 사서 돈 벌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누구나 주택정책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부동산 정보는 보도되면 다른 기사에 비해 열독률이 높다. 아파트가격 등락에 관한 주간·월간·분기 통계도 잘 읽히는 기사다.

* 부동산 홍보소재 :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 규칙 변경에 따른 파장, 세제 변화, 교통망 확충, 부동산시장 변화, 주택분양, 공사수주, 뉴타운 개발 정책 등

또한 언론사의 유통담당이 출입하는 백화점과 재래시장에 관한 정책 기사도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

홍보소재의 보물창고-인터넷·IT·과학

언론사에는 정보기술(IT) 산업과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정보기술정책 연구기관 등의 정부부처 기사들을 취급하는 취재부서가 있다. 언론사마다 부서 명칭이 다르지만 정보과학부·정보통신부·디지털부·과학기술부·문화과학부 등에서 관련 기사를 취재·보도한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新경제 바람이 거세게 일면서 벤처정책 및 산업만 홍보하는 홍보 대행사들이 20여 개 등장했다. 2000년대 들어 다시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명백만 유지하는 곳이 많지만 벤처 홍보대행사들의 언론 홍보 활동은 다른 업종 홍보에 비해 선진화됐다.

IT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 산하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이 주된 홍보소재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요즘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기술 개발로 홍보소재가 많아졌다. 지난 10월 중순 서울대병원에 개설된 ‘줄기세포허브’는 앞으로 전세계 과학기술과 의학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의 메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보건복지정책, 정보통신기술 등도 복합적으로 많이 접목·파생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정보기술·과학 등을 아우르는 보도자료 생산도 붐몰을 이룰 전망이다.

한편 관련 부처 담당자들은 아직 통계가 마련되지 않은 생명공학 분야의 통계체계도 하나하나 잡아갈 야 할 것이다.

* 인터넷 홍보소재 : 웹사이트의 편리성, 콘텐츠의 다양성, 도메인 주소 정책, 웹 기술,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 정보통신 홍보소재 : 유비쿼터스, 초고속 국가망·선도망·공중망 사업, 고품질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차세대 인터넷, IPv6 기반구축 및 확산, 핵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국제협력사업, 해킹·바이러스·스팸메일,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 범람, 지역 및 기업 정보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유무선 통신사업, 음성·데이터 간 융합, 번호 이동성 통신서비스, 디지털 방송산업, 전과관리, IMT-2000산업, 블루투스, 무선랜(LAN), IT 속출 및 국제무대 진출 등

* 과학 및 의학 홍보소재 : 인공위성, 과학인재, 이공계 지원정책, 과학자 논문, 과학기술정책, 방폐장 건설정책, 원자력 안전 홍보, 기술산업 경쟁력 제고,

기상 및 천문학 업무,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신기술 융합, 전통기술, 보건복지정책, 의사, 약사, 식품, 의료산업 등

홍보로 대박을 터뜨리는 문화·관광 산업

문화 분야는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체육·관광·문화 등의 산업정책 보도자료가 많이 생산된다.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참살이(웰빙)붐이 일면서 문화 및 레저 산업 정책도 매우 긴요해졌다. 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한국관광공사, 문화콘텐츠진흥원, 골프장업협회, 사회체육단체, 출판·잡지 단체, 인쇄업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송에서는 방송과 통신 융합으로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과 문화관광부의 방송정책을 아울러서 보도 자료를 발굴해야 한다. 위성·인터넷·케이블 방송 등의 방송·통신 정책 등이 보도자료로 개발될 수 있다.

출판계 보도자료는 출판인들의 구심체인 한국출판문화협회의 활동이 주류를 이룬다. 모든 출판사는 자사 출판물을 문화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출판문화협회에 납본해야 하며 여기서 나오는 통계가 보도자료로 중요하다.

아시아에 퍼지는 한류바람이 거세게 일면서 영화·방송·음악 부문의 정책도 중요해졌다. 북파 공작원의 훈련 모습을 담은 국산영화 ‘실미도’의 경우 역사상 초유료 관객 1천만명을 돌파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살인의 추억’·‘태극기 휘날리며’ 등의 영화들도 방영되자마자 매진사태를 빚었다. 우리 영화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도 기여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굴뚝 없는 효자 산업인 문화산업을 얼마나 잘 육성하고 이를 또 잘 홍보하느냐의 여부는 정책홍보에 크게 달려 있다. ■

OECD의 세계무역 관련 논의동향(上)

OECD 규약 제1조에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OECD의 주요목적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OECD의 모든 논의는 세계무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혜민

駐OECD대표부 공사참사관
(hmlee80@mofat.go.kr)

무역위원회,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OECD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를 통해 세계 자유무역의 증진에 기여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추진하는 것과 1978년 체결된 '수출신용협약(Export Credit Arrangement)'과 관련한 업무 등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일본·중국 등 3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산업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국제규범을 논의하는 新조선협

상과, 2001년 9월부터 개시된 철강보조금 규율을 위한 협상이 OECD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을 통해 무역과 관련된 환경·농업·경쟁 이슈들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역위원회와 수출신용협약과 관련한 최근 논의동향을 이번 호와 다음 호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1961년 9월에 설립된 무역위원회는 OECD 산하 위원회 가운데 가장 역사가 긴 것 중의 하나로서, 지난 1995년 WTO 출범전까지 세계무역의 확대 및 다자규범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개도국 특혜관세제도(GSP) 개념을 비롯하여 반덤핑·비관세장벽·정부조달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쳐 개념을 정립하여 GATT 체제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바 있고, 1980년대 초에는 서비스교역·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여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 협정 및 UR 지적재산권 협정이 탄생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駐OECD대표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무역원활화 등에 대한 연구 추진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2002년 이후에는 DDA 협상의 주요 의제인 서비스·무역원활화·개도국우대 등에 대한 연구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OECD 무역위원회가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연구작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과 구조조정(Trade and Structural Adjustment)’에 대한 연구이다.

2003년 5월 OECD 각료이사회 때 스웨덴의 제안으로 추진되어 2005년 5월 OECD 각료이사회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동 보고서는 서비스 무역장벽 제거가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핵심사항이며, 무역자유화에 따른 혜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①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복지정책 ②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개혁 ③안정과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④사양산업 분야에서 성장 분야로 노동력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탄력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관세인하가 개도국 정부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changes in tariffs on developing countries government revenue)’에 관한 연구이다.

DDA 협상에 따른 관세 인하로 개도국들이 관세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세개혁은 전체 세계개혁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며, 관세 인하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세인하 방식의 강구 및 관세를 포함한 세계 개혁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에 관한 연구이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하여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영향, 무역원활화 조치 도입 및 이행비용, 자동화(automation)의 역할 등 세 가지 보고서가 현재 준비 중에 있다.

각국별 경험, 기업실사 등을 통해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경통관절차 개선, 세

OECD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의 확대 및 다자규범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1995년 WTO 설립 이후 최근에는 실질적 기여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WTO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다자협상 관련 연구에서 세계무역과 관련한 장기과제 연구로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관계혁 등 무역원활화 조치가 정부세입,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무역원활화 조치 도입에 따른 이행비용은 효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세관 자동화에 따른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무역원활화 및 세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 자동화의 이익이 비용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넷째, ‘개도국 우대(SDT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관련 연구이다.

현재 SDT 이슈와 관련, SDT 일반, 무역원활화와 SDT, 지역무역협정(RTA)상의 SDT에 대한 연구작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 협정상의 SDT에 대한 보고서는 곧 공개될 예정이나, 이 문제에 대한 각국들의 의견 차이가 커,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WTO와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 제기돼

UR 협상 타결로 1995년 WTO가 설립되어 세계 무역규범 제정작업의 핵심축이 완전히 제네바로 이동하였고, WTO를 중심으로 다자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최근에는 세계무역과 관련한 OECD 무역위원회의 실질적 기여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네바의 관련 협상테이블에서 선진국들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이 주로 강조돼 사실



▲OECD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 DDA 협상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연구보고서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민감한 사항의 연구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들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협상결과를 예단(prejudge)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어 연구작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6월에는 서비스 협상과 관련, 현행의 협상방식(request/offer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를 WTO 서비스협상그룹 의장으로부터 요청 받았으나 EU·미국 등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사항임을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된 바도 있다.

이에 따라, OECD 무역위원회와 WTO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며 무역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다자협상 관련 의제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무역과 관련한 장기과제를 연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에 의한 연구작업이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며, OECD 모든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창조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WTO/DDA 비농산물 분야 시장접근 협상 동향 및 전망

WTO/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은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 분야에 대한 관세감축 등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라 할 수 있다.

협상 대상은 공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산물 성격과 비슷한 수산물과 임산물이 포함되어 있어 공산품 협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정점·고관세·경사관세의 완화 및 철폐가 목표

현재 추진되고 있는 DDA 비농산물 분야 시장접근 협상의 목표는 간단히 비농산물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하(Doha) 각료



안창국

駐제네바대표부 재경관보
(zest88@naver.com)

선언문에서 협상지침으로 주어져 있다. 비농산물 분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전에 특정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협상해 나가는 한편,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정점(tariff peak), 고관세(high tariff) 및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의 완화 및 철폐라고 그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관세정점이란 특정 품목이 평균관세 수준보다 높은 관세율을 가지는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에 주로 나타나는 관세구조라 할 수 있다. 고관세는 전반적으로 관세율 수준이 높은 경우로 개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사관세는 완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당해 산업에서 사용하는 수입원료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완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나타나는 관세구조이다.

선진국은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 DDA 협상을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駐제네바대표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DDA 비농산물 분야 시장
 접근 협상은, 2004년 7월 패키지
 합의를 통하여 감세감축공식, 분야별
 접근, 비관세장벽 해소 문제 등에
 대하여 협상 진전을 위한 증거점을
 어느 정도 마련하게 되었다.

통해 대폭적인 관세감축과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개도국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고 개도국의 고관세 문제 해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비농산물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 개도국이 처해 있는 대내외 상황을 감안하여 무역자유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DDA 협상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우대를 받아야 하고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이 민감품목이라는 명분으로 높은 관세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품목은 대부분 개도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개도국이 실제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관세정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7월 패키지 합의 통해 협상진전 증거 마련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은 우여곡절 끝에 2004년 7월 패키지에 합의함으로써 협상 진전을 위한 증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7월 패키지에 포함된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과 관련된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관세감축공식과 관련된 사항이다.

관세감축공식 논의는 일정한 공식에 따라 회원국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월 패키지에서는 관세감축공식과 관련하여 비선형공식(non-linear formula)을 사용하고 모든 품목(line-by-line)에 대해 예외 없이 공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축성이라는 명분으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다.

양허비율이 향후 협상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한 35%를 넘지 않는 국가와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양허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액 10% 범위 내에서 전 품목의 10%까지는 공식에 의한 감축보다 낮은 감축을 하거나, 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전 품목의 5% 미만에 대해 미양허를 계속 유지하거나 공식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이행기간도 보장하고 있다.

둘째, 분야별 접근과 관련된 사항이다.

분야별 접근이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거나 유사한 관세율을 적용하지는 논의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관세감축공식보다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은 분야별 접근방식의 의무적 적용을 주장하고 관세감축공식과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이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이러한 양측의 대립을 반영하듯 7월 패키지에는 뚜렷한 합의보다는 분야별 접근은 Doha 각료선언의 협상지침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대상 분야와 참여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비관세장벽 해소 문제이다.

비관세장벽의 다양성과 복잡하고 기술적인 성격 때문에 합의사항도 분야별 접근과 유사하게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다. 비관세장벽 해소를 이번 협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사한 유형의 비관세장벽을 함께 논의하는 수평적 접근방법, 해당 산업별의 비관세장벽을 논의하는 수직적 접근방법, 양자 협상을 통한 해결 등

해결 방법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7월 패키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가장 명확하게 선진국과 개도국 간 합의를 도출한 것은 관세 감축공식을 통해 관세를 감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감축공식의 형태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쉽게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실제 7월 패키지 이후 그간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은 관세감축공식의 형태 및 구조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지난 7월 29일 WTO 일반이사회를 끝으로 2005년 상반기 DDA 협상은 마무리되었다.

회원국들은 올 초에 2006년 말까지의 DDA 협상을 종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그 토대를 마련하며, 2005년 7월까지 홍콩 각료회의 결과물의 1차 윤곽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중간 시험대인 올해 상반기까지의 1차 윤곽 마련 구상은 비농산물 분야를 포함하여 전체 협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

비농산물 협상 분야의 경우 핵심 이슈인 관세감축 공식에 대한 회원국 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핵심 이슈에 대해 각국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한 것 자체가 협상 진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의 요한슨(S. Johannesson) 의장은 “관세감축공식 논의는 교착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의견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진전이 있었으며 무역자유화 세부원칙 일부요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두 관세감축 공식 구조 둘러싸고 양분

관세감축공식 논의에 있어 핵심 쟁점은 공식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다. 각 회원국이 제안한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과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 제안 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이 계속되었다.

‘스위스 공식’은 미국·유럽연합·노르웨이·중미 3국 등이 제안한 것으로 과감한 관세감축을 공통 사항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한 관세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관세율이 높을수록 감축 폭이 크다. 동 공식을 적용할 경우 고관세 문제 해소에는 유리하나 관세정점 문제 해소에는 다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ABI 제안’은 아르헨티나·브라질·인도가 공동 제안한 것으로 각국이 처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다소 신축성 있게 관세감축을 할 수 있는 지라르(Girard) 공식을 변형한 제안이라 할 수 있다. ABI 제안은 각국의 평균관세율에 따라 관세상한이 설정되도록 하고 있다. 관세율이 높을수록 감축 폭이 적은 방식으로 감축공식을 적용한 후 각국의 평균 양허세율에 수렴하기 때문에 경사관세·관세정점 해소에는 유리하나, 관세율이 높을수록 감축폭이 적기 때문에 고관세 문제 해소에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관세감축공식과 관련된 전반적 논의 동향은 지난 6월 제주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APEC 차원에서 스위스 공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스위스 공식이 전체적으로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브라질·인도가 ABI 공식을 계속 고집하면서 스위스 공식으로의 합의 도출 분위기를 저지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현재까지는 스위스 공식으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양허품목 처리문제는 미양허품목에 대한 양허 여부 그리고 양허된 품목의 관세감축공식 적용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미양허품목에 대해 100% 양허하고 양허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축한다는 원칙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모멘텀으로 하여 현재는 저율의 미양허품목에 대해 실

올 12월 홍콩 각료회의 전까지
관세감축공식과 관련된 계수, 신축성
인정 여부 및 수준, 미양허품목 처리
문제 등 핵심요소에 대해 구체적 수ちに
기초한 통합적인 방식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용적인 처리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
에 있다.

7월 패키지에서는, 미양허품목 처리와 관련하여
미양허품목의 기준 세율은 실행세율의 두 배를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방식대로 하면 저관세
미양허품목의 경우 기준세율이 너무 낮아지고, 고
관세 미양허품목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캐나다 및 홍콩은 미양허 실행세율에 5%의 상수를 추가하여 기준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멕시코는 저율관세에 대해서는 높은 부가율(mark-up)을 고율관세에 대해서는 낮은 부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그리고 파키스탄은 실행세율에 30%를 부과하는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는 이들 방식 중 보다 적합한 처리 방안과 구체적인 부가율을 결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비관세장벽 및 분야별 접근 논의 활발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논의는 비관세장벽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은 비관세장벽의 리스트를 통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자적 검증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상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동 제안서

를 토대로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전자 분야, 미국의 자동차 분야, 뉴질랜드의 임산물 분야 등을 중심으로 수직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특정 산업이 직면한 비관세장벽을 발굴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분야별 접근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로 다소 논의가 지연되어 왔으나, 최근 양자 또는 복수 간의 협의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논의가 활성화되는 모습이다.

선진국은 분야별 접근 방식이 실질적인 시장 개선을 위한 과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세감축공식과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개도국은 분야별 접근 논의에서는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관세감축공식을 논의한 후 그 성과를 감안하여 분야별 접근 방식을 논의하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 중 미국과 캐나다가 비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일정 수준의 국가들이 참여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동 방식에 대한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분야별 접근 방안의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전자·전기, 자동차, 화학, 수산물, 신발, 임산물, 보석·귀금속, 자전거·스포츠용품 등에 대한 분야별 접근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상 분야에서는 품목범위 선정, 분야별 접근에서 개도국 우대 내용 및 수준, 참가 범위 등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타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품목범위 문제와 비종가세의 증가세 상당치 전환 문제이다.

품목범위 문제는 NAMA 협상 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을 정하는 문제이다. 증가세 상당치 전환 문제는 비종가세로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증가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결정하

는 것이다. 두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현재 사무국이 작성한 가이드 라인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수치에 기초한 협상 전개

요한슨 의장은 상반기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하반기에는 수치에 기초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각국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협상에 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당수 회원국은 이에 대해 논의와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관세감축 공식의 구조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수치에 기초한 협의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실제 하반기 협상은 수치에 기초한 협상이 진전되고 있으며 그 상황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9월 하반기 비농산물시장 접근 협상 공식 협의에서는 관세감축공식과 관련하여 스위스 공식을 기초로 하되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해 계수를 각각 6과 30으로 부여하는 파키스탄 방안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수치에 기초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멕시코는 관세감축공식, 미양허품목 처리, 개도국 신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협상 목표와 신축성 간의 수리적인 균형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7월 패키지의 관세감축공식 핵심 요소를 모두 포괄하면서 수치에 기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일본 주최 고위관료회의(SOM)에서 EC측은 스위스 공식을 기초로 하여 선진국 계수로 10을 제시하여 논의 진전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을 하였다.

요한슨 의장은 그간 논의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비공식 전체 대표단 회의에서 향후 논의와 관련한 자신의 구상을 언급하였다. 관세감축공식, 개도국 신축성, 미양허품목 등 3개 핵심요소에 대해 수치에 기초하여 통합적(integrated way)으로 협의를 진행하되 10월 말까지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관련 세부원칙 초안을 작성한다는 목표가 그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되어 10월 비농산물 시장접

근 공식회의에서 뉴질랜드는 스위스 공식을 기초로 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계수에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하고 계수의 크기에 따른 시장접근 개선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의장 주재로 소수 국가가 참여하는 비공식적 협의가 개최되어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논의하는 방식의 협의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의장의 구상에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브라질·인도·아르헨티나 등은 우선 농업협상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인 수치에 기초한 논의에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도국은 신축성과 관세감축 공식을 통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의장 제안에 대해 개도국의 신축성과 관세감축 공식의 계수는 별도의 사안으로 교섭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장 제안대로 10월 말까지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수치에 기초한 통합적 협의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농업협상에 있어서도 미국, G-10, G-20 등이 제안을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가 논의되고 있어 농업협상이 급진전될 경우 상기 국가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 임하게 되어 협상이 크게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협상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오는 12월의 홍콩 각료회의가 구체적인 성과 없이 결렬될 경우 다자협상 전체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회원국 간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각 협상 분야별로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비농산물 분야 협상에서도 홍콩 각료회의 전까지는 관세감축공식과 관련된 계수, 신축성 인정 여부 및 수준, 미양허품목 처리문제 등 핵심 요소에 대해 수치에 기초한 통합적인 방식의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주식투자는 OK, 그러나 주가지수가 부담될 때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기대만큼 불안도 큰
가 보다.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1200포인트
를 넘나들고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면
서 눈에 띄게 늘어난 질문이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
겠는가” 하는 내용이다. 아무리 우리 주식시장의 중장
기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산봉우리 모양을
보이고 있는 주가지수 그래프는 투자자의 불안을 자
극시키는 요인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렇듯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나 단기간
에 많이 오른 지수가 부담이 된다면 주가지수의 영향
을 비교적 적게 받는 투자방법으로 눈을 돌려보자. 적
립식펀드나 시스템펀드, 가치주펀드 등은 주식투자상
품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주가지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
상품들이다.

적립식펀드는 특정 상품명이라기보다는 주로 주식
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를 적립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투자할 때, 이것이 적립식펀드 혹은 적립식
투자가 된다. 이렇게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게 되면
무척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적금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꾸준히 투자함으로
써 투자시점이 분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
하는 시점이 분산되면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자연
스럽게 투자 단가도 하향 평준화하게 된다. 즉, 매월
같은 금액을 적립식펀드에 투자한다고 하면 주가가
올랐을 땐 같은 금액으로 적은 수량의 주식을 구입하
게 되지만 주가가 떨어졌을 땐 반대로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매입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주식투자는 결국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남는 것
인데 적립식 투자가 바로 쌀 때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되고 비쌀 땐 주식 수량이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목적에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투자한 금액이 나중에 효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하락할 때가 기
회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적립식펀드 혹은 적립식 투
자는 처음 가입하는 시점보다는 만기에 돈을 찾는 환
매시점이 중요해진다. 언제 환매하느냐에 따라 투자
성차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으로 그동안 투자했던 평
균단가보다 주가수준이 높을 때 환매를 해야 수익이
커진다. 따라서 적립식펀드는 3년 이상의 장기투자로
접근하되 만기를 따로 정해 두고 투자하기보다는 시
장상황을 보면서 환매시점을 결정하는 식으로 유연하
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스템펀드는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지만 그 내부
에서 분할투자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시스템펀
드는 주가 등락에 흔들림 없이 미리 정해진 매매조건
에 따라 기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주가
가 항상 등락하며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익을 더 얻고자 욕심을 내다가 후회하
는 일 따윈 하지 않는다.

가령 주가가 5% 등락할 때마다 매매가 이루어지도
록 정해진 시스템펀드라고 하면 처음엔 투자금액 중
일부분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한 후 나머지 금액은 주
가가 5%씩 추가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식을 매입



하고 반대로 주가가 5%씩 오를 때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조금씩 내다 파는 식이다. 중간에 주식을 내다 파는 것이 다르지만 분할투자를 통해 주가가 쌀 때 더 많이 사고 가격이 오르면 주식비중을 줄인다는 점에서 적립식펀드와 유사한 면이 있다.

이렇듯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이 사고 주가가 오르면 내다 팔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상품 특성상 시스템펀드는 주식이 곧장 올라가는 강한 상승장세보다는 잦은 등락을 보이며 움직이는 박스권 장세에 더 유리해진다. 출렁거림이 많을수록 그만큼 수익을 얻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분할투자를 바탕으로 하기에 주가하락기는 다른 주식형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률이 줄어든다는 점도 특징이다. 물론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시스템펀드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펀드는 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위험을 줄이며 안정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주식시장 조정기를 염두에 두고 눈 여겨 볼 만한 상품이다.

가치주펀드나 배당주펀드도 비교적 주가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 주식투자상품에 해당한다.

가치주펀드의 투자대상은 여러 주식 종목 중 기업의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에 비해 현재의 시장가치 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

식들이다. 가치주펀드는 이들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해 집중 투자하면서 안정적이며 중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주가지수 수준과 관계없이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만큼 주가지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다. 대신에 시장에서 저평가된 우량 종목을 얼마나 발굴해 투자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배당주펀드도 이와 유사하다. 배당주펀드는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즉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들에 주로 투자하는데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들은 대체로 가치주의 특성을 갖는다. 가치주 투자의 실효성은 종종 해외사례로 설명된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이며 주식투자를 통해 세계 제2위의 갑부가 된 워런 버핏의 투자 비결이 바로 가치주 발굴을 통한 장기투자다. 이쯤 되면 가치주 투자의 효율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치주 투자는 단기간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 저평가 종목들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나 배당주 펀드 또한 단기간의 주식시장 상승을 기대한 투자보다는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주요 경제지표

	국내총생산 (GDP)	국민총소득 (GNI)	1인당 GNI	제조업 생산지수	제조업 가동률지수	도소매 판매액지수	총취업자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	광의통화 (M2) (평균)
	10억원		달러	2000=100			1,000명	%	2000=100	10억원
1998	484,103	476,245	7,355	68.3	86.8	80.6	19,938	7.0	97.0	596,168.3
1999	529,500	523,355	9,438	85.4	97.7	91.1	20,291	6.3	97.8	676,674.7
2000	578,665	576,160	10,841	100.0	100.0	100.0	21,156	-4.4	100.0	691,393.5
2001	622,123	621,028	10,162	100.2	95.9	106.6	21,572	4.0	104.1	739,337.0
2002	684,264	685,069	11,493	108.4	99.7	115.4	22,169	3.3	106.9	824,227.8
2003	724,675	725,420	12,720	113.8	99.7	114.2	22,139	3.6	110.7	888,988.6
2004	778,445 p	779,468 p	14,162 p	126.0	102.5	113.2	22,557	3.7	114.7	925,904.0
2003. 9	180,280	180,920	-	112.4	97.3	113.9	22,301	3.3	111.6	891,154.2
10	-	-	-	126.4	109.2	117.6	22,452	3.4	111.7	885,171.7
11	-	-	-	122.0	103.0	116.1	22,425	3.6	111.5	896,674.7
12	201,149	202,153	-	126.4	104.9	121.1	22,096	3.8	112.0	901,818.6
2004. 1	-	-	-	113.4	94.3	115.8	21,936	4.0	112.7	901,048.5
2	-	-	-	120.3	100.7	107.6	22,005	4.2	113.2	906,803.8
3	178,333 p	178,643 p	-	130.1	108.0	116.9	22,371	4.0	114.3	916,675.5
4	-	-	-	126.8	105.4	112.9	22,673	3.7	114.3	918,104.4
5	-	-	-	127.5	104.9	112.6	22,738	3.5	114.2	921,047.9
6	192,159 p	190,851 p	-	127.3	104.5	113.4	22,822	3.4	114.2	925,909.9
7	-	-	-	122.6	100.0	109.9	22,750	3.7	114.9	927,447.0
8	-	-	-	119.5	96.5	106.6	22,382	3.6	115.9	930,254.5
9	196,124 p	196,816 p	-	124.0	98.5	113.0	22,809	3.4	115.9	938,988.9
10	-	-	-	134.0	106.6	114.7	22,901	3.4	115.9	937,308.7
11	-	-	-	134.5	107.2	114.5	22,802	3.5	115.2	940,819.9
12	211,828 p	213,157 p	-	132.4	103.6	121.0	22,495	3.8	115.4	946,438.9
2005. 1	-	-	-	130.0	102.6	112.4	22,078	4.2	116.2	948,511.9
2	-	-	-	110.7	86.7	105.9	22,086	4.3	116.9	955,165.0
3	183,770 p	184,048 p	-	136.1	108.4	118.5	22,576	4.1	117.8	965,699.6
4	-	-	-	131.5	104.6	114.4	22,934	3.8	117.9	968,730.0
5	-	-	-	132.7	103.8	116.8	23,199	3.5	117.7	971,942.6
6	198,490 p	196,446 p	-	132.5	103.4	116.6	23,246	3.6	117.3	981,382.2
7	-	-	-	131.4 p	101.7 p	113.1 p	23,184	3.7	117.8	991,985.6
8	-	-	-	126.2 p	95.6 p	111.8 p	22,847	3.6	118.2	996,066.5
9	-	-	-	-	-	-	-	-	119.0	-

〈자료 :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2005. 10. 13)〉

	골금리 (익일물)	회사채 수익률	경상수지				자본 수지	외 환 보유액	수출	수입	대미 환율			
			상품	서비스	소득									
						100만달러						100만달러	100만달러	100만달러
%		100만달러				100만달러	100만달러	100만달러	100만달러	₩/\$				
1998	15.1	15.1	40,371.2	41,665.0	1,024.1	-5,638.3	-3,196.7	52,040.8	132,313	93,282	1,207.8			
1999	4.9	8.9	24,521.9	28,463.0	-651.0	-5,159.0	2,040.3	74,054.5	143,686	119,752	1,145.4			
2000	5.1	9.4	12,250.8	16,953.6	-2,847.8	-2,421.3	12,110.0	96,198.1	172,268	160,481	1,259.7			
2001	4.7	7.1	8,032.6	13,488.0	-3,872.1	-1,198.1	-3,390.8	102,821.4	150,439	141,098	1,326.1			
2002	4.2	6.6	5,393.9	14,777.4	-8,197.5	432.3	6,251.5	121,412.5	162,471	152,126	1,200.4			
2003	4.0	5.4	11,949.5	21,952.0	-7,424.2	326.3	13,909.4	155,352.4	193,817	178,827	1,197.8			
2004	3.6	4.7	27,612.8 p	38,160.7 p	-8,768.8 p	724.9 p	8,319.1 p	199,066.1	253,908 p	224,463 p	1,043.8			
2003. 9	3.7	5.2	2,092.4	3,060.7	-655.5	50.1	561.0	141,534.8	17,021	14,531	1,150.2			
10	3.7	5.2	2,518.9	2,985.0	-246.8	15.7	533.9	143,319.5	18,930	16,537	1,177.3			
11	3.8	5.5	2,858.3	2,846.3	-248.3	441.8	4,383.6	150,339.2	18,242	15,761	1,202.6			
12	3.8	5.6	1,886.1	2,442.8	-630.9	305.1	1,279.3	155,352.4	19,729	17,625	1,197.8			
2004. 1	3.8	5.7	2,338.4 p	2,985.5 p	-774.9 p	345.7 p	391.3 p	157,449.6	18,987	16,209	1,173.6			
2	3.8	5.6	2,881.4 p	2,985.1 p	-449.7 p	587.8 p	2,473.4 p	163,007.1	19,137	17,467	1,174.5			
3	3.8	5.4	910.7 p	2,669.5 p	-690.5 p	-726.0 p	593.1 p	163,556.9	21,175	19,120	1,153.6			
4	3.8	5.3	1,142.5 p	3,256.4 p	-392.7 p	-1,448.3 p	979.4 p	163,635.3	21,483	18,830	1,167.7			
5	3.8	5.1	3,708.4 p	3,793.3 p	-228.2 p	294.2 p	-1,671.7 p	166,542.6	20,834	17,895	1,165.7			
6	3.8	4.9	2,179.5 p	3,402.6 p	-922.4 p	-24.4 p	-1,988.9 p	167,029.7	21,657	18,544	1,152.5			
7	3.8	4.8	3,246.6 p	4,293.9 p	-893.6 p	8.6 p	-1,681.7 p	168,006.4	21,004	18,390	1,168.3			
8	3.6	4.4	1,039.0 p	1,840.1 p	-1,094.3 p	285.0 p	810.9 p	170,492.0	19,799	18,124	1,153.8			
9	3.5	4.1	2,812.8 p	3,732.6 p	-915.4 p	233.1 p	-985.5 p	174,448.1	20,831	18,193	1,147.9			
10	3.5	4.0	2,418.6 p	2,839.6 p	536.4 p	151.7 p	-660.9 p	178,388.3	22,663	20,408	1,126.0			
11	3.3	3.9	2,939.7 p	3,536.9 p	-676.4 p	317.6 p	8,214.9 p	192,602.3	23,077	20,312	1,047.9			
12	-3.3	3.7	1,995.2 p	2,825.7 p	-1,194.3 p	699.9 p	1,844.8 p	199,066.1	23,197	20,968	1,043.8			
2005. 1	3.3	4.1	3,866.2 p	4,493.9 p	-874.7 p	496.5 p	-822.5 p	199,699.3	22,456 r	19,416 r	1,026.4			
2	3.3	4.6	969.3 p	1,686.7 p	-1,048.3 p	463.4 p	487.5 p	202,162.4	20,404 r	18,367 r	1,008.1			
3	3.3	4.5	1,114.6 p	3,110.2 p	-1,129.5 p	-723.6 p	3,543.1 p	205,447.3	23,957 r	22,752 r	1,024.3			
4	3.3	4.3	-975.7 p	2,333.4 p	-912.5 p	-2,136.2 p	1,959.8 p	206,376.4	22,876 r	21,215 r	1,002.5			
5	3.3	4.1	1,437.5 p	2,612.5 p	-1,097.2 p	160.0 p	797.9 p	206,100.4	23,130 r	21,128 r	1,002.5			
6	3.3	4.2	2,295.0 p	3,702.3 p	-1,070.0 p	-119.3 p	-1,277.3 p	204,985.9	23,724 r	21,206 r	1,024.4			
7	3.2	4.5	1,382.2 r	3,131.2 r	-1,495.2 r	-62.7 r	-773.6 r	205,684.6	23,248 r	21,427 r	1,028.3			
8	3.2	4.8	-398.4 p	1,710.0 p	-1,856.1 p	-44.0 p	509.4 p	205,712.2	23,391 r	21,483 r	1,031.0			
9			-	-	-	-	-	206,731.2	24,718 p	22,647 p	1,038.0			

주 : p는 잠정치, r은 수정치임.

나라경제 주요 기사 목록

(2004년 11월호~2005년 10월호)

2004년 11월호 (통권 제168호)

[특집] 2005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였나

[탐방]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인터뷰]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이 달의 초점] 기업도시, 바람직한 추진방안은?

[정책해설]

56개 경쟁제한적 규제 폐지·개선 / 김순중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세계 8대 기술강국 견인 / 신준호

석유유통질서 확립 위해 「석유사업법」 개정 / 한진현

[경제동향]

국내경제동향 : 국내경기,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

세계경제동향 : 세계경제, 고유가로 성장세 둔화

2004년 12월호 (통권 제169호)

[특집 1] 수출 2천억달러 달성-의미와 과제

[특집 2] 디지털TV 시대 개막-전망과 과제

[탐방] 농림부 국제농업국

[인터뷰] 박경호 환경부장관

[이 달의 초점] 고유가 시대에 대응한 에너지정책 방향은?

[정책해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시행 / 송재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2004~2008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 권오봉

환경친화적 자치행정 위해 ‘그린시티’ 도입 / 강형신

전력물자·기술수출입제도의 혁신 / 심성근

선진 혈액관리체계 구축 / 배종성

[경제동향 및 이슈]

국내경제동향 : 경기하강 모습 보이는 국내경기

세계경제동향 : 미 달러화 약세로 세계경제 변동 가능성

세계경제이슈 : 중국의 금리인상과 환율제도 변경 가능성

2005년 1월호 (통권 제170호)

[특집] 2005년 국내외 경제전망과 경제운영 방향

[탐방]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인터뷰]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이 달의 초점] 기후변화협약,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정책해설]

한·싱가포르 FTA 타결 / 이윤영

투명·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신호현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 김두한

플랜트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김순철

원양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서정욱

[경제동향 및 이슈]

국내경제동향 : 수출둔화와 내수경기 침체 지속

세계경제동향 : 둔화 예상되는 2005년 세계경제

세계경제이슈 : 달러화 하락의 배경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5년 2월호 (통권 제171호)

[특집] 2005년 경제운영 방향

[탐방] 노동부 고용정책실

[이 달의 초점] ‘made in 개성’,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방안은?

[정책해설]

친환경상품의 구매 활성화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이찬희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행정 추진 / 김성실

정책담당자 칼럼 : EU의 항공자유화와 시사점 / 서정욱

[경제동향 및 이슈]

국내경제동향 : 수출증가세, 완만한 둔화 모습 보여

세계경제동향 : 세계경제, 미국·중국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

세계경제이슈 : 세계적인 주택가격 급등세,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

2005년 3월호 (통권 제172호)

[특집]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탐방]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인터뷰] 최홍건 중소기업특위위원장 위원장

[이 달의 초점] 외국자본, 그 순기능과 역기능-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정책해설]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위한 전략 / 김경중

지자체 고용재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 안세경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개통 / 심성근

[기획기서]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2005년 4월호 (통권 제173호)

[특집] 세계는 지금 FTA 전쟁 중-우리의 선택은?

[탐방] 기획예산처 자원배분총괄단

[인터뷰]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 달의 초점] 고령친화산업 육성,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해설]

쌀 관세화 유예 연장, 농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 김현수

국가균형발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 김재정

IT839 전략의 안정적 추진을 통한 선진한국 건설 / 송유중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기본법’ 안 마련 / 류호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 김진영

[세계경제현장리포트] ASEAN / 이재경

[기획기서]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005년 5월호 (통권 제174호)

[특집]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탐방]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인터뷰] 윤중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이 달의 초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은 무엇인가?

[정책해설]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 김응범

선진통상국가 진입 위한 통상모델 정립 / 윤여권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 김재홍

부품·소재 산업의 신뢰성 향상 지원 / 최남호

물류산업의 선진화 - ‘중합물류기업 인증제’ 도입 / 박무익

[해외시장 리포트] 일본 / 김상관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례1: 타이어 제조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 박도하

[기획기사] 산업재해 예방

2005년 6월호 (통권 제175호)

[특집] 21세기 일류해양국가를 향하여

[탐방] 재정경제부 국고국

[이 달의 초점] 국민연금 개혁, 바람직한 방안은?

[경제정책해설]

2005 APEC정상회의-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 / 우경하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사업 관련 '특별법' 마련 / 김진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도입 / 정민오

제2차 편익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 안규환

전략물자 수출 자율통제 지원방안 / 심성근

정책담당자 칼럼: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해질 것 / 하중범

[해외시장 리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 이종건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례2: 대형할인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 / 박도하

환경분쟁 조정사례1: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 / 김상호

[기획기사] 전자민원 G4C 시스템과 2-1-5-0 시스템

2005년 7월호 (통권 제176호)

[특집] BTL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탐방]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실

[인터뷰]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이 달의 초점] 의료서비스 육성, 바람직한 방안은?

[경제정책해설]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 / 이원식

우주국가의 토대 마련-「우주개발진흥법」 제정 / 최은철
'기업 낚살리기' 5대 과제 추진 / 김종철

저임금 근로자 보호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 박형정

온실가스 감축 위한 제도적 노력 강화 / 박흥영

[해외시장리포트] 러시아 / 김승철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례3: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 박도하

환경분쟁 조정사례2: 공장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로 인한 인쇄회로
기판 부식피해 / 김상호

[기획기사] BTL(Build-Transfer-Lease)사업

2005년 8월호 (통권 제177호)

[특집] 하반기 경제 운용

[탐방]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인터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 달의 초점] 지방자치제 10년, 바람직한 정착 방안은?

[경제정책해설]

신용보증제도 개편 / 추경호

쌀 관세화 유예 연장 / 정일정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시장질서 창출 / 채희봉
법정부 차원의 '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대책' 마련 / 이완영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제정 / 안세경

정책담당자 칼럼: 한·중 과학기술 협력 강화해야 / 최광학

[해외시장리포트] 중국 / 이효수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례4: 학습자료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박도하

환경분쟁 조정사례3: 등유 유출로 인한 낚시터 물고기 피해 / 김상호

금융분쟁 조정사례1: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회원의 책임 여부 / 정준아

[기획기사]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2005년 9월호 (통권 제178호)

[특집] 여성경제활동인구 1천만명 시대

[탐방] 환경부 환경정책실

[인터뷰]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이 달의 초점] 위안화 절상,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경제정책해설]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 남봉현

이공계 대학 융합형 소양교육 지원 / 이종진

WTO/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 / 이충원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 안중운

[해외시장리포트] 체코 / 이규남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례5: 공공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 박도하

환경분쟁 조정사례4: 철도운행으로 인한 매연·분진 피해농가에 첫 배상 결정 / 김상호

금융분쟁 조정사례2: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 여부 / 정준아

[기획기사] 여성인력개발 지원제도

2005년 10월호 (통권 제179호)

[특집] 과학기술발전이 가져올 미래사회

[탐방]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인터뷰]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이 달의 초점] 高유가 파고 어떻게 넘을 것인가

[경제정책해설]

8·31 부동산 종합대책 / 최원욱

2005년도 세계개편안 / 변상구

사회적 의제의 선제 발굴 위해 '정보의제관리 시스템' 시행 / 진양현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 정책 / 김동수

친환경농업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정황근

외국인력 활용의 새로운 전기 마련 / 송문현

SI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 김순중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김진형

[해외시장리포트] 멕시코 / 우재량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례6: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박도하

환경분쟁 조정사례5: 헬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 결정 / 임성재

금융분쟁 조정사례3: 자동차보험에 있어 '운행 중 사고'의 의미 / 김효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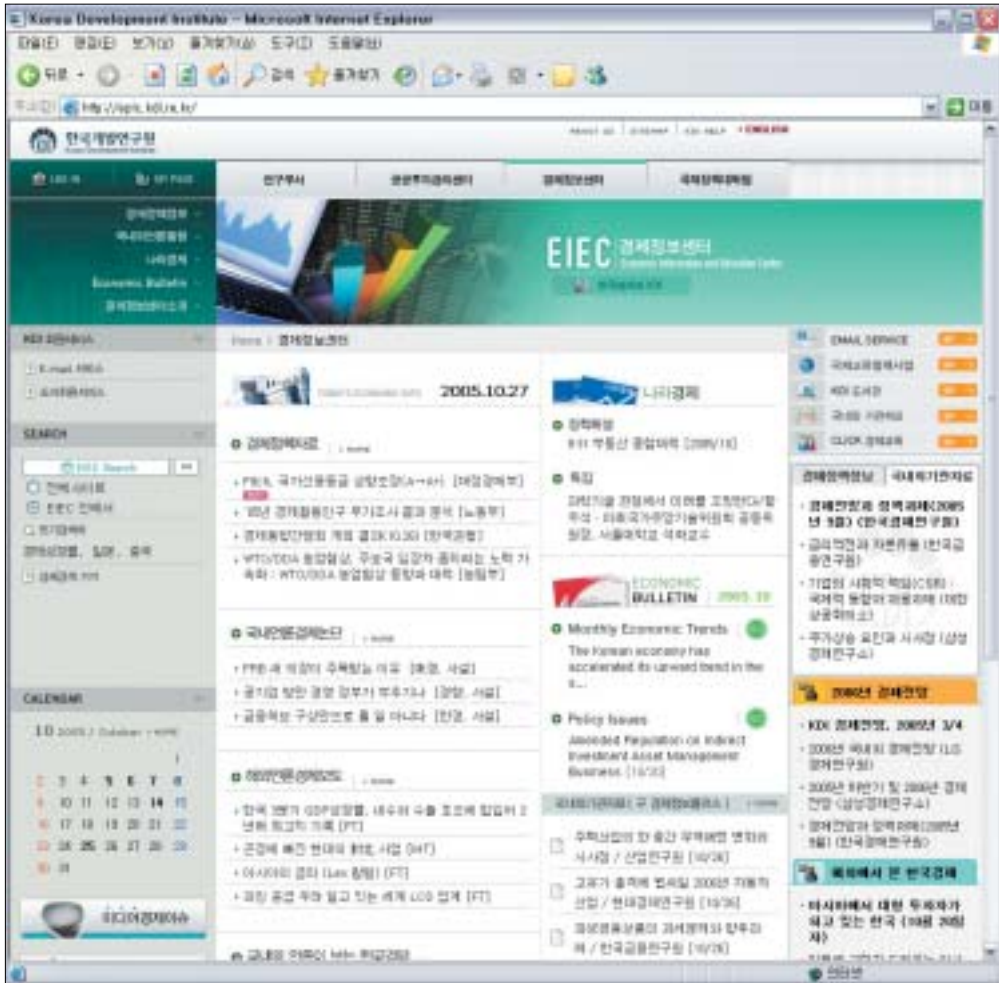
[글로벌 포커스- 규제개혁1]

선진국의 규제개혁 사례와 시사점 / 차문중

OECD 규제개혁 보고서 : 일본 / 구균철

경제정보의 세계로 오십시오

<http://epic.kdi.re.kr>



경제정책정보

경제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발표되는 모든 경제정책자료를 신속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 경제보도

국내 언론의 주요 경제논단과 세계 주요 외신의 경제관련 기사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멀티미디어 자료

경제이슈에 대한 설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국내외 기관자료(Infolink)

검색로봇이 매일 세계 주요 경제관련 웹사이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류합니다.

클릭 경제교육

중·고등학교 사회과 선생님들을 위한 경제관련 자료실입니다.

플러그 휴식 -

11%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무심코 꽂아둔 플러그를 통해 연간
5천억원의 전기가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집의 플러그를 쉬게 하면 전기요금의
11%가 줄어들고, 전기기구의 수명도 길어집니다.
가까이에 있는 에너지부터 쉬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에너지 건강지수가 올라갑니다.

한 2,500원